





교육부장관 서남수

## 발 / 간 / 사

100세 시대를 맞아, 제 2의 인생 도약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길 희망하는 교육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창조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의 추진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3 평생교육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각 생애 단계별로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평생교육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부는 전 국민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13~17)’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애 주기·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도시 등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취업



친화적 평생교육과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성인학습자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2013 평생교육백서’는 그간 추진한 평생교육 정책의 종합안내서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평생교육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현장 전문가, 국민 여러분들이 널리 활용하며 양질의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3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교육부장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기 영화

## 인 / 사 / 말

2013년 새 정부 국정 철학의 화두는 국민행복 실현입니다. 국민행복의 실천 패러다임으로 정부 3.0과 자본주의 4.0이 대두됨에 따라, 인적자원이 국민행복시대의 핵심 자본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행복과 미래의 창조적 변화가 국력으로 선순환될 때 가능합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학습을 통한 선순환의 핵심 기제는 평생교육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안내서로 평생교육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3 평생교육백서」는 지난 2013년 추진되었던 주요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현황, 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추진조직,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의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평생교육 정책을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평생교육 유관부처의 사업 관계자 분들이 백서 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서(白書)는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바다의 등대와 같은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2013년 평생교육백서」가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등대가 되어 한국평생교육의 현재와 미래의 길을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을 알아가고자 하는 국민, 평생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 평생교육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 「2013년 평생교육백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생활활동으로써 평생교육의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행복시대가 건설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2013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위하여 애쓰신 평생교육 정책 관계자 여러분, 편집위원, 집필위원들, 기획 실무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기영하







#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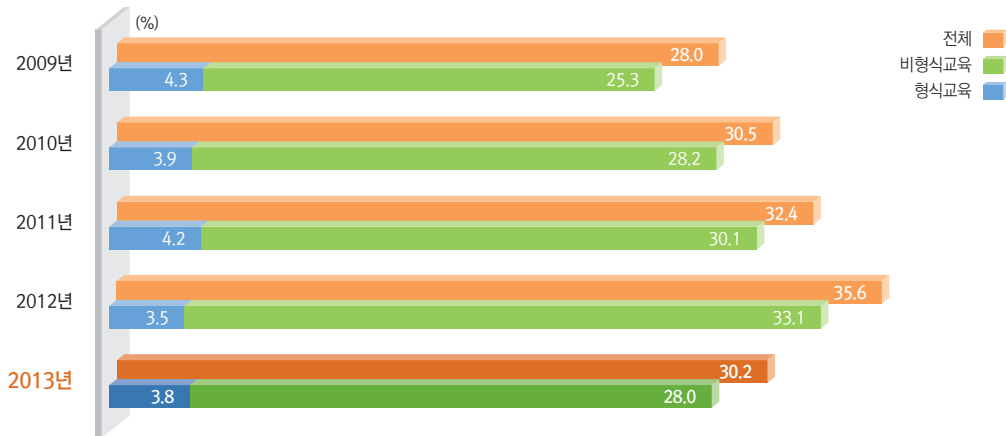
## NO.1 평생교육 참여

**평생학습하는 국민이 행복합니다.**

- 우리나라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30.2% -

### ▶ 평생교육 참여 현황

#### •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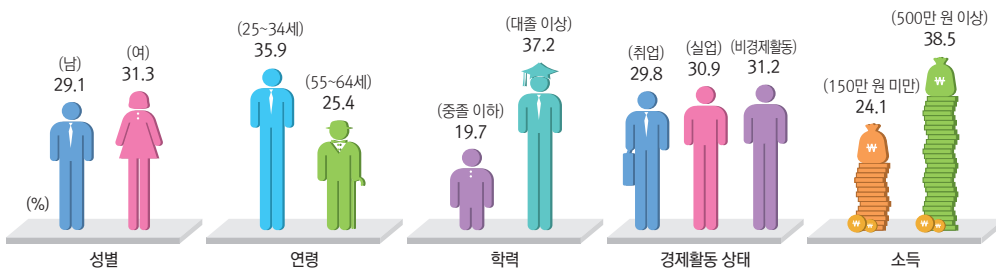


※ 2013년은 통계조사의 규모와 방법의 변화에 따라 2012년 대비 조사대상의 참여가구수와 가구원이 3배 증가함

※ 평생학습 참여율 =  $\frac{\text{형식교육 참여자} + \text{비형식교육 참여자} - \text{동시참여자}}{\text{만25} \sim \text{64세 성인}} \times 1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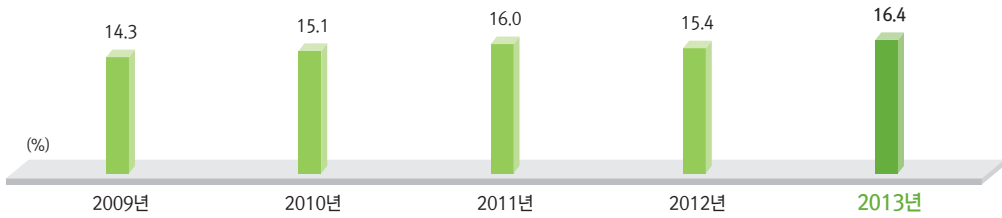
#### • 개인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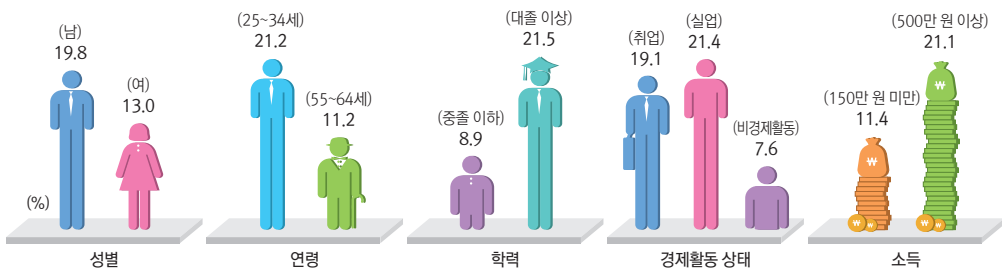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연도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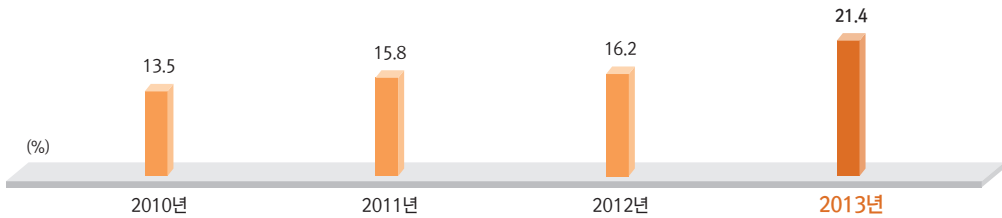


• 개인 특성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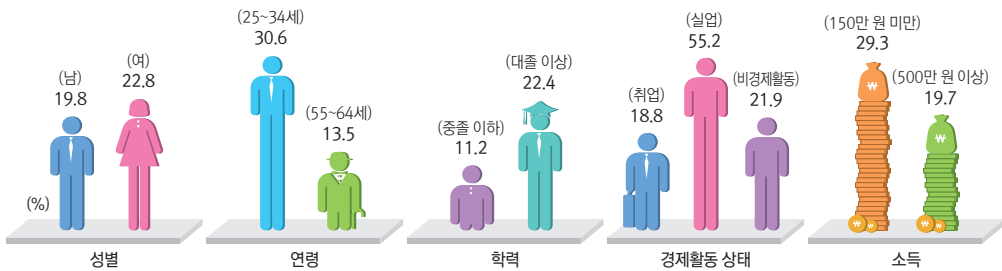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연도별 자격증 취득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 개인 특성별 자격증 취득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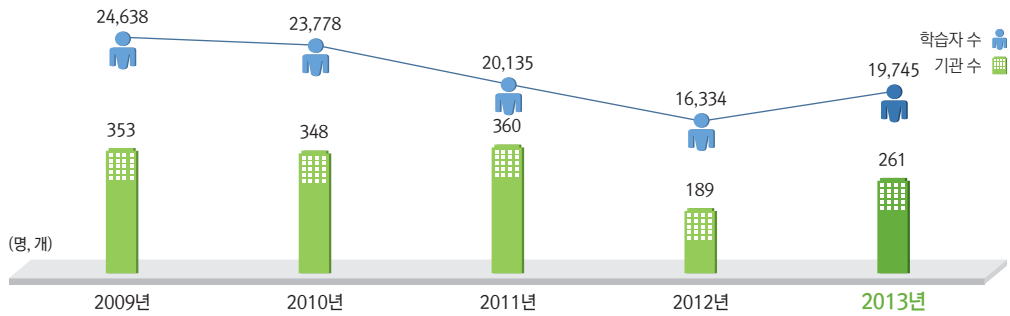


##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13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수 19,745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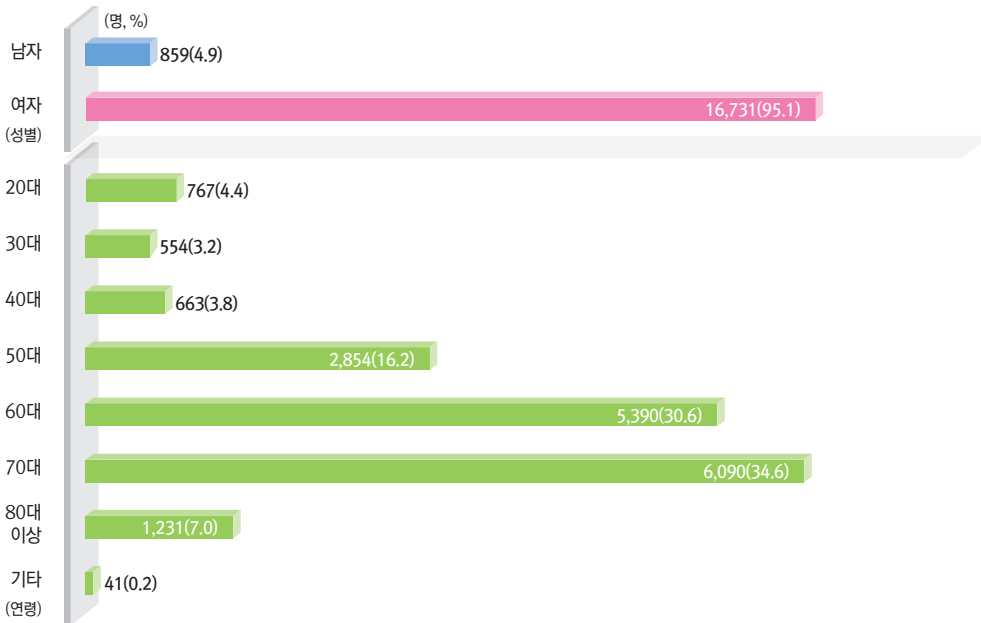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습자 현황

#### 연도별 기관 및 학습자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 개인 특성별 학습자 현황



※ 중복 수강 학습자 제외(20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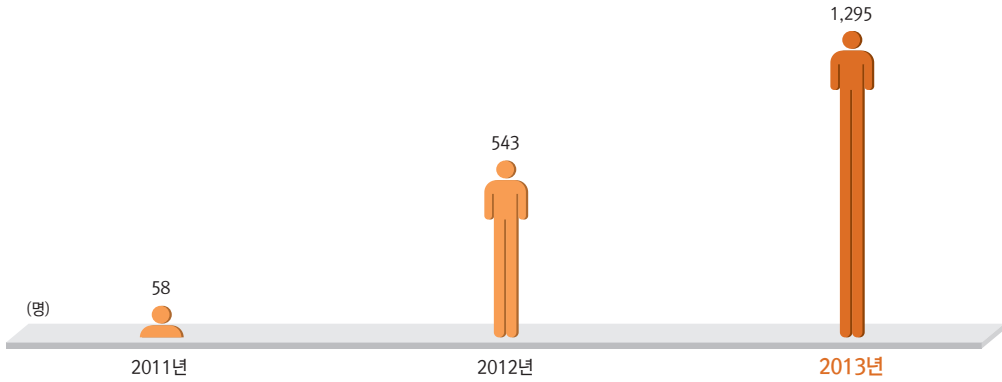
※ 기타: 다문화 가정 자녀 등(10대), 연령 확인 불가 사항 포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설보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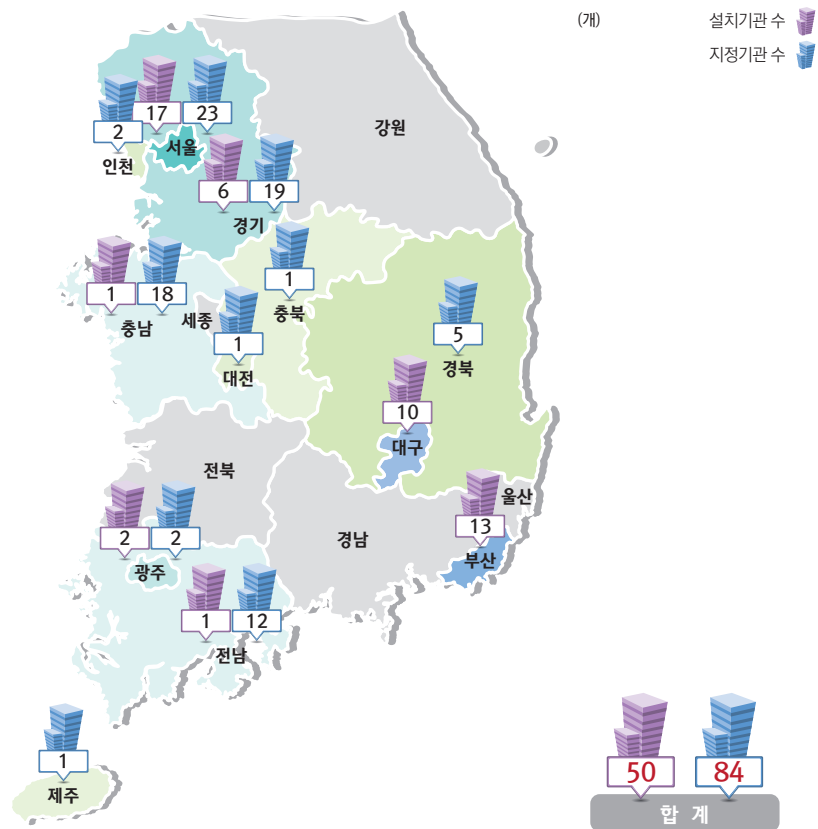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체제 현황

- 연도별 학력인정자 수(누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기관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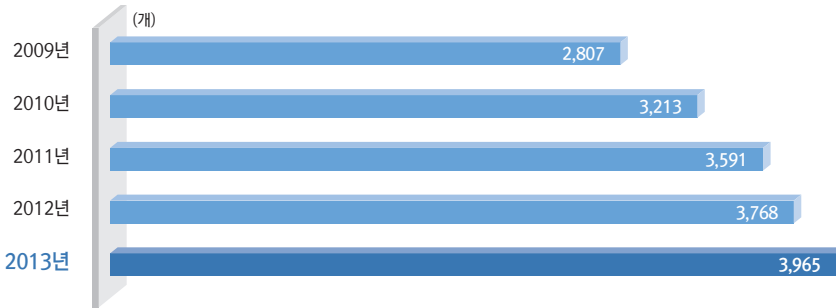
## NO.2 평생교육 인프라

### 평생교육이 가까워집니다.

- 전국 평생교육기관 3,965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80,84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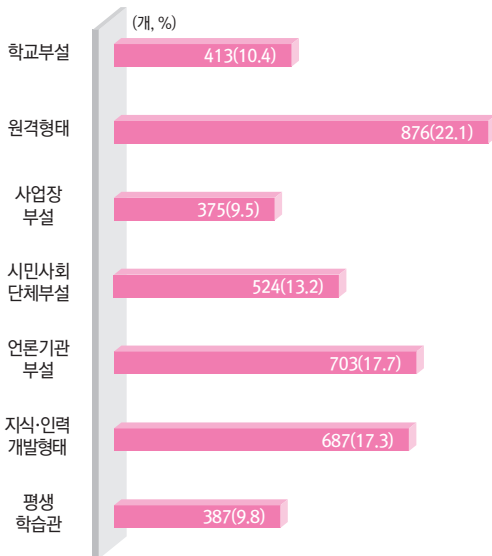
#### ▶ 평생교육기관 현황

- 연도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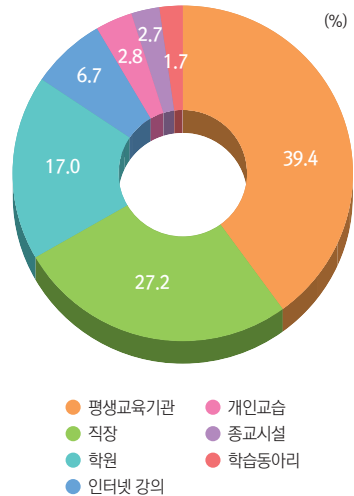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현황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 평생교육기관별 학습자 참여 현황

- 학습자의 비형식교육 참여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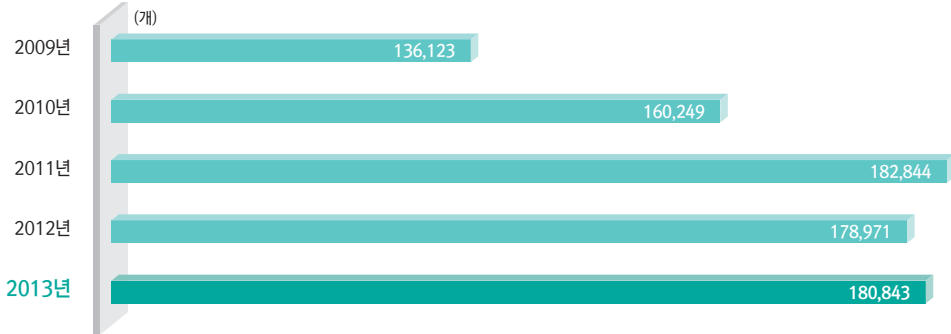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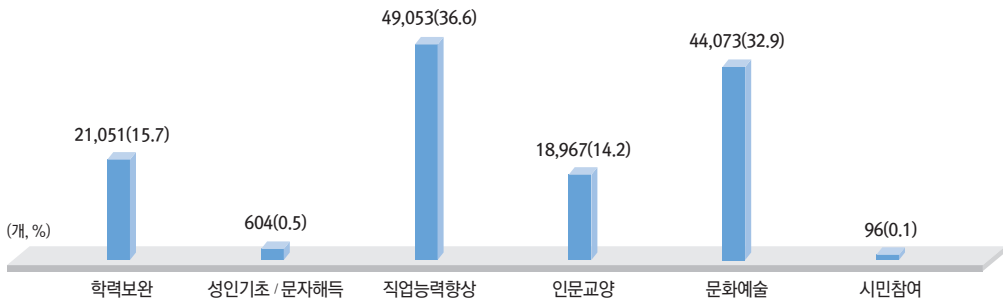
###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연도별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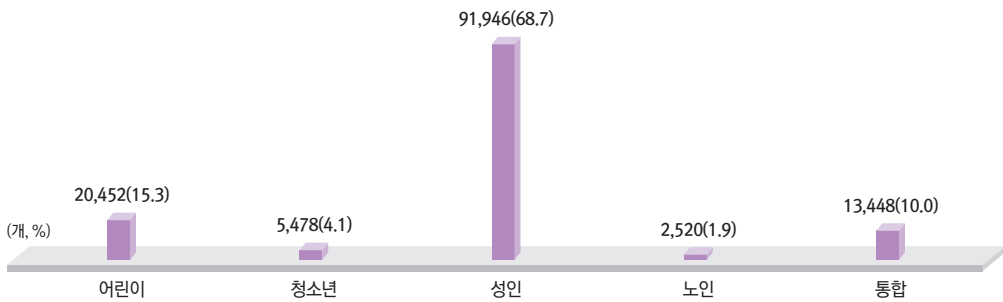
####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 1개월 이상 프로그램만 해당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별 현황



※ 1개월 이상 프로그램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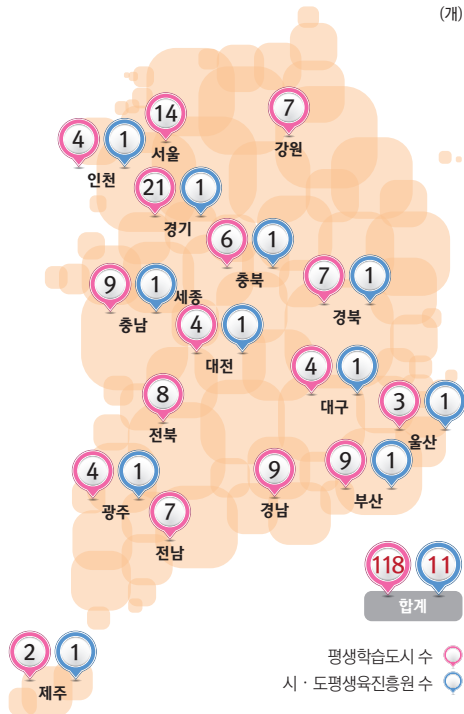
※ 통합: 연령에 따른 대상 구분없이 프로그램 대상을 통합하여 운영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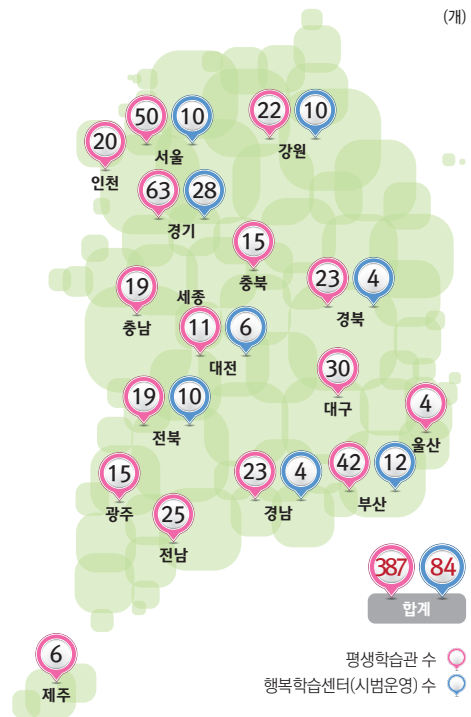


**평생학습을 통하여 행복 지역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18개 평생학습도시 조성, 11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



지역별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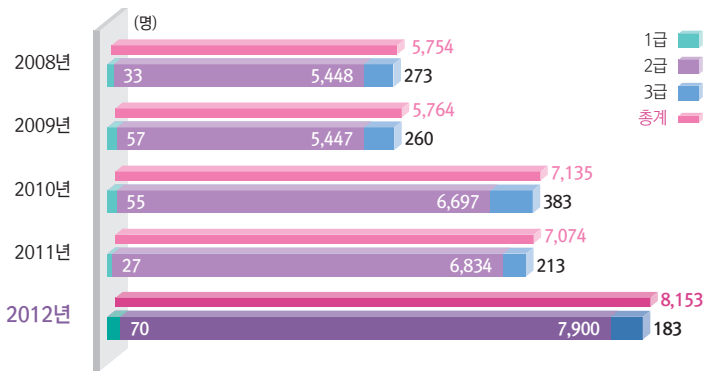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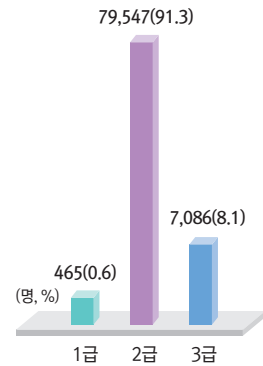
- 평생교육사 87,098명 양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배치율 69.7% -

#### ▶ 평생교육사 현황

• 연도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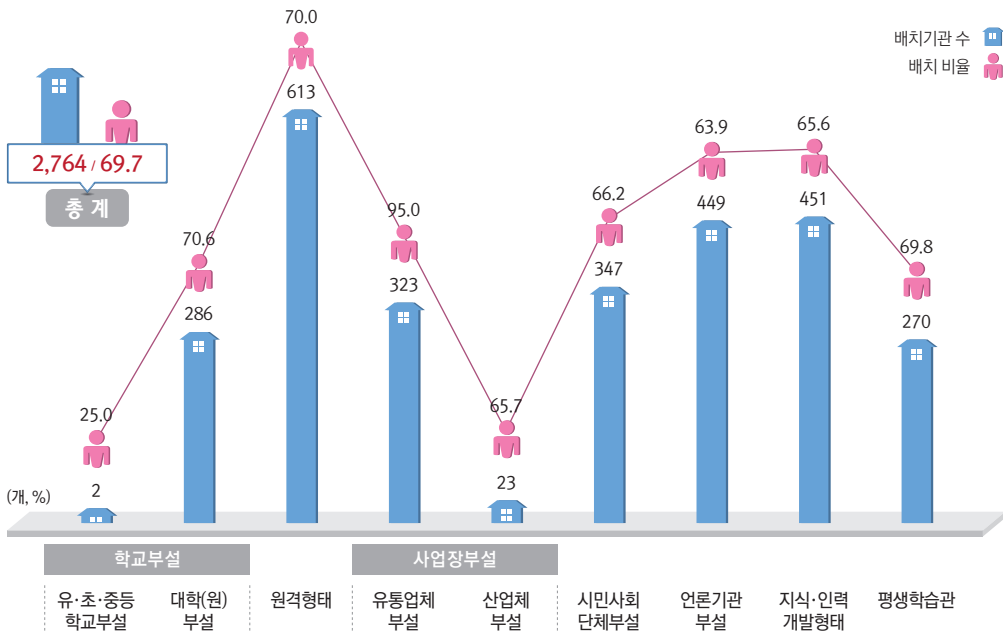


• 자격증 급수별 총계(누적 수)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수 및 비율



※ 배치 기관 수 및 비율: 각 기관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총수 대비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수 및 비율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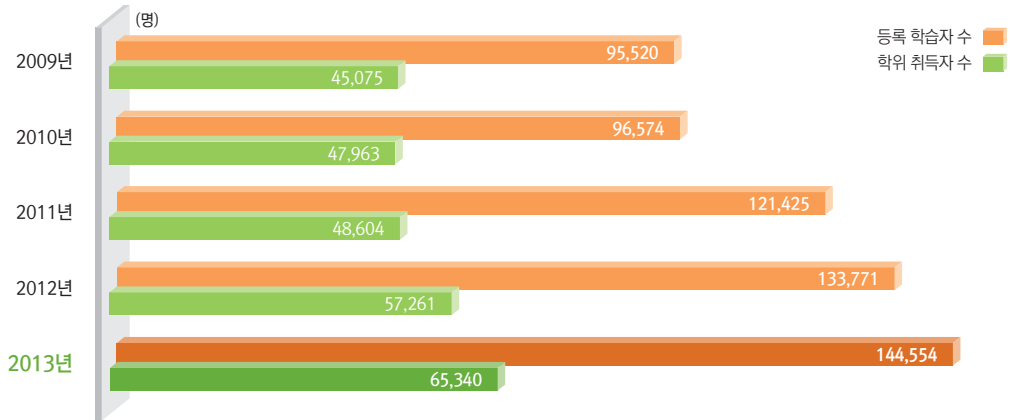
### NO.3 평생교육 결과 활용

#### 평생교육으로 제2의 인생이 열립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 65,340명,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 961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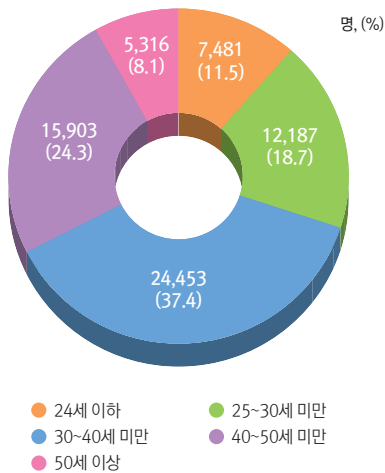
####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현황

• 연도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및 학위 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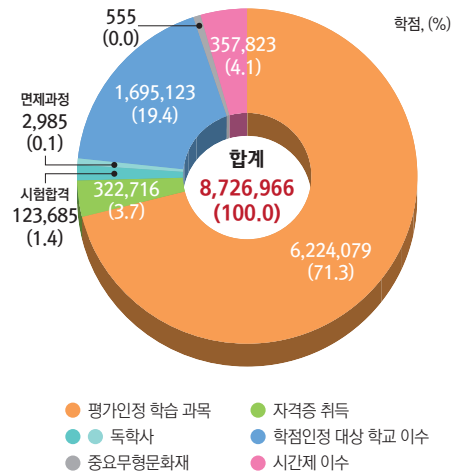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DB.

• 연령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DB.

•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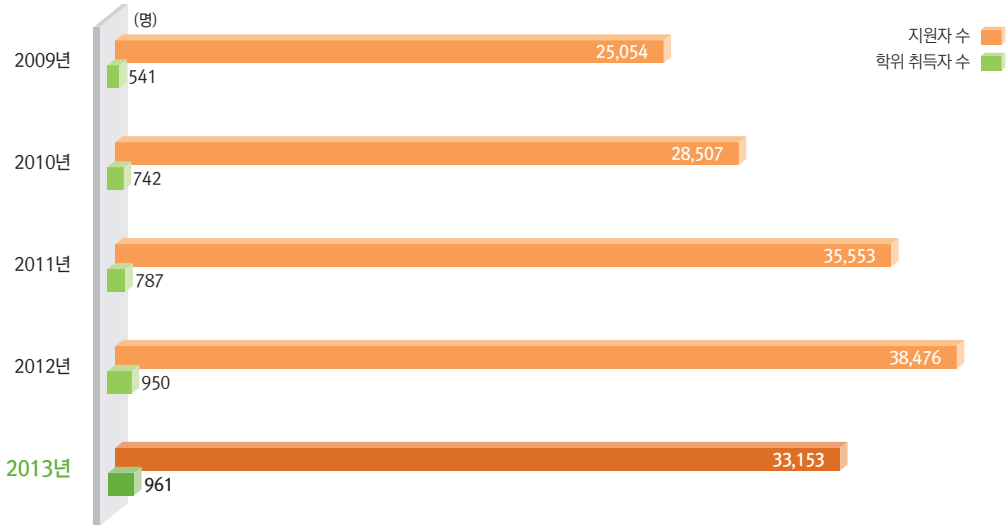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DB.



###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 취득 현황

- 연도별 독학학위제 지원자 및 학위 취득자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독학학위정보시스템 DB.

- 연령별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현황



※ 학적보유자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를 포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독학학위정보시스템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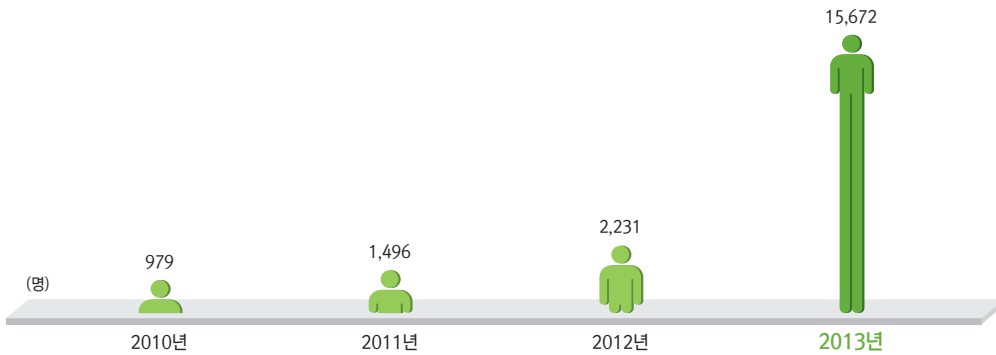


### 평생교육의 활용처가 다양해집니다.

- 2013년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개설 수 15,672건, 등록 학습이력 건 수 49,341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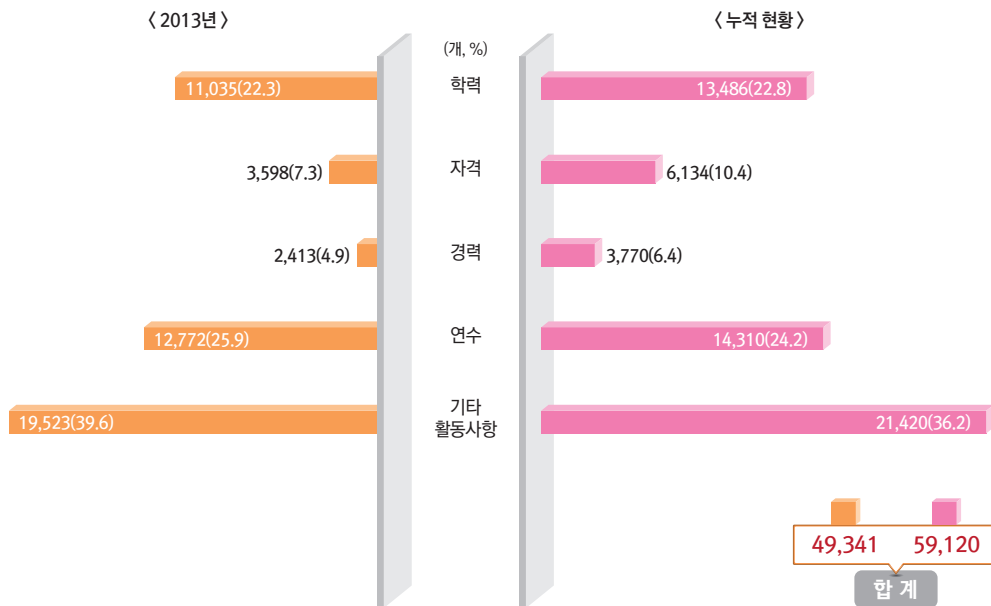
#### ▶ 학습계좌 개설 현황

- 연도별 학습계좌 개설자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 학습계좌 등록 학습이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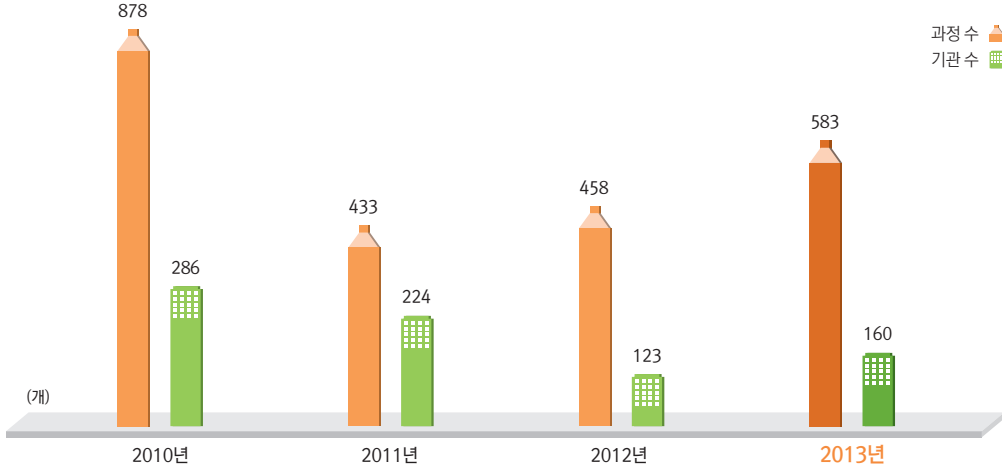


※ 기타 활동사항에는 학부모참여활동, 외국어, 간행물, 특허, 수상실적, 봉사활동 실적, 독서활동, 기타 개인활동을 포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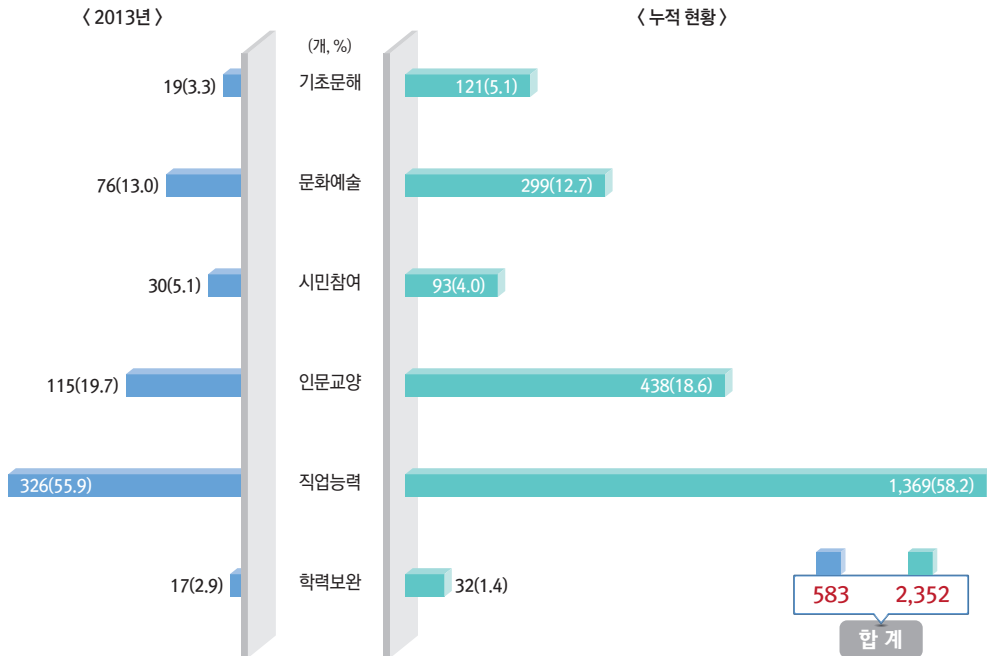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 연도별 평가인정 기관 및 학습과정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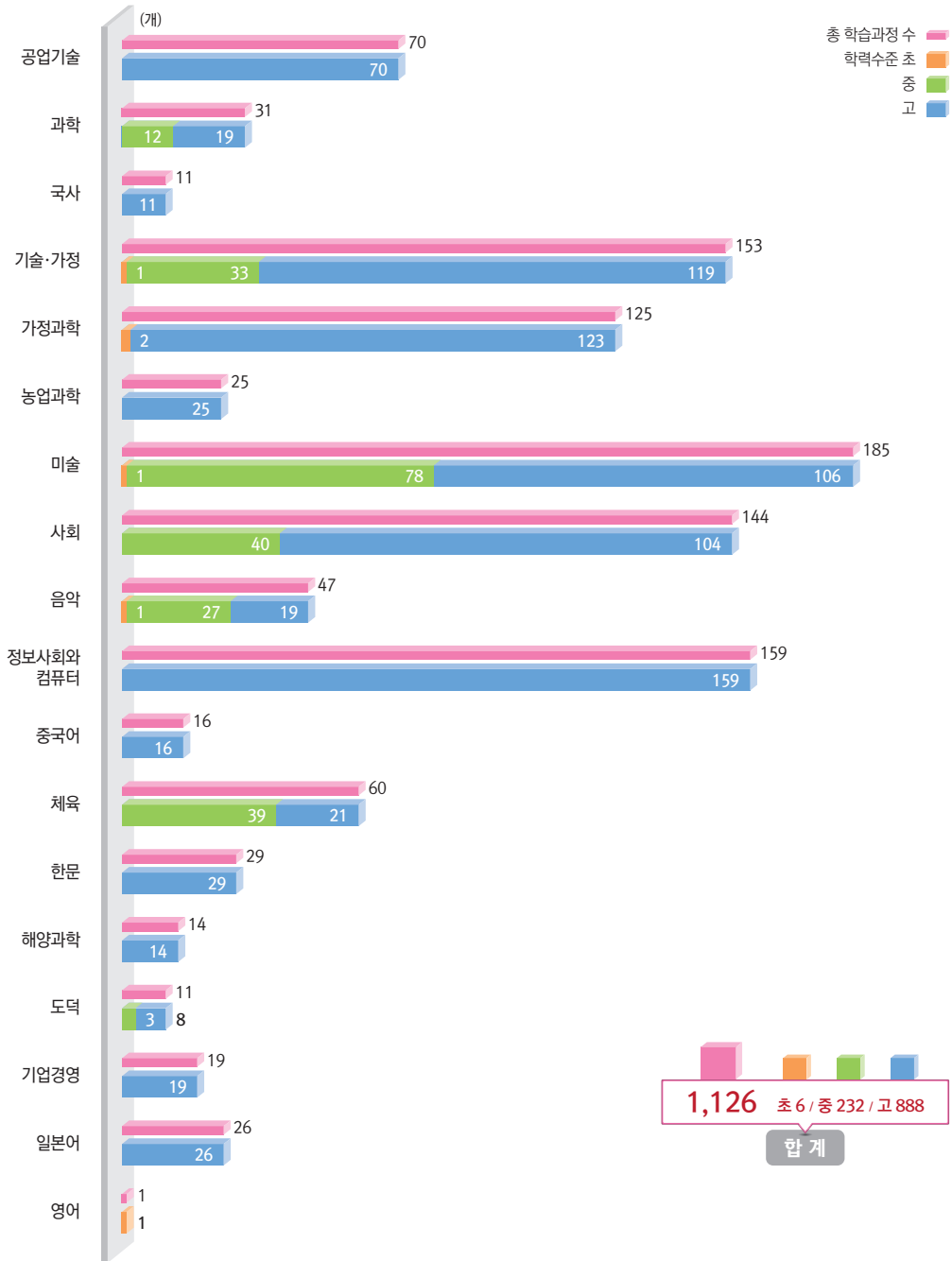
- 영역별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초·중·고 학력별 검정고시 연계 과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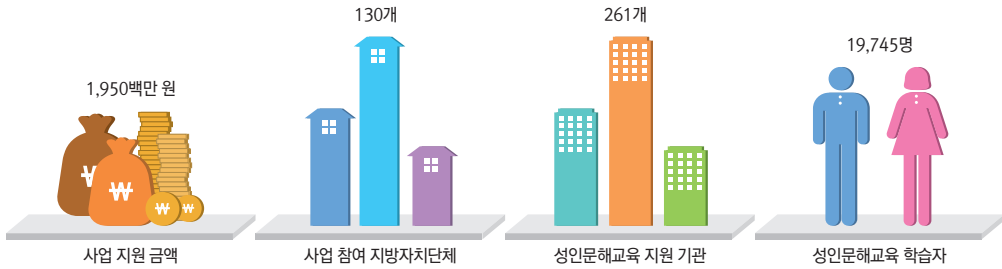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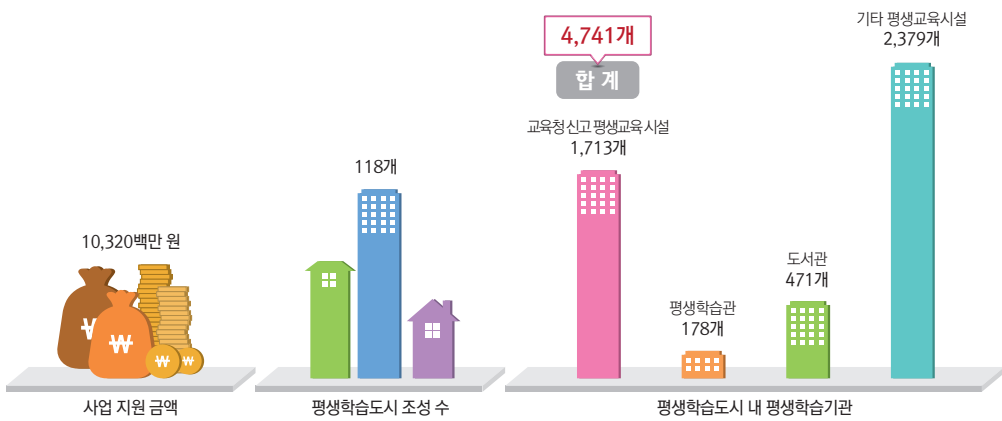


## NO.4 평생교육 정책 사업 Fact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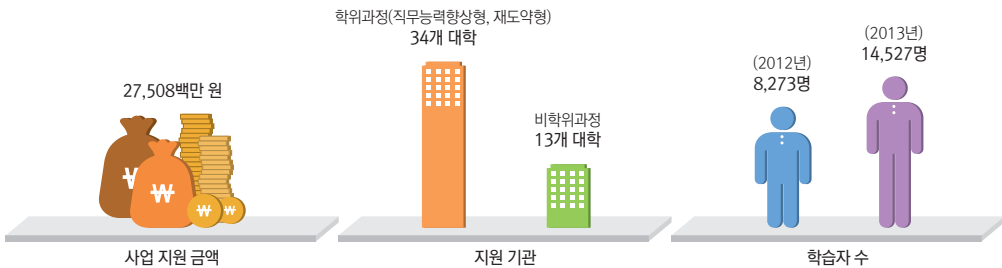
###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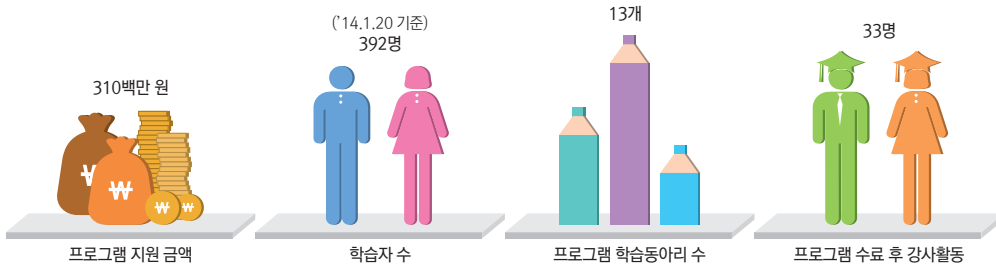


###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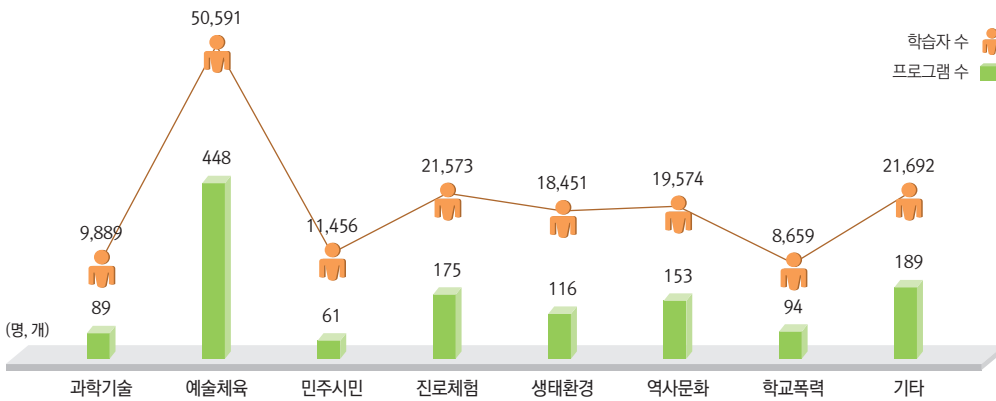


다문화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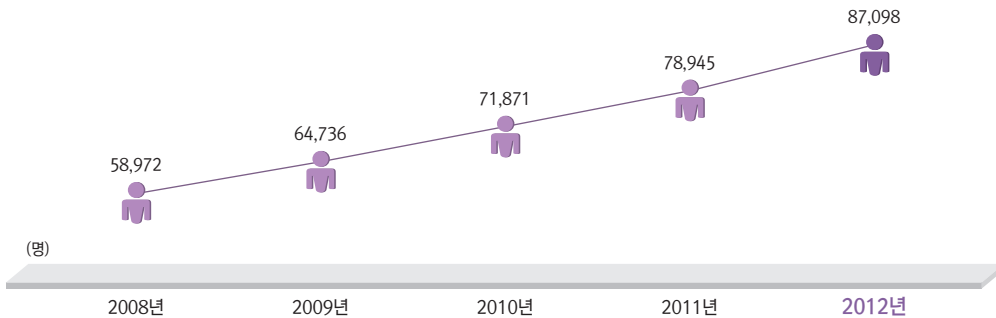
프로그램 유형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



※ 2013년 가사토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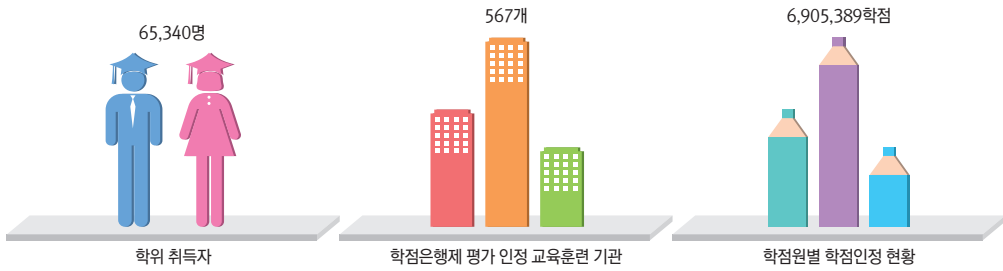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배출 현황(누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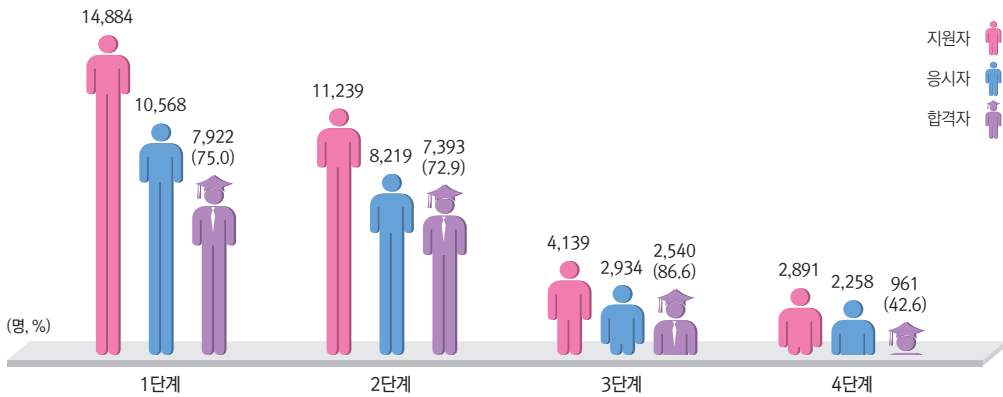


### ▶ 학점은행제



### ▶ 독학학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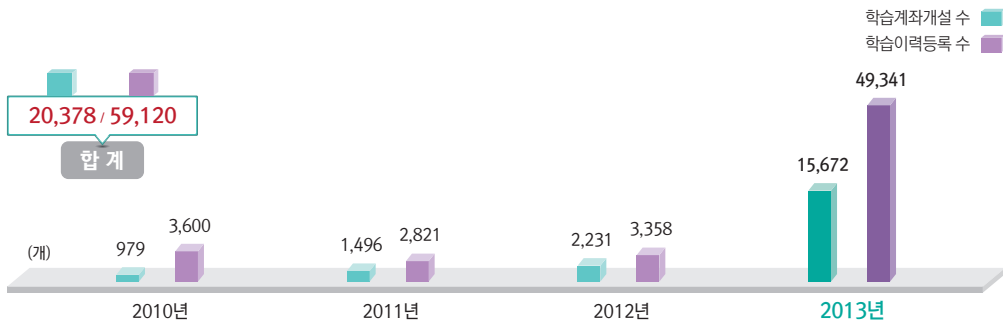
- 2013년 학위시험 단계별 응시자 및 합격자



※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임

### ▶ 평생학습계좌제

-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 현황





# 한눈에 보는 평생교육 역사

	1980년대 사회교육 정책 추진	1990년대 평생교육 개념 도입
<b>시대적 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진흥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규정</li> <li>▶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정책 사업 추진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li> </ul>
<b>평생교육 행정조직</b>	<p>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교부</li> </ul> <p>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년 사회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 업무 담당</li> <li>▶ 1986년 사회국제교육국으로 명칭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li> </ul>
<b>평생교육 전담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독학학위제 학위검정부 설치</li> <li>▶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사업 개시 (한국교육개발원)</li> </ul>
<b>평생교육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명문화</li> <li>▶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공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 교육부 장관에게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할 의무 명시</li> <li>▶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227호) 제정</li> <li>▶ 199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75호) 제정</li> <li>▶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li> </ul>
<b>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평생교육종합계획 수립</li> </ul>
<b>주요 정책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li> <li>▶ 대학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설치</li> <li>▶ 학교와 연계된 지역사회교육 확대</li> <li>▶ 언론사 및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 등 민간 평생교육기관 확대</li> <li>▶ 사내대학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독학학위제 운영 시작</li> <li>▶ 1997년 평생교육백서 발간 시작</li> <li>▶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 개시</li> </ul>



2000년 ~ 2007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대두

- ▶ 중앙 및 지역 단위 평생교육지원체제 기반 마련
-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본격화
- ▶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문화 관련 사업 시작

-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

- ▶ 2001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04년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명칭 변경
- ▶ 2005년 평생학습국으로 명칭 변경

- ▶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 내 평생교육센터 설치
- ▶ 2000년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 ▶ 2002년~2006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제1,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2000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 제도 시행
- ▶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작
- ▶ 2001년 제1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개최
- ▶ 2004년 제1회 평생학습대상 개최
- ▶ 200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

2008년 ~ 현재

평생교육정책의 전환

-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임무 부여
- ▶ 중앙-광역-기초 지역 단위 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
- ▶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

- ▶ 2008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 2011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 2012년 경기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 2013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 2009년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평생학습계좌제 제도 기반 마련

- ▶ 2008년~2012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2013년~2017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2008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작
- ▶ 2010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작
- ▶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 2012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 시작



사회교육 정책 추진  
(1980년대)

평생교육 개념 도입  
(1990년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 1990
  - 독학학위제 학위검정부 설치

평생교육법

- 1980
  -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헌법에 명문화
- 1982
  - 「사회교육법」 제정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주요  
정책사업

- 1980년대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 대학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설치
  - 학교와 연계된 지역사회교육 확대
  - 민간 평생교육기관 확대
  - 사내대학 설치
- 1990
  - 독학학위제 운영 시작





평생교육진흥정책의 대두  
(2000년 ~ 2007년)

평생교육정책의 전환  
(2008년 ~ 현재)

1998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 개시

2000

- 한국교육개발원내 평생교육센터 설치
-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1999

-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2007

-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2011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0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2013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12

- 경기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02 ~ 2006

-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08 ~ 2012

-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3 ~ 2017

-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1997

- 평생교육백서 발간 시작

2000

- 평생교육사 양성·자격 제도 시행

2004

- 제1회 평생학습 대상 개최

2008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시작

2012

-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 시작

1998

- 학점은행제 운영사업 개시

2001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작
- 제1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2006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

2010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작

2000

2008

2011

2012

2013



# 목 차\*



<b>제1부 총론</b>	<b>001</b>
제1장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003
제2장 창조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성과	013
제1절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014
제2절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022
제3절 행복학습센터	029
<b>제2부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b>	<b>037</b>
제1장 평생교육법·추진체제	039
제1절 평생교육법	040
제2절 평생교육추진체제	051
제3절 평생교육기관	062
제2장 평생교육제도	071
제1절 학점은행제	072
제2절 독학학위제	084
제3절 평생학습계좌제	091
제3장 평생교육 전담인력	099
제1절 평생교육사	100
제2절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111

<b>제3부 평생교육 기회 확대</b>	<b>117</b>
제1장 대상별 평생교육 추진 현황	119
제1절 성인문해교육	120
제2절 직업능력개발	132
제3절 다문화 평생교육	139
제4절 여성 평생교육	146
제5절 노인 평생교육	152
제6절 군 평생교육	165
제7절 농·어업인 평생교육	175
제8절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182
제2장 학교평생교육 추진 현황	189
제1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190
제2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99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1
<b>제4부 평생교육의 지역화와 학습문화조성</b>	<b>219</b>
제1장 평생교육의 지역화	221
제1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222
제2절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232
제2장 평생교육 문화 조성	237
제1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238
제2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247
제3절 평생학습동아리	254
제4절 평생교육 국제협력	264
제3장 향후 평생교육정책 전망 및 과제	273

# 표 목 차\*



〈표 1-1-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005
〈표 1-2-1-1〉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015
〈표 1-2-1-2〉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성과 .....	020
〈표 1-2-3-1〉 행복학습센터 조성 시범사업 운영 현황 .....	033
〈표 2-1-1-1〉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특징 및 한계 .....	041
〈표 2-1-1-2〉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2007. 9~2013. 5) .....	042
〈표 2-1-1-3〉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 .....	043
〈표 2-1-1-4〉 평생교육제도와 관련된 법령 분석 .....	047
〈표 2-1-1-5〉 평생교육내용과 관련된 법령 .....	048
〈표 2-1-2-1〉 「평생교육법」에서의 광역 및 교육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 ...	056
〈표 2-1-2-2〉 각 시·도 조례의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진흥원 업무 .....	057
〈표 2-1-2-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현황 및 지원부서 .....	058
〈표 2-1-3-1〉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	063
〈표 2-1-3-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	064
〈표 2-1-3-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	065
〈표 2-1-3-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학습자 수 .....	065
〈표 2-1-3-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	066
〈표 2-1-3-6〉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	067
〈표 2-1-3-7〉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	068
〈표 2-1-3-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학습자 수 .....	068
〈표 2-1-3-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	069
〈표 2-2-1-1〉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	073
〈표 2-2-1-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	075
〈표 2-2-1-3〉 최근 3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	076
〈표 2-2-1-4〉 최근 3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	076
〈표 2-2-1-5〉 최근 3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	077
〈표 2-2-1-6〉 최근 3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	078
〈표 2-2-1-7〉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	079

## 표 목 차\*

〈표 2-2-1-8〉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080
〈표 2-2-2-1〉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084
〈표 2-2-2-2〉	독학학위제 연도별/단계별 시험 실시 현황	086
〈표 2-2-2-3〉	독학학위제 연도별/전공별 학위취득 현황	087
〈표 2-2-2-4〉	독학학위제 정보통신학 시험과목	088
〈표 2-2-2-5〉	응시자격 완화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089
〈표 2-2-3-1〉	학습계좌 수록 가능 사항	093
〈표 2-2-3-2〉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학습이력 현황	095
〈표 2-2-3-3〉	연도별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096
〈표 2-2-3-4〉	초·중·고 학력별 검정고시 연계 과목 현황	096
〈표 2-3-1-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101
〈표 2-3-1-2〉	교육부 장관 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102
〈표 2-3-1-3〉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 발급 현황	103
〈표 2-3-1-4〉	평생교육사 지역별 발급 현황	104
〈표 2-3-1-5〉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106
〈표 2-3-1-6〉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106
〈표 2-3-2-1〉	연수과정별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 현황	112
〈표 2-3-2-2〉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교과목 재구성	114
〈표 2-3-2-3〉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방법	114
〈표 2-3-2-4〉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평가 기준	114
〈표 2-3-2-5〉	국내외 테마 연수 추진 현황	115
〈표 3-1-1-1〉	2006~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참여 현황	122
〈표 3-1-1-2〉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수준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123
〈표 3-1-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124
〈표 3-1-1-4〉	2012~2013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현황	124
〈표 3-1-1-5〉	2011~2013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체제 현황	126
〈표 3-1-1-6〉	초등·중학 문해교육교원 양성 현황	128
〈표 3-1-1-7〉	2013년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이수 현황	128

# 표 목 차\*



〈표 3-1-2-1〉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및 실시인원 .....	133
〈표 3-1-2-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	134
〈표 3-1-2-3〉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134
〈표 3-1-2-4〉 연도별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인원 .....	135
〈표 3-1-2-5〉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현황 .....	135
〈표 3-1-2-6〉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 참여 기업 현황 .....	136
〈표 3-1-3-1〉 주요 부처별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	142
〈표 3-1-4-1〉 새일센터 주요 사업내용 .....	148
〈표 3-1-4-2〉 경력단절여성 대상 세부 교육과정 .....	149
〈표 3-1-4-3〉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	149
〈표 3-1-5-1〉 노인일자리사업 영역 .....	154
〈표 3-1-5-2〉 보건복지부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	156
〈표 3-1-5-3〉 시·도별 노인교실 수 .....	157
〈표 3-1-5-4〉 대한노인회 시·도별 노인대학 현황 .....	158
〈표 3-1-5-5〉 사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실적 .....	159
〈표 3-1-5-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및 사업단 현황 .....	161
〈표 3-1-5-7〉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연도별 봉사자 수 .....	162
〈표 3-1-5-8〉 지역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자 수 .....	162
〈표 3-1-5-9〉 영역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자 수 .....	162
〈표 3-1-6-1〉 연차별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목표 .....	168
〈표 3-1-6-2〉 군 장병 자격증 보유 현황 .....	168
〈표 3-1-6-3〉 학점은행제 군 관련 학위 취득 현황 .....	169
〈표 3-1-6-4〉 군 교육기관 및 수료자 현황 .....	170
〈표 3-1-6-5〉 군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황 .....	171
〈표 3-1-7-1〉 2013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개요 .....	177
〈표 3-1-7-2〉 전문농업인교육의 세부 내용 .....	178
〈표 3-1-8-1〉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 .....	183
〈표 3-1-8-2〉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 .....	183
〈표 3-1-8-3〉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현황 .....	183

## 표 목 차\*

〈표 3-1-8-4〉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	184
〈표 3-1-8-5〉 지역적응센터의 초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예시 .....	185
〈표 3-2-1-1〉 2000년대 이후 학교(초·중·고)평생교육 추진 경과 .....	191
〈표 3-2-1-2〉 2013년 시·도 교육청 학교(초·중·고)평생교육 추진 현황 .....	192
〈표 3-2-2-1〉 방송고 학생의 연령별 분포 .....	201
〈표 3-2-2-2〉 방송고 학생의 직업별 분포 .....	202
〈표 3-2-2-3〉 방송중 학생의 연령별 분포 .....	202
〈표 3-2-2-4〉 방송중 학생의 직업별 분포 .....	203
〈표 3-2-2-5〉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 운영사업 추진 과제 및 내용 .....	205
〈표 3-2-2-6〉 방송고 종합상담 유형별 현황 .....	207
〈표 3-2-2-7〉 2013년 운영 과목 및 2014년 운영 예정 과목 .....	208
〈표 3-2-2-8〉 인성·진로 교육 프로그램 회차 및 내용 .....	209
〈표 3-2-3-1〉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MOU 체결 현황 .....	216
〈표 4-1-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규모 .....	223
〈표 4-1-1-2〉 기존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사례 .....	224
〈표 4-1-1-3〉 201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주요 사업 내용 .....	226
〈표 4-1-1-4〉 2013년 일반 시·군·구 평생교육 특성화지원사업 주요 내용 .....	229
〈표 4-1-1-5〉 2013년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사업 지원 현황 .....	229
〈표 4-1-1-6〉 시·도별 평생교육 담당부서 및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230
〈표 4-1-2-1〉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선정 기초자치단체 현황 .....	233
〈표 4-1-2-2〉 2013년 기초자치단체 가사토 사업 운영 계획 사례 .....	235
〈표 4-2-1-1〉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	241
〈표 4-2-1-2〉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요 .....	241
〈표 4-2-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	242
〈표 4-2-1-4〉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현황 .....	244
〈표 4-2-2-1〉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영역 및 배점(사업부문) .....	249
〈표 4-2-2-2〉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영역 및 배점(개인부문) .....	249
〈표 4-2-2-3〉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현황(사업부문) .....	250

# 표 목 차\*



〈표 4-2-2-4〉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현황(개인부문) .....	251
〈표 4-2-2-5〉 평생학습대상 연도별 접수 현황 .....	253
〈표 4-2-3-1〉 평생학습도시의 학습동아리 현황 .....	257
〈표 4-2-3-2〉 일반 시·군·구의 학습동아리 현황 .....	257
〈표 4-2-3-3〉 연도별 평생학습도시의 학습동아리 및 참여자 수 증가 현황 .....	259
〈표 4-3-1〉 연도별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자 수 개황 .....	275
〈표 4-3-2〉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	276
〈표 4-3-3〉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	277
〈표 4-3-4〉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	277
〈표 4-3-5〉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 .....	278
〈표 4-3-6〉 경제활동 상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	279
〈표 4-3-7〉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율 .....	279

[그림 1-1-1]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 국정비전, 국정기조, 국정과제 .....	008
[그림 1-1-2] 평생직업교육국 국정과제 체계도 .....	010
[그림 1-2-1-1]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018
[그림 1-2-2-1]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	023
[그림 1-2-2-2] 시·도 평생학습정보망 연계 체제 .....	025
[그림 1-2-2-3]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설계 서비스 .....	026
[그림 1-2-3-1] 행복학습센터 행복학습 프로그램 예시 .....	031
[그림 1-2-3-2] 행복학습센터와 거점지원센터의 역할 .....	032
[그림 2-1-2-1]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052
[그림 2-1-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	053
[그림 2-2-1-1] 학점은행제 학점원 .....	074
[그림 2-2-2-1] 독학학위제 학위취득과정도 .....	085
[그림 2-2-3-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체계도 .....	091
[그림 2-2-3-2]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학습이력 현황 .....	095
[그림 2-3-1-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방향 .....	108
[그림 3-1-1-1] 201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작품 .....	120
[그림 3-1-1-2]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체제 .....	122
[그림 3-1-1-3]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	125
[그림 3-1-3-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139
[그림 3-1-4-1] 2012년, 2013년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	146
[그림 3-1-5-1] 노인교실 프로그램 유형 .....	158
[그림 3-1-5-2]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및 노인학습자 수 추이 .....	158
[그림 3-1-5-3]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	159
[그림 3-1-5-4] 연령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추이 .....	160
[그림 3-1-5-5]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유형별 일자리 창출 실적 .....	161
[그림 3-1-6-1] 군 평생교육 정책 추진도 .....	166
[그림 3-1-6-2] 고졸 미만 병사 검정고시 취득 현황 .....	167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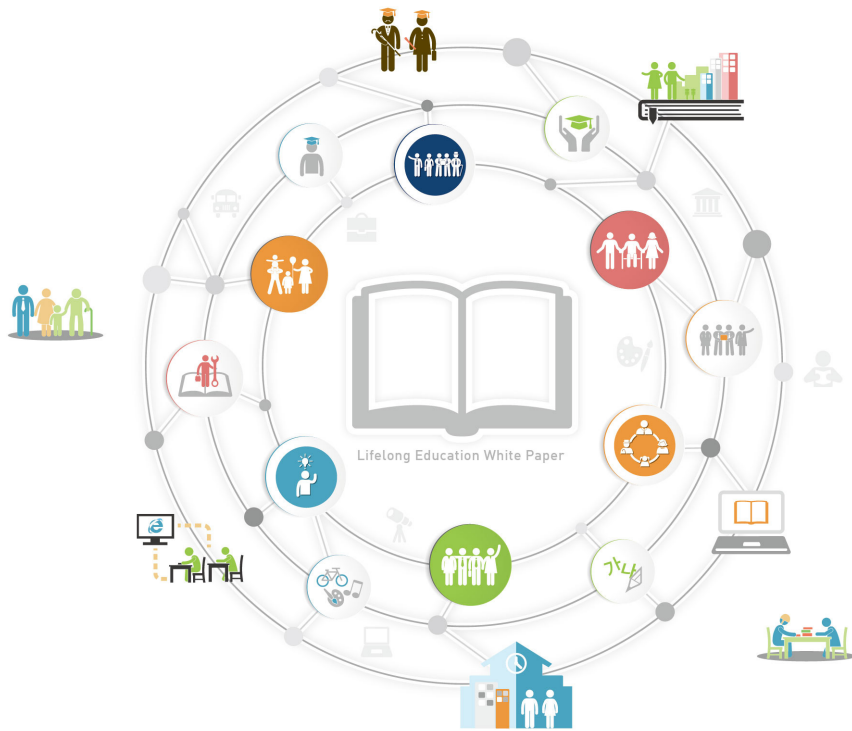
[그림 3-1-7-1]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추진체계 .....	176
[그림 3-2-1-1] 학교평생교육의 성과 .....	196
[그림 3-2-2-1] 방송고 운영사업 추진 체계 .....	200
[그림 3-2-2-2] 최근 10년간 방송고 학생 수 변동 추이 .....	201
[그림 3-2-2-3] 최근 10년간 방송고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	204
[그림 3-2-3-1] 연도별 재학생 수와 등록률 변화 추이(1학기 기준) .....	212
[그림 3-2-3-2] 2013년 방송대 재학생의 연령분포 .....	212
[그림 3-2-3-3] 2013년 방송대 신·편입생의 입학 전 최종학력 분포 .....	213
[그림 3-2-3-4] 최근 방송대 졸업생(2011~2012) 현황 .....	213
[그림 3-2-3-5] 'U-KNOU+스마트 앱' 화면 .....	214
[그림 3-2-3-6] 프라임칼라지 모바일 앱 화면 .....	214
[그림 3-2-3-7] 고졸 선취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 성과 ...	215
[그림 4-1-1-1]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228
[그림 4-1-2-1] 2013년 영역별 가사토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	234
[그림 4-1-2-2] 2013년 대상별 가사토 사업 프로그램 계획 현황 .....	234
[그림 4-1-2-3] 선정 지방자치단체 전국 분포 현황 .....	236
[그림 4-2-1-1]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체계 .....	240



# 제1부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총론

---





제1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





# 제1장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 1. 새 정부의 출범

2013년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에 이어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다. 그간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의 총결산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가 제안되었고, 최종적으로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장차관을 포함한 주요 국정 인사들이 바뀐다. 국정철학, 국정 패러다임, 국정과제가 변한다. 심지어는 즐겨 쓰는 정책 용어도 바뀐다. 대표적으로 경제 분야만 봐도 녹색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사회환경 변화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변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길을 연다.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한다. 백서는 정책의 책무성을 표현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사회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주안점을 두어 향후 2013년 평생교육백서의 각 파트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국정철학의 노출 빈도가 높다. 국가는 국민에게 정책을 펼면서 존재한다. 플라톤의 '공화국' 최고 통치자는 철학자이자 왕으로서 철학으로 다스린다. 국정은 철학이다. 대통령은 프로그램(program)이 아니라 철학(philosophy)을 판다. 프로그램은 현장 사람, 소상공인이 더 잘 만든다. 철학장사는 가치장사이다. 가치를 파는 것이다. 철학(philosophy) - 정책(policy) - 프로그램(program)은 가치의 사슬을 형성한다. 철학과 함께 '패러다임(paradigm)'도 언급되고 있다. 국정 패러다임 변화,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한다. 우리가 철학(philosophy)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제안에 이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국정철학과 과제가 농축되어 있다. 취임사에서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한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의제가 함께 읽힌다. 2013년 3월 16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부 운영의 네 가지 원칙, 즉 ① 국민중심행정, ② 부처 간 칸막이 철폐, ③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 ④ 공직 기강 유지도 숙지할 가치가 충분하다. 국정과제, 취임사, 국정 운영 원칙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으로 국정철학을 풀어본다. 본격적으로 국정철학의 위계부터 살펴본다.

첫째, 국가비전이다. 이번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변화된 국정기조에 기반하여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한다. 둘째, 시대적 소명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 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이루어 행복한 국민에서 행복한 한반도로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이 시대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행복한 국민을 위한 네 가지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복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 사회 분야는 신뢰 공동체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며 전통우방으로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국정운영 기조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사회·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현재	미래
국정중심	국가	국민 개개인
경제성장 모델	선진국 추격형 투입 중심 양적 성장(경제성장률)	세계시장 선도형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고용률)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현재	미래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성장→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물리적 자본 중시(사회 기반 시설) 안전 불감증	(성장→복지) 순환관계 인식 사회적 자본 중시(신뢰 공동체) 안전 제일
정부 운영방식	정부 주도 민간 순응 정책집행 중심 부처 간 칸막이	민관협치 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

## 2.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이념은 국정과제를 규율한다. 취임사에서 나타난 국민행복을 궁극적 가치로 하며, 이를 위해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적도 '행복'이다. 행복은 보편적 가치다. 행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엄숙히 선언한다. 이른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다. 이를 위해 제31조 ⑤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도 '삶의 질의 유지 및 향상에 있다.' 평생교육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 실현에서 존재의의를 찾는다. 국정과제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 행복'과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 제고'는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정부가 즐겨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행복', '창조', '3.0 정부' 못지않게 생태계이다.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이 하나의 국정이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육 - 복지 - 문화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한다. 2013년 교육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고까지 대통령이 언급했다. 교육 - 복지 -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 선순환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사례로서 제18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다뤄 보고자 한다.

먼저 4대 국정기조를 살펴보면, 1. 경제부흥, 2. 국민행복, 3. 문화융성, 4.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중 국정기조 2. 국민행복의 추진전략인 창의교육의 국정과제 중 평생학습정책과 직결되는 것은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의 3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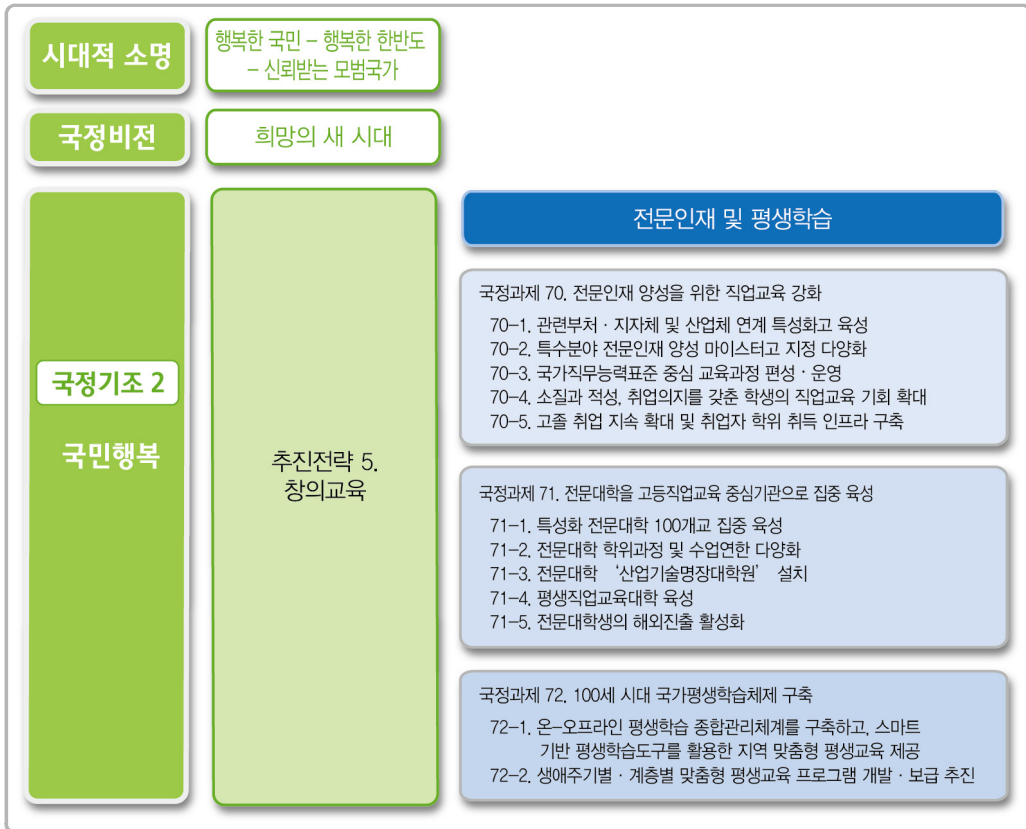
추진전략 5를 달성하기 위한 72번 국정과제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제 구축,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 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40.4%) 이상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의 위계구조에서 본 국가평생교육진흥정책의 족보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70번과 71번도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는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주요 추진 계획은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교육성,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이다. 국정과제 71번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주요 추진계획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다할 때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가 평생학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과제를 '평생교육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해도 지나친 수사는 아니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키워드를 읽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이 보인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재구성.

[그림 1-1-1]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 국정비전, 국정기조, 국정과제

### 3. 새 정부의 평생학습정책

2013년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국정과제 체계도를 보면 단위사업과 국정기조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데 놀란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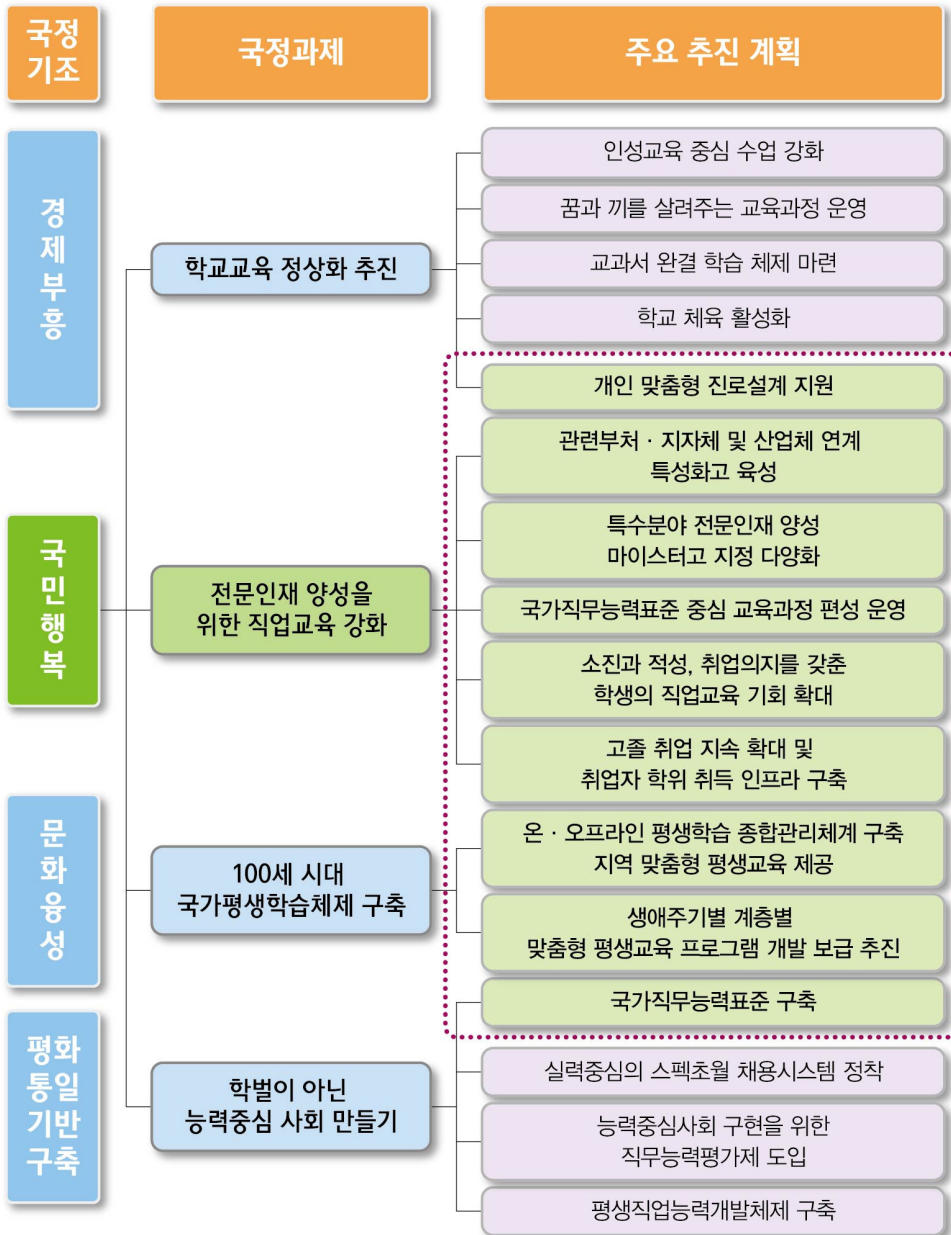
국정철학 및 비전, 국정과제와 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해당부처의 정책으로 좀 더 구체화 한 형태를 취한다. 평생교육백서는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 진로교육 등을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국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30개(주관 11, 협업19) 중 평생직업교육국 소관 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개에 이른다. 다음 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행복학습센터'가 추진되었다.

이 외에도 2013년 9월, 교육부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②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③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④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의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면서 「평생교육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이행 못지않게 향후 평생교육정책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대학평생교육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대거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먼저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에 3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90개 도시가 지정되었는데, 2013년 28개 도시의 추가 지정으로 총 118개 도시가 활동하게 됨으로써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2012년 대비 국고사업비(15억 원 → 103억 원)와 지원 대상수(28개 → 85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2배 이상으로 증액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평생학습도시로서 성장하기를 희망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일반 시·군·구를 위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지원(9개)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 생활에 더욱 밀착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의 시범 운영을 유도하였고, 지원 대상 중 27개 시·군·구가 이에 동참하였다.



## 평생직업교육국 국정과제 체계도



출처: 교육부(2013. 7. 22). 2013년 제1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평생직업교육분과위원회 자료집, p.10.

[그림 1-1-2] 평생직업교육국 국정과제 체계도



끝으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주목받을 만하다. 추경으로 2013년에는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참여 대학들도 크게 늘어났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과 4050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창업 역량 향상을 위한 '비학위 전문가 과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사업의 총 예산은 275억 원으로 이 중 약 210억 원은 학위과정에, 60억 원은 비학위과정에 배정해서 추진되었다. 학위과정 참여대학은 34개 대학, 비학위과정 참여대학은 13개 대학으로 총 47개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3년 34개 대학에서 총 147개의 성인학습자 친화 학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는 약 2,8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면에서나, 참여대학 면에서나, 정책의 비중 면에서나, 대학정책 면에서나, 앞으로도 평생학습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자료.
- 교육부(2013). **2013년 제1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평생직업교육분과위원회 자료집**.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교육부 보도자료(2013. 9.13).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자료.



## 제2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창조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성과

---



- 제1절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 제2절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 제3절 행복학습센터



## 제1절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 1. 사업 개요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으로 전환하도록 대학의 체제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 자유롭게 입학하고, 대학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영 등을 유연화 하는 것이다. 2008년도부터 추진된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로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지만, 2012년부터는 성인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학위과정 입학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참여 대학들이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에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4050세대들의 가장 우선적 요구인 제2의 인생 재도약을 지원하는 비학위 전문과정을 지원하는 ‘비학위 전문가 과정’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 2. 사업 추진 현황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새 정부 들어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1-1〉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08년~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
사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25억 원</li> <li>2009년: 25억 원 + 51억 원 (추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 25억 원</li> <li>2011년: 40.4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55.08억 원</li> </ul>
참여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li> <li>- 중심대학: 7개교</li> <li>- 평생교육원: 45개교, 프로그램 개발 36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li> <li>- 중심대학: 41개교</li> <li>- 평생교육원: 45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2011년: 20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25개교</li> </ul>
사업 구조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평생교육원의 이원 체제로 사업내용별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중심대학</li> <li>평생교육원 활성화</li> </ul>		평생학습중심대학과 평생교육원 통합 운영 ⇒ 유형별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전체 체제개편</li> <li>평생교육원 체제개편</li> </ul>	성인학습자 수요에 따른 트랙별 성인친화형 대학체제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취업후진학형 트랙</li> <li>4050세대 재도약형 트랙</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친화형 중심대학 체제개편 환경 조성</li> <li>-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비정규과정 중심)</li> <li>- 소외계층 및 정책적 대상자 학습비 지원</li>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친화형 체제개편을 위한 대학별 인프라 구축 + 선도모델 창출지원: 학칙개정, 정원조정, 학과개편,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랙유형화 (선취업후진학 + 4050세대 재도약형)</li> <li>- 정규교육으로의 확산 및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li> </ul>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의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대학의 접근성 확대</li> <li>-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li> <li>- 성인친화형 대학구조 개편 인식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개편 확산</li> <li>- RPL(선행학습평가인정) 도입 및 확산</li> <li>-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시간 유도(야간 및 주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과정 중심에서 정규과정으로의 전환 및 확산</li> <li>- 융복합 전공 개설 및 학부 개편 유도</li> </ul>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사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을 지원해 왔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은 평생교육원의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집단에 대한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2010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 점을 보완하여 학습·학력·일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확립할 수 있는 성인친화형



학사운영 개편을 지원하였다. 성인친화형 학사운영 개편은 대학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하여 학칙 개정 및 각종 추진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3년간 지속 지원으로 개선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개편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 사업을 이어가며 성인친화형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까지는 대학 전체 체제개편형과 대학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체제개편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여 특성화 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대학(4개교)과 선도대학 전 단계로서 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20개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2011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40억 4,000만 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24개교(평생학습 선도대학 4교, 평생학습중심대학 12교, 평생교육원 체제개편대학 8교)에 차등 지원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24개교는 성인학습자의 대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전형을 개편하고 평생학습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성인친화형으로 개편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유형의 학습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체제 개편에 치중하여 세부 교과과정이 개편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2012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55억 800만 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25개 대학에 지원되었다. 2012년은 본격적인 대학의 성인친화형 체제개편을 촉구하기 위하여 트랙 중심으로 특성화 모델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즉, 2030세대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형은 재직자 중 기술력 향상이 필요한 자,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자로 재직경험을 보유한 학습자를 학습대상으로 삼고 있다. 4050세대 재도약형은 융·복합 지식을 중심으로 제2, 제3의 학사학위 취득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학습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생 제2막’ 재도약을 준비하는 4050세대를 위한 융·복합 학과 신설 및 창업 특화형 교육과정 제공을 토대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중심의 대학 체제개편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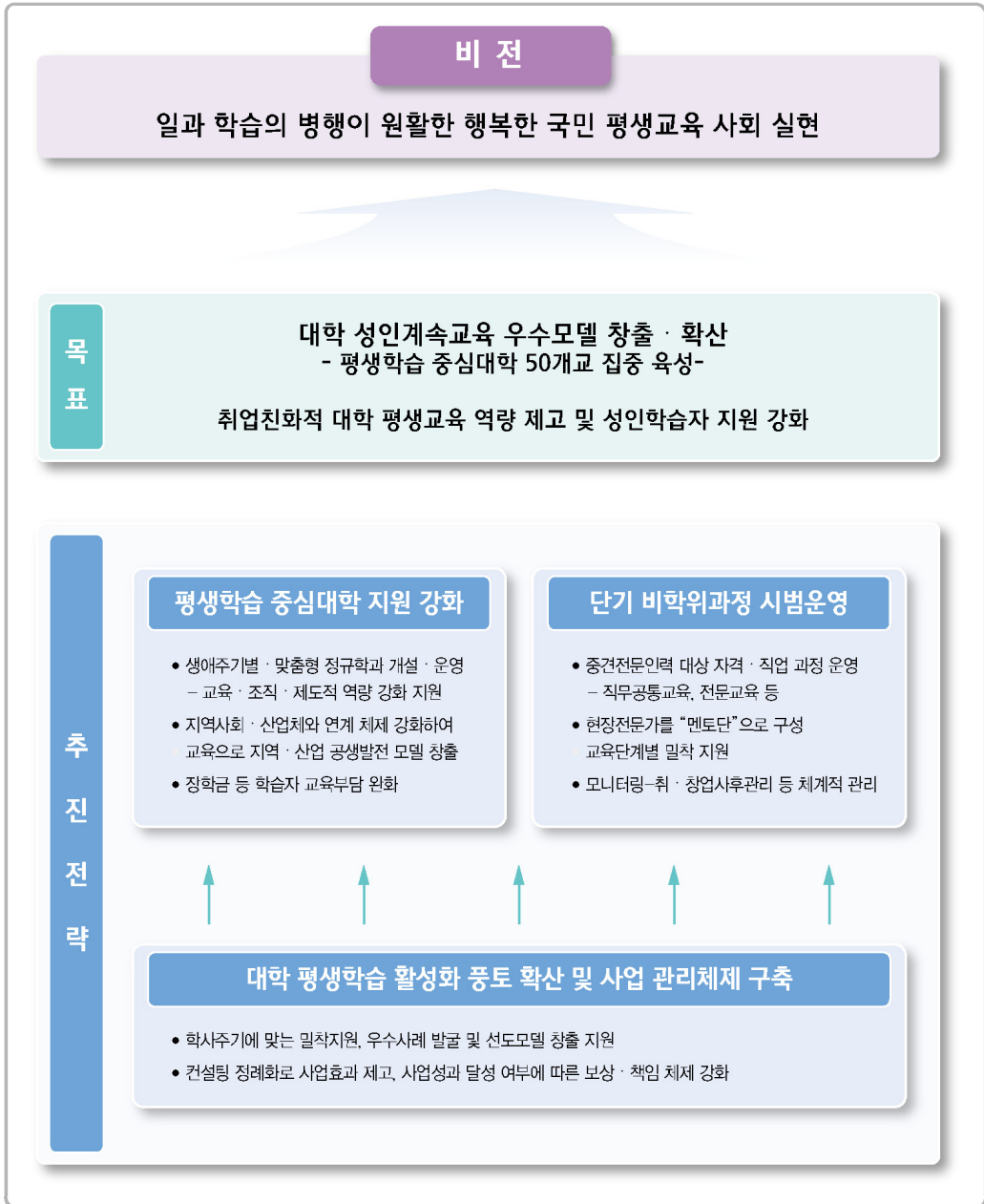
2013년은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엄격한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과 4050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취·창업 역량 향상을 위한 ‘비학위 전문가 과정’ 사업, 2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두 사업 모두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전자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의 개편을, 후자는 대학 전문성을 살린 베이비부머의 비학위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사업의 총 예산은 275억 원으로 이 중 215억 원은 학위과정을 60억 원은 비학위과정으로 추진되었다. 학위과정 34개 대학, 비학위과정 13개 대학으로, 총 47개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학위과정 참여 대학의 경우에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과 및 대학 조직과 제도 개편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에는 34대 대학에서 총 139개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과로 개편함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학위과정 참여 학습자 수는 약 3,209명으로 나타났다.

비학위 과정 사업은 4050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직업이 필요한 성인학습자가 취업·재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2013년도에 처음 추진된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대학 평생교육이 인문교양 위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타 평생교육기관과의 차별성 부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이 가지는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지역사회와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 그 결과, 13개 대학, 총 6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1,709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사업 기본계획.

[그림 1-2-1-1]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3. 사업 운영 성과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의 운영 성과는 무엇보다 이전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대학 체제개편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책 신호 기제로 작동되었다는 점이다. 학위과정의 경우 학교당 2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국고 교부액이 증액됨에 따라 참여대학 수도 25개교에서 47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위과정의 학과 개편 수도 2012년, 69개에서 2013년에는 139개 학과가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되었다. 학과의 개편은 기존의 학령기 학생들 중심의 커리큘럼 및 과정 운영을 성인 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학과의 수를 의미한다. 이 학과들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수는 3,209명이다. 사실상 2012년도부터 학과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인학습자의 충원율이 60%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도에는 충원율이 크게 향상되어 102.5%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새로 추진하게 된 비학위과정 사업의 초점은 4050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창업 역량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여 본 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이 향후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확산되도록 하였다. 총 운영 프로그램 수는 64개이며, 1,709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핵심적 성과 지표로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4050세대 성인학습자의 취·창업 비율은 37.7%로 나타났다.

오랜 동안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을 운영해왔던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맞아 학과개편 및 신규 학과 개설, 성인학습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이 구성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지역의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 공생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있다. 마산대학교의 경우 한약재개발과, 뷰티케어학부, 음료문화학부 등을 성인학습자 별도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과학대는 화훼원예과, 호텔커피카테일과, 자동차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1-2-1-2〉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성과

구분	2012년	2013년
예산	55.08억 원	275.08억 원
대학 수	25개교	47개교
학과 개편 수	69개	139개
비학위 프로그램 수	320개	538개
학위과정 학습자	1,166명	3,209명
비학위과정 학습자	7,107명	11,318명
비학위 전문가 과정 취·창업률**	-	37.7%

\* 2013년 성과는 2014년 3월 20일 기준

\*\* 비학위과정 취창업률은 13개 비학위전문가 과정 운영 대학 64개 프로그램임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2013).

또한 2013년 신규로 도입된 비학위 전문가 과정 사업은 그간 인문교양교육에 치중하였던 대학 평생교육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인학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생 2막을 위한 취·창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창업률 37.7%를 달성하였다는 점이 2013년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평생교육기관과는 달리 대학이 가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산업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산업체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직(창조적 직업)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상대학교의 ‘누비장인 전문가 과정’은 통영의 전통 산업인 누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통 누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대학에서 지원한 사례이다. 건양대학교의 농식품 가공전문가, 천연발효 전문가 등의 과정은 농촌의 제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공동경영체 교육 또는 창업 실무교육을 운영하였다.

#### 4. 향후 과제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특정 평생교육 영역에서만 담당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며,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체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학 내에서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원서비스, 학칙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큰 구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학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전문가의 부재로 동 사업을 통해 대학의 기회요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력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저변에 깔려 있는 추진배경 및 정책이해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적인 전담 추진체계가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교육에 기반하고 있는 학령기 학생들의 「고등교육법」 및 유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제도로 인하여 학습자 입학전형 확대, 성인친화형 학과 신설 등 유연한 학사 제도 운영, 학칙 개정 등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평가의 기본지표인 ‘취업률’의 산정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을 유치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선행경험학습이수인정제(RPL)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이 제외됨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요구하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재학 기간 단축이 사실상 어렵다.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체제 개편을 위해서 전체 교육 정책에서 동일한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시급하다.

## 참고 문헌

- 교육부(2013).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서울: 교육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제2절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 1. 사업 개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주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도 평생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동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결과 활용을 고양하고자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함은 물론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와 같이 대안적 학위취득제도를 운영하여 기존의 대학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한 방식의 학습경로를 제공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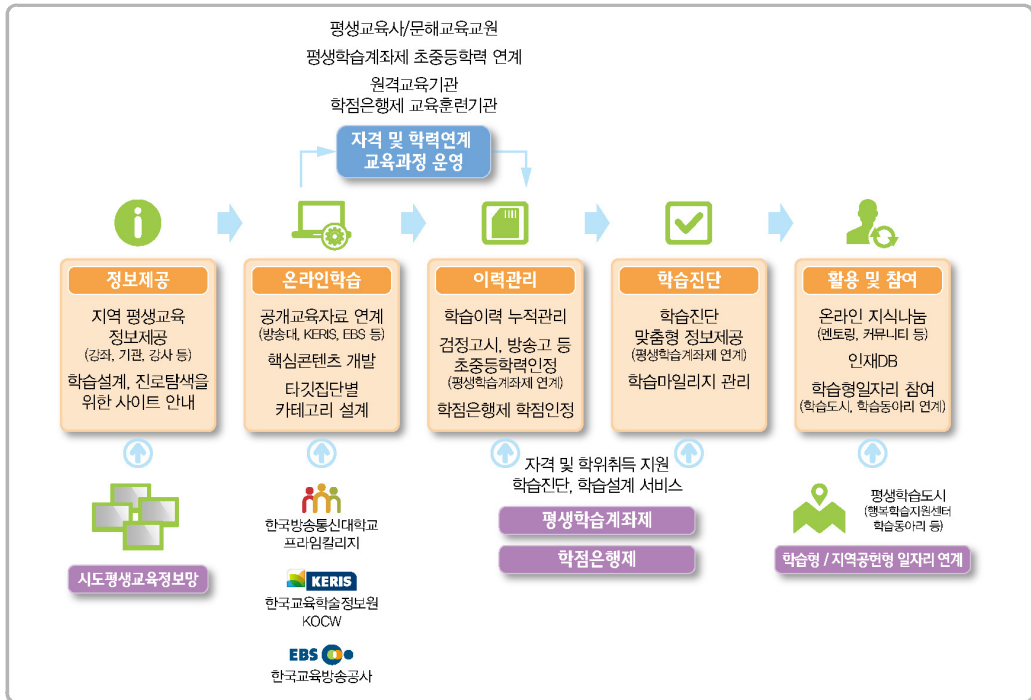
그러나 지역 평생교육시설 중심의 오프라인 운영체계 내에서 경제활동으로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등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역과 소득의 차이에 따라 교육정보와 학습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평생교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 세대에 걸쳐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평생학습 접근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학습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4년 개통 예정인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제작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비롯해 평생교육의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를 유기적·총체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융합된 온-오프라인 지원체제를 구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행복한 인생후반기 설계를 위해 중·장년층의 이·전직, 취·창업을 비롯해 노년층의 취미생활, 여가선용, 사회참여 등을 위한 온라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 농·산어촌 주민 등 학습자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를 통해 평생학습 정보의 개방·공유, 유관기관 콘텐츠 연계 등 평생교육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실현하고자 한다.

## 2. 사업 추진 현황

2014년 하반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국가평생학습포털(가칭)'을 구축·개통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정보제공, 양질의 공개교육자료 등 온라인 콘텐츠 연계, 온라인 재능기부 활동 및 학습형 일자리 참여 지원 등 참여 및 결과활용에 이르는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실행을 위한 운영체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 실행계획.

[그림 1-2-2-1]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정보제공, 온라인 학습, 이력관리, 학습진단, 학습결과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등 단계에 따라 세대별,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 및 평생학습제도 간 적극적인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제공 및 온라인 학습과 관련하여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을 비롯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 한국교육학술정보(KOCW),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한다. 학습자 맞춤형 이력관리 및 학습진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습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누적·관리를 위해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하고 향후 자격 및 학위취득 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중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지역 거점기관, 오프라인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학습형 일자리 참여 등 학습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3. 사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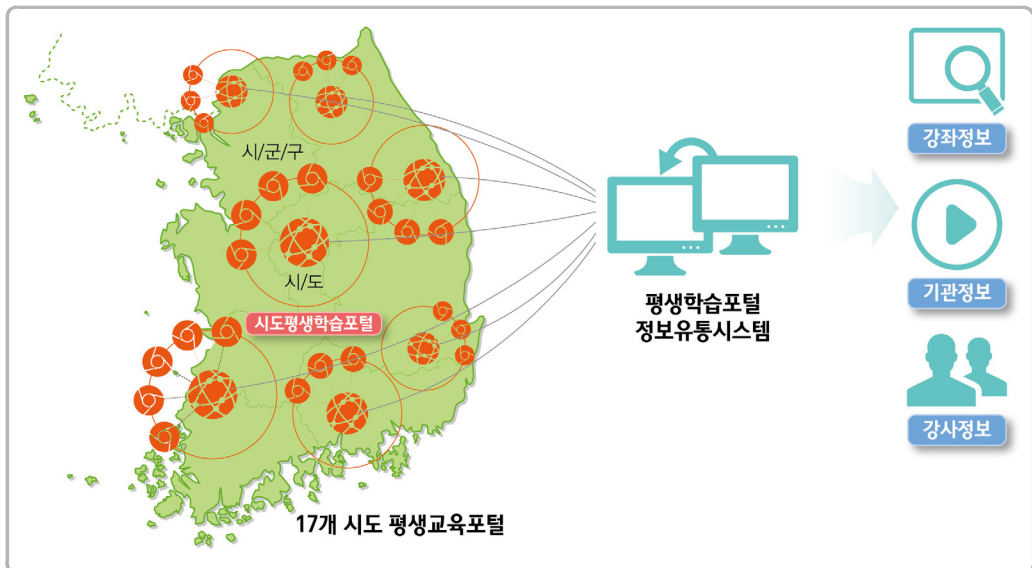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과 콘텐츠 공유의 기능이다.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지역에 산재된 평생교육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양질의 공개교육자료(OER, Open Education Resources) 자료를 연계하는 등 교육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평생학습포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국외 OER 콘텐츠 관련 현황

- (MIT/Yale Open Course Ware) 실제 강의현장을 녹화하여 제공. 그밖에 강의안, 강의 노트, 스크립트, 강의계획서, 과제, 강독, 시험개요, 수업자료 등 공개
- (EDX) 하버드-MIT대학이 공동 추진하는 온라인 대학 EDX 운영. 퀴즈를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간 인터랙션이 가능하며 '수강-과제제출 및 시험' 을 통해 수료증 제공
- (Khan Academy) 1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단체. 수학, 과학, 컴퓨터공학의 기본원리 등, 10~15분 분량의 동영상 제공
- (기타) TED, BBC gallery, 영국개방대학교(Openlearn), MIT OCW, China Open Resource for Education(중국 10개 대학), Japan OCW(일본 6개 대학), Universitas(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720개 대학)

교육부는 2011년부터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 및 기관, 강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통해 2013년 12월, 현재까지 7개 시·도에서 평생교육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시·도 간 평생교육정보를 수집·유통할 수 있도록 메타표준을 제공하여 전국의 평생교육 정보를 ‘국가평생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 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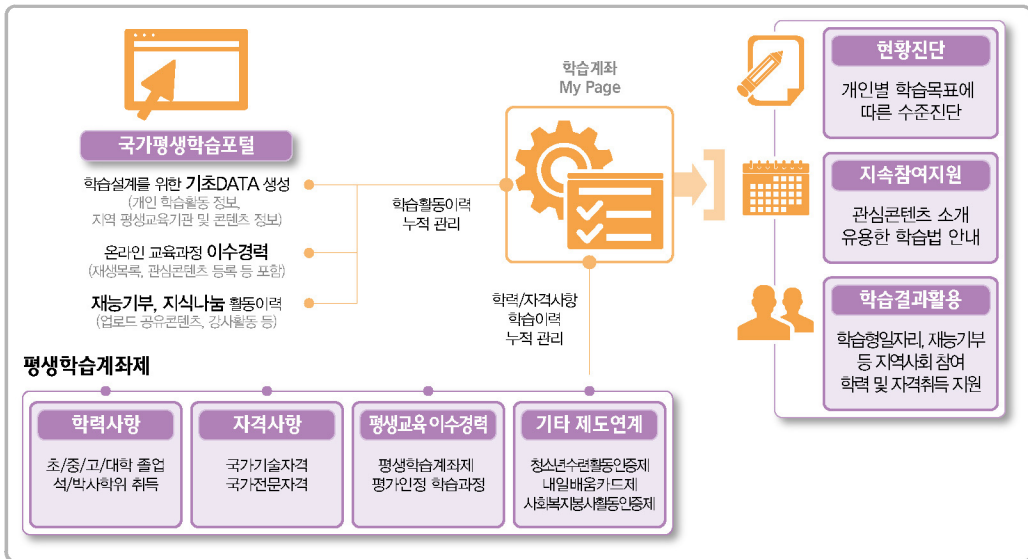
[그림 1-2-2-2] 시·도 평생학습정보망 연계 체제

국가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개교육자료를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공개교육자료 서비스는 지식의 개방과 재생산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집단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국내 대학은 물론 MIT, 하버드 등 해외 유명대학에서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대, EBS, 원격대학 등에서도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국가평생 학습포털은 이러한 국내·외 공개교육자료를 딥링크 등의 방식을 통해 연계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평생교육 정보 활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학습활동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온라인 소통경로를 활용한 지식나눔과 재능기부 활성화이다.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기존의 콘텐츠와 정보 제공의 일방향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스스로 재능을 기부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재생산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구현된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 실행계획.

[그림 1-2-2-3]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설계 서비스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에서 '쌍방향 소통'이란 공개교육자료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평생교육 관련 자격과정 이수자, 은퇴한 시니어 전문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강사 등의 재능기부를 위한 인재 DB를 운영하거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온라인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발적 기부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지역에 알리고 지역에서는 이들을 전문강의 및 기고, 멘토링, 보육서비스,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등 학습형 혹은 보람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 4.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2014년 하반기 국가평생학습포털 개통을 목표로 하며 학습자 특성별로 손쉽게 포털에 접근하여 온라인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경력단절여성, 6070세대 등 타깃집단을 선정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원격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공유 및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망을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KERIS 공개강의서비스(KOCW, Korean Open CourseWare)와 연계하여 대학, 기업은 물론 전문가 강의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YouTube,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의 소셜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은 물론 생활인으로서 지혜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1인 콘텐츠, UCC, 웹툰, 퀴즈 등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 학습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기본 이수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학습형 일자리 연계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학습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도입, 평생학습계좌제 기반 학력취득 지원,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학위취득제도의 개편 등과 연동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는 물론 해외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을 통해 누적·관리된 학습이력을 향후 학점 및 학력인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 실행계획**.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3절 행복학습센터

### 1. 사업 개요

행복학습센터 조성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제시하고, 그 속에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국정과제 72)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정책적 구상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3). 기본계획은 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완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을 주요 단위 과제로 담고 있다.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행복학습센터 조성 정책은 첫째,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시설 등을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16개 시·군·구, 2014년에는 60개 시·군·구, 2015년에는 152개 시·군·구 등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행복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별 행복학습매니저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읍·면·동 지역특화 평생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등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셋째,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위한 시·군·구 단위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지역 행복학습센터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거점센터는 평생교육사 배치, 전문강사 파견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행복학습센터 운영 협의회 개최 등의 시·군·구 단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행복학습센터는 '국민행복학습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보급하고, 생애단계별 학습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는 전국 센터가 공유하는 핵심 공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 센터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과정을 개발한다.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정책의 사업화

행복학습센터 조성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사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거쳤다. 행복학습센터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국민 누구나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근거리에 설치된 주민의 평생학습 공간이다. 둘째, 읍·면·동 주민의 평생교육적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다. 셋째,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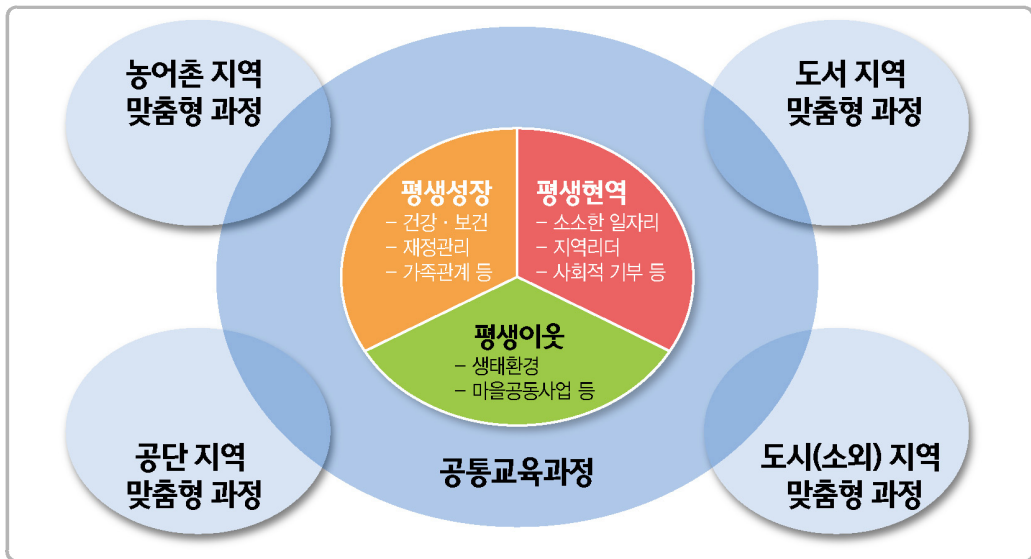
행복학습센터 사업은 다음 몇 가지를 주요 요소로 다룬다.

첫째, 시설 요소이다. 행복학습센터는 읍·면·동 유휴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직접 설치하거나, 평생학습관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한 읍·면·동 소재 각종 유관 시설을 대상으로 희망시설을 지정한다. 이는 현재 읍·면·동에 산재한 다양한 시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둘째, 사람 요소이다. 행복학습센터가 활동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사람을 행복학습매니저로 지정하여 모든 센터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복학습매니저는 평생교육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 배치를 우선시킬 수 있으나, 재정 여건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읍·면·동 센터에 배치된 행복학습컨설턴트들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여론수렴, 주제별·대상별 지역특화 평생교육 사업 개발·운영, 주민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역사회 인재 육성·발굴, 시·군·구 평생교육 사업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내용 요소이다. 행복학습센터에서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서 국가 차원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 구성이나 지역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공동교육과정은 개인의 평생성장(건강·보건·재정관리·가족관계 등)차원과, 평생현역 차원에서 지속적 사회참여(소소한 일자리, 지역 리더, 사회적기부 등), 평생이웃차원에서 주거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체 차원(생태환경, 마을공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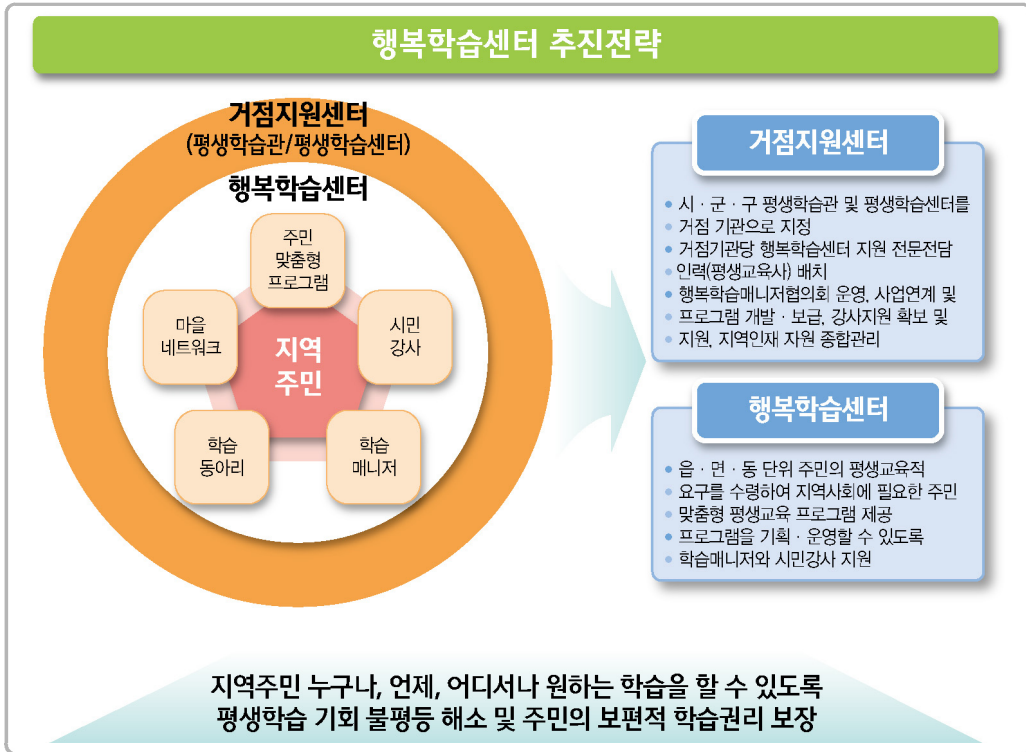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센터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각 센터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농어촌형, 도서지역형, 공단지역형, 도시소외지역형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할 수도 있고, 주민의 주요 구성에 따라 노년층, 장년층, 저학력층, 여성층 등 대상별 구별을 고려해 개발·운영될 수 있다.



출처: 변종임·고영상(2013). 국민 맞춤형 행복 학습지기: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제10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림 1-2-3-1] 행복학습센터 행복학습 프로그램 예시

넷째, 시스템 요소이다. 읍·면·동 단위의 센터는 행·재정적 시·군·구 단위의 지원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거점지원기관 운영을 병행하여 각 센터의 운영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을 거점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행복학습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전문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거점지원기관은 행복학습컨설턴트 파견 및 협의회 운영, 시·군·구 평생교육 사업 연계 및 각 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 자원의 확보 지원, 행복학습센터가 발굴한 지역인재 자원의 종합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출처: 변종임·고영성(2013). 국민 맞춤형 행복 학습지기: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제10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림 1-2-3-2] 행복학습센터와 거점지원센터의 역할

다섯째, 제도 요소이다. 행복학습센터 구성이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복학습센터와 거점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취업지원센터·자원봉사센터·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주민의 학습결과가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마을 만들기·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자료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2013년은 행복학습센터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사업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먼저, 시범사업은 2014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시·군·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추진방식은 201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원 사업 공모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범사업의 취지는 특정 운영모형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3-1〉 행복학습센터 조성 시범사업 운영 현황

자치단체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수	시설유형	수	내용
강원 삼척시	1	여성생활문화관	29	가요교실 생활요가, 통기타, 부모코칭 등
강원 인제군	9	복지센터, 지역마을 체험장	9	노래교실 악선차, 댄스교실 등
경기 가평군	13	마을회관, 학습유관기관, 주민자치센터	50	음악감상, 다도, 그림교실 안전관리 등
경기 김포시	1	읍사무소	4	단전호흡, 부모자녀대화법, 커피핸드드립 등
경기 성남시	12	다목적복지회관	12	문해교육교실
경기 의정부시	1	경로당	8	발마사지, 원예치료 경기민요 등
경기 이천시*	1	주민자치센터	-	리모델링 완료(2013년 12월)
경남 양산시	4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17	한글교실 에코패밀리, 인문학의 향기 등
경북 경주시	4	주민자치센터	13	음악심리상담사, 바리스타2급, 원예활동 등
대전 유성구	6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6	창의독서, 우쿨렐레, 독서지도
부산 남구	2	행복학습센터, 대학	15	건강교실 영화 필름마당, 블루베리 재배특강
부산 사상구	5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도서관	15	요가, 일본어회화, 부모코칭 등
부산 사하구	2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7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 어린이바둑교실 등
부산 서구	3	별도 행복학습센터	14	힐링 인문학, 바리스타교실, 정보화 교육 등
서울 서대문구	10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대학, 도서관	10	한국사전문가, 어르신 인형극단, 의류리폼 등
전북 군산시	10	경로당, 아파트관리사무소	31	군산학, 목공교실, 마을벽화그리기, 리본공예 등

\* 경기도 이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14개 '주민자치학습센터'(통칭 주민자치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할 구상을 갖고, 2013년에는 그 중 1개소를 시범적으로 리모델링 실시



둘째,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행복학습센터 조성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할 행복학습매니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이들의 발굴과 양성을 도모하는 교육과정과 전국의 행복학습센터가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과정은 주민들이 자신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천학습공동체로서 평생학습동아리의 조직화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셋째, 행복학습센터 조성에 관하여 지역 실무자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종의 동영상 제작하였다. 각각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례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사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학습센터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통일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 캐릭터 이미지(CI)를 개발하였다. 이들 자료는 향후 행복학습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자치단체 실무자와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정비가 진행되었다.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는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체제를 시·군·구 단위까지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추진체제를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이 발의·통과 되었다.<sup>1)</sup>

### 3. 사업 성과

행복학습센터는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출발하였고, 사업이 본격적

1)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2013년 8월 23일, 강은희 의원 등은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 기능에 대한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수행사업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는 2013년 12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되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2014년 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은 행복학습센터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학습센터의 개념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공유하였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실천 가능성의 확대 및 학습생태계 조성 등 이론적 논의들이 현장에 접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사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평생교육 시설 유형, 행복학습매니저 역할, 운영 교육과정 등 요소별로 필요한 다양한 자료가 개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을 다루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셋째,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 요소 중 행복학습매니저의 양성과 배치가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향후 과제

앞에서 제시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복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 확보 문제이다. 2013년에는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지역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가 꾸준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이다. 행복은 단일한 구성물이 아니어서 다양한 주제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복학습센터의 공동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주제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행복학습매니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방법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복학습매니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원봉사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복학습매니저에 대한 처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설 또는 설비의 개선 문제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이들 시설이 교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설과 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휴시설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행복학습센터 관련 시설의 개·보수는 사업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문헌

- 변종임·고영상(2013). “국민 맞춤형 행복 학습지가: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2013년 제10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2년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 성과공유 연찬회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교육부 보도자료(2013.9.13).





제1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평생교육법·추진체제

---



- 제1절 평생교육법
- 제2절 평생교육추진체제
- 제3절 평생교육기관



# 제1절 평생교육법

## 1. 개요

### 가. 평생교육의 법규 체계

평생교육에 관한 법규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의 위계와 교육과 관련된 법의 구조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규는 제정권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그 위계가 성립되며, 국가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법규는 「교육기본법」을 상위법으로 삼고, 그 아래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헌법을 토대로 모두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령들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행정도 모두 법령에 정해져 있는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의 법규로서 흔히 ‘법의 법’이라고도 한다. 헌법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2장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각각 평생교육진흥의 의무와 평생교육행정의 법률주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의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학습권, 학교 평생교육의 의무, 사회교육 실시,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만, 「교육기본법」에서는 1999년 「사회교육법」 폐지에 의해 제정된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교육’을 ‘평생교육’ 용어로 대체하여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 나. 「평생교육법」의 개정과정과 구성 체계

해방 직후 최초의 「평생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교육법」 안이 국회에 제안되었



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1982년에야 비로소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사회교육법」은 학교중심 교육법의 하위법과 같은 위상에 머물렀고, 법의 적용범위가 극도로 한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문제가 많은 「사회교육법」을 폐지하고 「평생교육법」을 새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에 따라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1999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공포·시행되었다.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이후, 또다시 정치변화를 포함한 시대 변화와 법 체제 등의 이유로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전면) 개정되고, 2008년 2월 15일 시행되었다. 이때 제정된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주요 특징과 한계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1-1〉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특징 및 한계

구분	특징	한계
「사회교육법」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li> <li>•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전략 제시</li> <li>• 한국평생교육제도의 기본골격 구축</li> <li>• 평생교육 전문가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제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교육진흥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단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름</li> <li>• 평생교육 추진체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음</li> </ul>
「평생교육법」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본법」 하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체제 정비</li> <li>•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li> <li>•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제 구축</li> <li>• 평생교육시설 세분화</li> <li>• 국민의 학습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 「사회교육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li> <li>• 여전히 선언적 의미의 평생교육 진흥 조항으로 남음</li> </ul>
「평생교육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및 제도 체계화</li> <li>•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추진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li> <li>•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추진 체제 정비</li> <li>• 문해교육 및 성인문해 학력인정제도와 평생학습 계좌제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간 평생교육 추진체제 혼선발생</li> <li>•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시설 관리 등 시행상의 문제점 발생</li> <li>• 평생교육 개념 정의에 대한 모호함과 영역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li> </ul>

출처: 변중임 외(2014),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정비방안 연구, p. 30.



또한 「평생교육법」은 2008년 전면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개정된 주요 조항은 다음의 표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기관 관리, 평생학습계좌 등이며,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1-2〉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2007. 9~2013. 5)

시기	내용	관련 법령
2013년 5월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업무	제44조
2011년 7월	• 원격교육방식 학교교과학습 학원 관련	제33조 제2항
2009년 5월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외 사후관리 방안 규정	제23조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제24조
	• 사내대학 설립조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제32조

출처: 변종암·이세장·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책방향. 평생교육법 개정 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p. 8.

첫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득요건은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와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전담하고, 동 관련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을 명시하였다(제44조, 권한의 위임).

둘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개정은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련된 사항이다. 사내대학 형태는 설립조건의 완화와 입학 대상 확대에 관련된 내용이며(제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에 있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원격교육 방식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었다(제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셋째, 평생학습계좌로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평생교육기관이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8년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 법령 및 시행규칙 내용은 「평생교육법」 8장 46조, 「평생교육법시행령」 6장 78조, 「평생교육법시행규칙」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3〉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

구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체계	8장 46조, 부칙	6장 78조, 부칙	24조, 부칙
주요 내용 및 범위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평생학습결과의 관리·인정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전문인력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시설설치기준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 정책 방향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추진체제 정비 평생교육추진기구 제시 평생교육사 자격 및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정비 문자해득교육 및 학력인정 제도 도입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및 시행	평생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사항 평생교육진흥위원회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교육사 및 양성기관 운영 세부사항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 확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항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설치기준 제시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 제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기준 및 학력인정 절차제시

출처: 변종임·이세정·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비방향.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p. 10.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칙에 포함된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목적, 평생교육 관련 개념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의 이념, 평생교육과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공공시설의 이용 규정,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이다.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해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된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될 수 있다. 광의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외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포괄한다. 협의의 평생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지만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과도 평생교육에 해당된다.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은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교육기본법」 및 종전 「사회교육법」 상의 '사회교육'과 동일한 의미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협의의 평생교육 개념을 채택한 것이다. 평생교육 이념은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자발성 및 자기 주도성, 중립성,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등과 같이 「헌법」 또는 「교육기본법」 상의 교육 일반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평생교육법」이 적용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1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관계 행정기관장 등의 협조, 평생학습도시, 경비보조, 지도 및 지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평생교육진흥원 등에 관한 내용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 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기타 사항으로 경비보조, 지도 및 지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사에 관한 내용에서는 자격 및 업무, 양성기관, 배치 및 채용, 경비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기관의 내용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학교 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명시되고 있다.

여섯째, 문자해득교육에 관련한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은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장의 학점, 학력 등에 관한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진흥계획 등,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4장 평생교육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장 문자해득교육, 부칙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칙은 목적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둘째,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셋째, 평생교육진흥원 등에 관한 내용은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출연금의 관리, 결산서의 제출, 잉여금의 처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학습계좌제의 운영 등이다.

넷째, 평생교육사에 관한 내용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학습비의 반환,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내대학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등이다.

여섯째, 문자해득교육에 관련한 내용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학습계좌의 운영, 평생교육 관련 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사내대학 설치인가의 신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원격대학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교원의 배치·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평생교육 유관 법령

「평생교육법」 유관 법령은 평생교육제도 및 평생교육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변종임·이세정·위영은, 2013). 평생교육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평생교육내용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제도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법령의 구조 및 체계, 법제도의 목적 및 의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4〉 평생교육제도와 관련된 법령 분석

구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본 체계	12조, 부칙	7조, 부칙	24조, 부칙
제정 의의	평가인정을 받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평가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요 내용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 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li> <li>- 학습과정 이수자의 학점 및 학력인정, 학위수여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독학학위 취득 제공 의무</li> <li>- 독학학위 취득 실시기관 및 절차</li> <li>- 학위수여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의 종류, 학원의 설립 및 등록 절차</li> <li>- 교습과정 및 강사</li> <li>- 교습소 및 과외교습 지도감독 사항</li> <li>- 교습소 폐지 및 중지, 교습비 반환 규정</li> </ul>
평생교육 법과의 관계	「평생교육법」 제7장의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을 위하여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한 학습결과 일부 인정	평생학습 기회 확대 평생학습결과 인정과 연계제도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학원법에서의 평생직업교육학원 포함
한계	평생학습결과 인정 중 사내인정교육 이후 교육결과인정 연계 미비	평생학습결과 인정 및 활용 연계 미비	제5장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 연계 규정 미비

출처: 변종암·이세정·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비방향.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p. 1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생교육법」 제7장의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에 대하여 학습결과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은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결과의 인정제도이나 「평생교육법」과의 연계는 미비한 수준이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 학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과 별도로 연계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내용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법령의 구조 및 체계, 법제도의 목적 및 의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5〉 평생교육내용과 관련된 법령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본 체계	13조, 부칙	5장 58조, 부칙	5장 34조, 부칙	7장 63조, 부칙	4장 23조, 부칙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정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자원 교부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국가 문화 역량 강화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촉진	-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기회 제공 - 직업교육훈련의 질 강화
주요 내용 및 범위	-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 종류, 자원 명시 -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 규정 -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측정항목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사회복지사업범위 - 사회복지사업기구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배치 - 지역사회복지계획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문화예술교육범위 - 문화예술교육시설 - 문화예술 교육사 - 전담기구 운영 등 - 학교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예술교육	- 근로자직업개발 - 사업 지원 - 근로자 및 사업주 직업능력 - 개발사업직업능력 - 개발법인직업능력 - 개발시설기능대학	- 직업교육훈련의 정의 -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기본계획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공개
평생교육법과의 연계성	- 학교교육 중심의 재정지원 구조와 평생교육에 재정 지원의 연계 강화 필요	- 사회복지 전담 인력 배치 - 보수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명시	-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및 지원 및 경비보조 강화 명시 - 문화예술교육시설 범위 구체화	- 평생교육 영역상 직업능력향상교육과 연계 필요 - 직업능력개발시설과 평생교육시설 연계 필요	- 직업능력향상교육과 연계 필요 - 직업훈련시설과 평생교육시설 연계 필요
시사점	- 학교교육 중심의 재정지원구조에 평생교육 포함 필요	- 사회복지전담인력-교육-배치 체계를 평생 교육사에 적용 필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시설범위 구체화된 내용을 평생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시설 범위 구체화에 적용	- 직업능력개발 시설과 평생 교육 시설 연계 필요	- 직업훈련시설과 평생교육시설 연계 필요

출처: 변종임·이세정·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비방향.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p. 14.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학교교육 중심의 재정지원 구조와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배치, 보수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명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등과 연계성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및 지원 및 경비보조 강화 명시, 문화예술교육시설 범위 구체화 등이 연계되어야 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평생교육영역인 직업능력 향상교육, 직업능력개발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의 연계가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평생교육 영역인 직업능력 향상교육, 직업훈련시설과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3. 향후 과제

향후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의 재개념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관리·감독 분리,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제 도입, 평생교육사의 전문화와 배치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이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로 분리·정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임의 단체와 법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로 분리·정의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천 영역에 대한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평생교육법」 상의 8대 평생교육시설을 8대 평생교육기관과 8대 평생교육단체로 분류하여 감독하거나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는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소속으로 이원화하여 관리·감독되도록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즉, 학력인정 등에 관련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역평생교육에 관련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는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사의 전문화와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계속교육 신설’, ‘평생



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규정, ‘공공 및 민간기관에 평생교육사(공무원)배치 의무화’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사는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 8대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문해교육기관 포함) 등에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인택(2011). **평생교육경영론**. 서울: 학지사.
- 남정걸(2002).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교육과학사.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변종임·이세정·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비방향.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변종임·최돈민·이덕난·이세정·고영상·위영은(2014).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정비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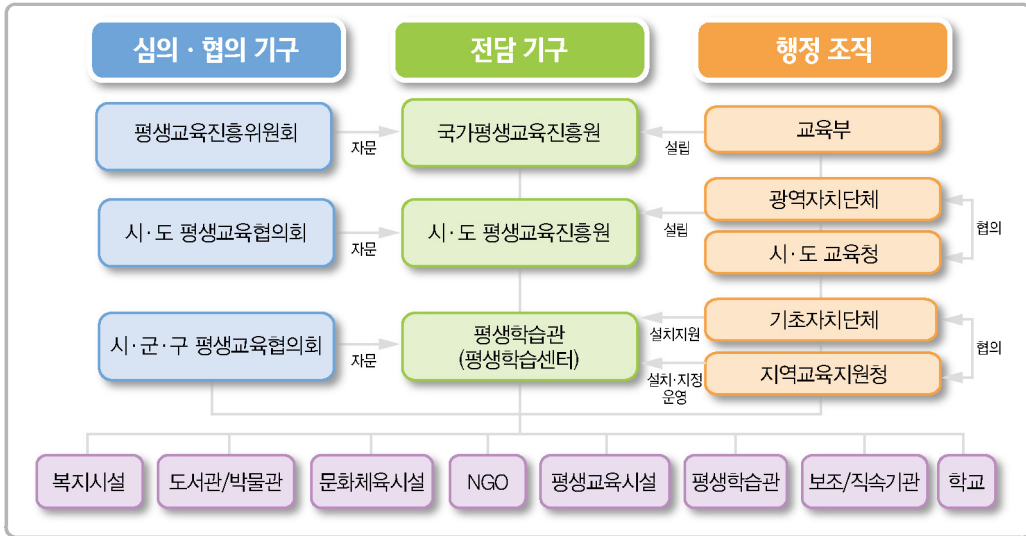


## 제2절 평생교육추진체제

### 1. 사업 개요

2000년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중앙 수준의 평생교육센터가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설치되고,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의해 16개 시·도에 지방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지정·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대부분의 외국과는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집중된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이 일반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강일규, 2001). 이에 정부는 2007년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종전 시·도 교육청이 수행했던 지역평생교육 진흥업무를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협약’을 통하여 교육청이 지방평생교육에 참여하게 하였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전담기구는 중앙 수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시·군·구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평생학습관이며,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행정조직, 전담기구, 심의 및 협의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조직은 중앙수준의 교육부, 광역수준의 시·도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체제화되어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기구로서 전담기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체제화되어 있으며, 심의·협의 기구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로 체제화되어 있다.



[그림 2-1-2-1]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 2. 중앙 단위 체제

중앙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평생교육행정을 중추적으로 전담하는 일반 행정조직과 평생교육을 실행하는 전담기구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다.

### 가. 평생교육 행정조직: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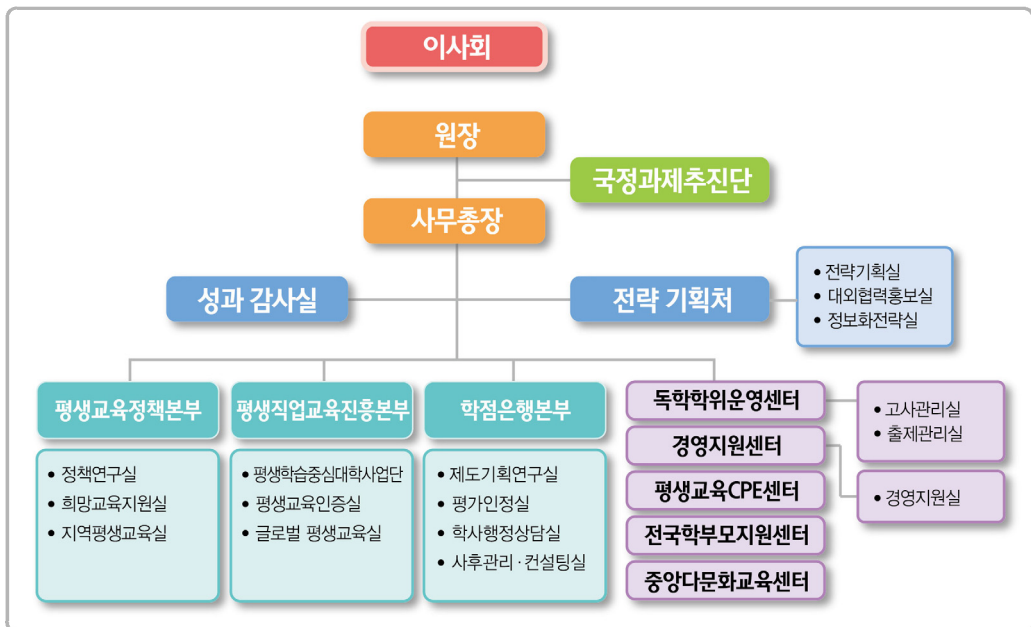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중앙 수준의 행정조직은 교육부이며, 주무부서는 평생학습정책과이다. 주요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자치구 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지도,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 시간제 등록제운영 지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운영 지원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문해교육의 실시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학원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 지원·지도 등이다.

## 나. 평생교육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거, 국가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다. 국가 단위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집행,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운영 등 평생학습 결과의 인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1-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2012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처, 3본부, 5센터, 1사업단, 1감사실, 16실로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국가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위의 그림과 같다.

이와 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저학력 성인의 생애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전 국민 평생학습 참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평생학습계좌제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연수 사업,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평생교육 국제교류 등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100세 시대 인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발하게 평생교육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정부로부터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118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시범운영하고, 평생학습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해 전국평생학습박람회를 충북 제천에서 개최하였다.

### 3. 광역 단위 체제

#### 가. 평생교육 행정조직: 시·도 평생교육팀(과)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협약’로,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나 지정에 관한 사항(「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이 교육감 협의 대상이 된다.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부의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평생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 평생교육계획의 수립·수행의 임무를 부과시킴으로써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지역평생학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제함으로써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생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2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광역의 지방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직접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로서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단, 대학 소속 시설은 제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사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교육감은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교육청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는 문자해독교육이 있으며 교육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은 경과규정을 두어 교육감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상에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교육감도 평생교육 사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도지사와 같이 의지에 따라 계속평생교육 사무를 추진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역할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2-1〉 「평생교육법」에서의 광역 및 교육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

구분	시·도청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립·시행(제11조)</li> <li>교육부장관 제출(제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의 수립·시행에 협의(제11조)</li> </ul>
행정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 요구(제13조)</li> <li>평생교육통계조사(제1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또는 등록 관리(제28~제38조)</li> <li>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제42조)</li> </ul>
시·도 평생교육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회 구성·운영(제12조)</li> <li>시·도지사 당연직 위원장(제1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회 위원 구성 협의(제12조)</li> <li>부교육감은 당연직 부의장(제12조)</li> </ul>
평생교육기관 지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요청시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제1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li> </ul>
평생교육사업 추진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20조)</li> <li>※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위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부칙 경과조치)</li> <li>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협의(시행령 제12조)</li> </ul>
평생교육진흥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li> <li>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li> <li>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li> <li>그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li> </ul> </li> <li>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제16조)</li> <li>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시행령 제1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li> <li>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협의(제16조)</li> </ul>
평생교육진흥 사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이 규정한 모든 평생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li> </ul> </li> <li>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제2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자해득교육(제39조)</li> <li>좌동</li> </ul>

출처: 고영상 외(2011), 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나. 평생교육 전담기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는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교육감과 협의하여(「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임무를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획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을 기초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정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종합·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2-2〉 각 시·도 조례의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진흥원 업무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진흥원 업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대전	강원	세종	
진흥원 업무	(1)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보급, 지원	●	●	●	●	●	●	●	●	●	●	●	●	●		●	●	●	
	(2)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3)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	●	●	●	●	●	●	●	●	●	●	●	●	●	●			
	(4)평생교육 상담	●	●	●	●	●	●	●	●	●	●	●	●	●		●	●	●	
	(5)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전문성 제고	●	●	●	●	●	●	●	●	●	●	●	●	●		●	●	●	
시·도 평생 교육 진흥 사업	(6)전문인력정보은행제		●	●	●	●	●	●	●	●	●	●	●			●			
	(7)학습계좌제 운영		●	●	●	●	●	●	●	●	●	●	●			●			
	(8)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자료 구축		●	●	●	●	●	●	●	●	●	●	●			●		●	
	(9)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	●	●	●	●	●	●	●	●	●			●	●	
	(10)평생교육사의 양성·배치	●	●	●	●	●	●	●	●	●	●	●	●	●				●	
	(11)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 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		●	●	●	●	●	●	●	●	●	●	●		●			
	(12)문자해독교육지원	●	●	●		●	●	●	●	●	●	●	●	●		●			
	(13)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	●			●	●			●	●	●	●					
	(14)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												○		○			
시·도 평생 교육 진흥 사업	(15)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			●	●	●	●								●			
	(16)지역 평생교육진흥 컨설팅 시행 또는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학 및 평가	●		●	●		●				●					●			
	(17)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												
	(18)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지원					●		●	●										
	(19)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사업 지원	●	●				●		●	●		●					●		
	(20)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출처: 권인택(2012). 광역단위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평생교육·사회교육. 한국평생교육학회·일본사회교육학회 제3회 학술교류 연구대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각 시·도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는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16조를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경비지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등 여러 조항 속에 담겨 있는 사항을 정리한 수준이지만 법령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이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지원, (2)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4)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5) 평생교육상담,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자료 구축, (9)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10) 평생교육사의 양성·배치, (11)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문자해독교육지원, (13)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14)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1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16) 지역평생교육진흥 컨설팅 시행 또는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학 및 평가, (17)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18)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운영 및 지원, (1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사업 지원, (20)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추진 전담기구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있다. 지방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 평생교육 담당부서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2-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현황 및 지원부서

지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설립형태	지원부서	담당부서
서울	지정예정	서울연구원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부산	지정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교육협력과 평생교육담당
대구	지정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
인천	지정	인천인재육성재단	교육기획관 평생교육담당
광주	지정	광주발전연구원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인재육성팀
대전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담당



지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설립형태	지원부서	담당부서
울산	지정	울산발전연구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평생교육팀
경기	재단법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원	지정예정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관실 교육협력팀
충북	지정	충북발전연구원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충남	지정	충남인재육성재단 위탁	교육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담당
전북	미정	전북발전연구원	교육법무과 인재양성담당
전남	미정	전남발전연구원	행정과 교육지원담당
경북	지정	대구대학교	인재양성과 인재육성담당
경남	미정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제주	지정	제주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세종	미정	미정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4. 기초 단위 체제

### 가. 평생교육행정조직: 시·군·구 평생교육담당(과)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보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평생교육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와 함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는 시·군·구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군·구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팀, 과, 국 수준으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의 전반에 걸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시·군·구 지역평생학습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학습관을 지원한다.



## 나. 평생교육 전담기구: 시·군·구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21조). 시·군·구의 평생학습전담기구로서 평생학습관을 살펴본다.

### 1)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뿐만 아니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도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수준의 지방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권한은 없고 설치·지원만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2001년 208개에서 시작하여 2012년 기준 421개의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또한 시·군·구청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정보제공, 평생학습상담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 때문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의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도서관, 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 복지관, 사회체육문화시설, 기업 및 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의 평생학습프로젝트를 실행한다.

## 5. 향후 과제

향후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유명무실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활성화, 광역수준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분리·설치, 평생교육행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시·군·자치구의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교육협의회가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반자치단체가 지역평생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령 조항이 수정되어야 하며, 학교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법령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 수준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연계·협력 체제의 불협화음과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평생교육추진 전담기구를 분리·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 광역수준은 일반자치 산하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된 것과 같이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전담기구는 구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되었던 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시·도 지역평생교육센터' 또는 '시·도 학교평생교육센터'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평생교육행정에 대한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효과적인 연계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에서도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군·자치구 단위 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 의무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학습을 기획·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의 단위교육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원화하는 체제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강일규(2001).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평생교육추진기구의 현황과 역할 개선 방향.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47-84.
- 고영상·심명인·이은주·이미나(2011). 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권인택(2011). 평생교육경영론. 서울: 학지사.
- 권인택(2012). 광역단위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평생교육·사회교육. 한국평생교육학회·일본사회교육학회 제3회 학술교류 연구대회. 177-20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제3절 평생교육기관

### 1. 평생교육기관 현황

평생교육기관은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초·중·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해 3년 동안 진행되는 초등교육기관이다. 사내대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직접 해당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수나 학습자 수에 비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보다 규모가 작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관 중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유·초·중등 학교부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학습관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부설은 사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부대시설로 설립·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며, 학교 및 대학원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역시 각각의 해당되는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이 외에 원격형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지식·인력개발형태는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지역평생교육센터로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준형식 평생교육기관과는 달리 기관 자체에서 학력인정이나 학위취득이 가능하지 않다.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 따르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약 4배가량 기관 수가 더 많고, 학습자 수 역시 3배 정도 많았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2013년 3,965개로 2011년에 비해 10.4% 증가하였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도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증가수준은 미미하였다.

〈표 2-1-3-1〉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연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2013년	3,965	180,843	18,260,301	72,954	18,376
	2012년	3,768	178,971	17,618,495	71,676	17,888
	2011년	3,591	182,844	28,920,780	69,016	16,746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2013년	1,027	미조사	677,620	6,545	2,634
	2012년	1,006		710,169	6,614	2,598
	2011년	1,008		754,472	8,141	3,45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증가 추세였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는 2012년 감소하였다가 2013년 다시 증가하였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2013년까지 학습자 수와 교·강사 수에서 감소하였다.

## 2. 유형별·지역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유형 중에서는 원격형태 기관(22.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언론기관 부설(17.7%), 지식·인력개발 형태(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기관부설 기관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에 비해 87.0% 상승하였다. 반면, 평생학습관이나 유·초·중등 학교부설은 감소하였다.



〈표 2-1-3-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2013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총계	3,965	3,768	3,591	180,843	46,999	133,844	178,971	182,844
유·초·중등 학교부설	8	10	11	32	1	31	59	54
대학(원)부설	405	403	397	26,952	391	26,561	26,920	25,799
원격형태	876	887	853	45,247	1,706	43,541	48,162	60,789
사업장부설	375	357	328	63,348	33,788	29,560	61,833	55,599
시민사회단체부설	524	495	461	5,350	1,182	4,168	5,497	5,234
언론기관부설	703	494	376	6,485	1,244	5,241	4,520	4,621
지식·인력개발형태	687	727	774	12,574	4,126	8,448	13,108	13,012
평생학습관	387	395	391	20,855	4,561	16,294	18,872	17,73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기관 수와는 달리 2013년 프로그램 수에서는 사업장부설 기관이 63,348개(3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원격형태(25.0%), 대학(원)부설(14.9%)의 순이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은 원격형태(32.5%), 사업장부설(22.1%), 대학(원) 부설(19.8%)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1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은 사업장부설(71.9%)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수는 2011년보다 약 6% 감소하였는데 이를 프로그램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49,053개(36.6%)로 가장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32.9%), 학력보완(15.7%)의 순이었다. 2011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총계	133,844	129,443	142,776
학력보완	21,051	26,106	44,309
성인기초/문자해득	604	458	788
직업능력 향상	49,053	42,648	38,322
인문교양	18,967	18,908	18,838
문화예술	44,073	41,214	40,351
시민참여	96	109	168

\* 1개월 이상 프로그램만 해당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수는 2011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감소된 학습자 수는 대부분 원격형태 기관의 학습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전체 학습자의 75.6%가 원격형태 기관의 학습자였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 부설(6.6%), 평생학습관(6.4%)의 순이었다. 성별을 보면 전체 학습자 중 여성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표 2-1-3-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학습자 수

단위: 명

구분	학습자 수			
	2013년		2012년	2011년
	계	여		
총계	18,260,301	10,632,842	17,618,495	28,920,780
유·초·중등학교부설	388	242	1,390	2,035
대학(원)부설	833,176	527,772	845,860	856,432
원격형태	13,799,283	7,857,096	13,669,575	24,972,426
사업장부설	1,197,333	758,397	1,036,910	1,187,437
시민사회단체부설	170,032	114,698	186,712	178,937
연론기관부설	225,355	171,085	134,454	146,959
지식·인력개발형태	869,497	460,309	840,451	833,343
평생학습관	1,165,237	743,243	903,143	743,21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교·강사 수를 보면, 사업장부설(26.0%), 대학(원)부설(22.2%), 원격형태(16.4%)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1년 미만의 단기 채용 교·강사 수와 1년 이상의 중·장기 채용 교·강사 수에서도 사업장부설과 대학(원)부설의 비율이 높았다. 언론기관부설과 지식·인력개발형태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채용 교·강사 수가 더 많거나 중·장기 채용 교·강사 수와 유사할 정도로 많이 나타났다. 사무직원 수에서는 원격형태 기관(32.7%)이 가장 많았고, 지식·인력개발형태(19.7%)가 그 다음이었다.

〈표 2-1-3-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2013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총계	72,954	24,323	48,631	71,676	69,016	18,376	17,888	16,746
유·초·중등학교부설	35	-	35	54	56	20	27	29
대학(원)부설	16,192	4,738	11,454	15,825	14,972	1,981	1,881	1,848
원격형태	11,945	3,249	8,696	13,434	13,362	6,004	6,487	6,110
사업장부설	18,949	5,375	13,574	18,235	16,875	1,665	1,426	1,297
시민사회단체부설	3,610	1,241	2,369	3,602	3,659	1,436	1,385	1,291
언론기관부설	3,955	2,027	1,928	3,110	2,851	1,658	1,215	965
지식·인력개발형태	9,160	4,028	5,132	8,527	8,734	3,623	3,499	3,214
평생학습관	9,108	3,665	5,443	8,889	8,507	1,989	1,968	1,99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원격형태,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순으로 나타났다. 1개 기관 당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0.99명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평생학습관, 사업장 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형태에서 1개 기관 당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가 1명을 넘었다. 반면에 유·초·중등학교 부설, 언론기관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에서는 1명 미만이었다.



〈표 2-1-3-6〉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A	B	C	A	B	C	A	B	C
총계	18,376	3,935	0.99	17,888	3,488	0.93	16,746	3,144	0.88
유·초·중등학교부설	20	2	0.25	27	4	0.40	29	3	0.27
대학(원)부설	1,981	490	1.21	1,881	432	1.07	1,848	411	1.04
원격형태	6,004	906	1.03	6,487	827	0.93	6,110	694	0.81
사업장부설	1,665	454	1.21	1,426	424	1.19	1,297	378	1.15
시민사회단체부설	1,436	455	0.87	1,385	402	0.81	1,291	350	0.76
언론기관부설	1,658	493	0.70	1,215	352	0.71	965	263	0.70
지식·인력개발형태	3,623	600	0.87	3,499	539	0.74	3,214	540	0.70
평생학습관	1,989	535	1.38	1,968	508	1.29	1,992	505	1.29

\* A: 총 사무직원 수, B: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C: 기관 당 평생교육사 소지자 수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 2, 3급 모두 포함됨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재구성.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각 기관별 통계 재구성.

한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차이는 계속되었다. 다음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통합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는 모두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계속되었다. 2013년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기관 수에서는 683개, 프로그램 수에서는 40,951개가 많았다. 특히, 1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은 비수도권이 약간 더 많았으나, 1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은 수도권에 비해 41,266개(89.1%)가 더 많았다.



〈표 2-1-3-7〉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2013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총계	3,965	3,768	3,591	180,843	46,999	133,844	178,971	182,844
수도권	2,324	2,201	2,117	110,897	23,342	87,555	109,867	118,963
비수도권	1,641	1,567	1,474	69,946	23,657	46,289	69,104	63,88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재구성.

지역별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수는 기관 수나 프로그램 수보다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13년에는 전체 학습자 중 수도권의 학습자가 82.0%인 반면에 비수도권은 18.0%였다. 지역 간 차이는 남녀 학습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비수도권 학습자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습자 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2-1-3-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학습자 수

단위: 명

구분	학습자 수			
	2013년		2012년	2011년
	계	여		
총계	18,260,301	10,632,842	17,618,495	28,920,780
수도권	14,972,474	8,536,981	14,881,360	26,160,279
비수도권	3,287,827	2,095,861	2,737,135	2,760,50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재구성.

교·강사 수와 사무직원 수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2013년 교·강사 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12,430명, 사무직원 수는 6,418명이 많았다. 교·강사 수의 차이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 1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평균 교·강사 수는 전국 수준에서 18.4명이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도 18.4명으로 동일하였다. 반면에 사무직원 수는 평생교육기관 수의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



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1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평균 사무직원 수는 전국 수준에서 4.6명이었으나, 수도권은 5.3명, 비수도권은 3.6명으로 1.7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2-1-3-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2013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총계	72,954	24,323	48,631	71,676	69,016	18,376	17,888	16,746
수도권	42,692	13,747	28,945	42,807	42,058	12,397	12,061	11,273
비수도권	30,262	10,576	19,686	28,869	26,958	5,979	5,827	5,47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재구성.

### 3.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한국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향후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예산, 예산 투입 이후 처리 과정, 평생교육기관 대상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평가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기관 대상의 지원사업별 평가는 실시되고 있으나, 통합적 평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에게 총 투입되는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성과, 프로그램 성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채용이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기관 당 평생교육사 채용이 1명도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질 제고의 방안은 평생교육 채용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파트타임제 근무, 학습형 일자리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평생교육사 채용 수준을 확대하는 정책과제가 기획·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 적게 배치되어 그만큼 교육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 역시 도시 중심의 정책이다. 군·면·리 단위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찾아보고,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지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즉, 평생교육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국가 및 광역시·도의 평생교육정책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제2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평생교육제도

---



- 제1절 학점은행제
- 제2절 독학학위제
- 제3절 평생학습계좌제



## 제1절 학점은행제

### 1. 사업 개요

####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434호)을 제정하였다.

이에 학점은행제를 토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이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정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됨으로써 정규 고등교육의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1997년 한국교육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하여 실행되었고,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와 함께 고등교육 불수혜 집단에게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취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 부문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규 학교교육 밖에서 이수한 결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교육력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 밖 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나. 추진 경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은행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을 제정·공포하였고, 곧바로 동년 9월 11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고 1998년 2월 28일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학점은행제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1-1〉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 제정·공포
1997년 9월 11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8호) 제정·공포
1998년 2월 28일	「동법 시행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13호) 제정·공포
1998년 3월 1일	61개 기관 274개 학습 과목 평가인정
1999년 8월 31일	1999년도 하반기 학위 수여(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2000년 2월 21일	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11명, 전문학사 539명)
2003년 3월 1일	10개 중요무형문화재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3년 3월 1일	11개 군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4년 3월 1일	6개 원격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6년 3월 1일	20개 간호·보건계열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7년 8월 28일	학점은행제 10주년 기념식 개최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관기관 변경
2014년 2월 25일	2014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2,323명, 전문학사 45,6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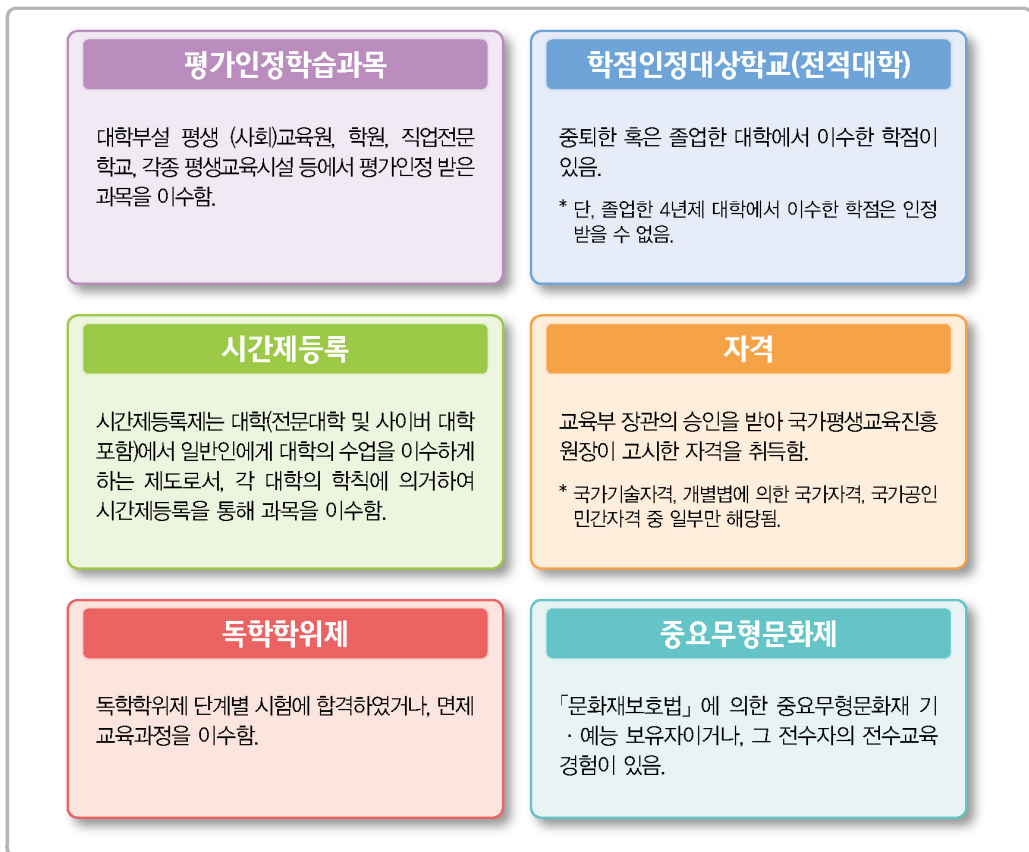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운영체제

학점은행제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 등 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그림 2-2-1-1] 학점은행제 학점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령에 의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의한 수여 방식과 대학(교)장 명의로 의한 수여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1-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수여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⑦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위 종류와 전공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교육과정은 노동 시장 등 사회적 요구와의 부합성, 학문적 타당성, 현실성,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 나. 주요 현황

### 1) 학습자 현황

학점은행제 학습자 수는 다음 표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로 등록한 총 학습자 수는 2013년 기준, 94만여 명으로 도입한 지 채 15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2-1-3〉 최근 3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단위: 명

연도	상반기			하반기			계
	1분기	2분기	소계	3분기	4분기	소계	
2011년	16,880	53,537	70,417	22,101	28,097	50,198	121,425
2012년	17,532	60,470	78,002	21,832	33,937	55,769	133,771
2013년	23,726	67,483	91,209	24,506	28,839	53,345	144,554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 2) 학점인정 현황

원격기반 학습과목 평가인정 확대 등의 조치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통한 학점인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시간제등록 질 관리 조치로 시간제 등록에 의한 학점인정은 2012년 급속히 감소하였다. 2013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2-1-4〉 최근 3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단위: 학점 (%)

연도	학점원별 인정 학점							계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중요무형 문화재	시간제 이수	
			시험합격	면제과정				
2011년	3,772,465 (52.0)	368,435 (5.1)	122,840 (1.7)	3,482 (0.0)	1,921,036 (26.5)	419 (0.0)	1,070,129 (14.7)	7,258,806 (100.0)
2012년	5,147,678 (64.5)	365,940 (4.6)	145,142 (1.8)	3,075 (0.1)	1,838,107 (23.0)	452 (0.0)	482,053 (6.0)	7,982,447 (100.0)



연도	학점원별 인정 학점							계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중요무형 문화재	시간제 이수	
			시험합격	면제과정				
2013년	6,224,079 (71.3)	322,716 (3.7)	123,685 (1.4)	2,985 (0.1)	1,695,123 (19.4)	555 (0.0)	357,823 (4.1)	8,726,96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 3) 학위수여 현황

다음 표를 보면, 2010년까지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역전되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학사학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위 취득이 용이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2-1-5〉 최근 3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전문학사	학사	계
2011년	29,126	19,478	48,604
2012년	37,571	19,690	57,261
2013년	44,751	20,589	65,34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위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학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미만의 학습자 비율은 38.4%에서 32.5%, 30.2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통적인 대학 수학 연령 이외의 집단에서 대학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학점은행제가 대학 학위취득자 연령집단의 변화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1-6〉 최근 3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연도 \ 연령	24세 이하	25~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계
2011년	5,161 (10.6)	13,490 (27.8)	16,915 (34.8)	9,418 (19.4)	3,589 (7.4)	48,604 (100.0)
2012년	6,262 (10.9)	12,359 (21.6)	21,854 (38.2)	12,314 (21.5)	4,472 (7.8)	57,261 (100.0)
2013년	7,481 (11.5)	12,187 (18.7)	24,453 (37.4)	15,903 (24.3)	5,316 (8.1)	65,340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 4) 평가인정 현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은 대학(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 평생직업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기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567개 기관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학(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223개 기관으로 전체 567개 기관 대비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을 포함하면 대학 관련 기관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시설이 132개로 23.3%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훈련시설이 102개 18.0%, 학원은 39개, 6.9%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 유형 가운데 군 교육훈련시설은 29개 기관으로 전체의 5.1%에 이르는데, 육·해·공군에서 직무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군내 병과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등 15개 기관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업훈련시설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12년 88개였던 직업훈련시설이 2013년에 102개로 늘어난 것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인정을 2012년부터 새롭게 실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2-2-1-7〉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 (%)

기관 유형		기관 수	비율
대학 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41	24.9
	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82	14.5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13	2.3
	소계	236	41.6
직업훈련 시설	공공직업훈련원	2	0.4
	인정직업훈련원	100	17.6
	소계	102	18.0
학원	기술계학원	20	3.5
	사회계학원	11	1.9
	예능계학원	8	1.4
	소계	39	6.9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0.9
정부·지자체 등 교육시설		15	2.6
군 교육훈련시설		29	5.1
평생교육시설		132	23.3
중요무형문화재기관		9	1.6
합계		567	100.0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 5) 표준교육과정 현황

표준교육과정은 1998년 2월에 41개 전공을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19차에 걸쳐 학사 109개, 전문학사 109개 전공이 개발·고시되어 있다. 2013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을 살펴보면, 학사학위 과정에는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등 24개 학위종류, 109개 전공이 있고,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는 가정전문학사를 비롯하여 13개 학위종류, 109개 전공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2-1-8〉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단위: 개

구분	학위 종류	전공 수
학사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관광학사, 광고학사, 군사학사, 무용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미술학사, 미용학사, 법학사, 보건학사, 수사학사, 신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이학사, 체육학사, 패션학사, 해양학사, 행정학사 등 총 24개	109
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군사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언어전문학사, 생명산업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의료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 등 총 13개	109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교육부(2013), 교육부 고시 제2013-9호.

### 3. 사업 운영 성과

#### 가. 추진 성과

2013년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재평가를 면제하였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홍보 시 인가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급 수를 제한하였으며, 평가인정 등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교·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교·강사의 자격을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한 학점은행제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해 2013년도에 한해 재평가를 면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우수기관 모델로 질 높은 평가인정과정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습자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그 평가인정과정의 홍보할 때, 관할 관청의 인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학습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사용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 시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훈련기관의 학급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습자 정원에 대한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적절한 규모의 운영정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시 신청 가능한 학급 수를 최대 10개 학급으로 제한하였다. 평가인정 이후에도 학급 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급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막도록 하였다.

과거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하면 평가점수의 고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되던 것을 바꾸어, 평가인정 결과에 대해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높은 수준의 학습과정을 개설하는 데 목표를 두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었다. 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하여, A등급은 평가인정 유효기간을 출석기반 하는 경우 5년, 원격기반으로 하는 경우를 3년으로 하고, B등급은 평가인정 유효기간을 출석기반 4년, 원격기반 2년, C등급은 출석기반 3년, 원격 1년으로 하였으며, D등급은 탈락 처리하였다. 그 결과, 출석기반의 경우 전체 378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A등급이 24%, B등급이 58.5%, C등급이 24.9%, D등급이 14.3%로 평가인정 되었다. 원격기반의 경우 전체 126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A등급이 7.3%, B등급이 43.7%, C등급이 33.3%, D등급이 15.9%로 평가인정 되었다.

또한 원격기반 학습과정의 경우, 학점평정의 엄정성을 위해 동시시험제를 실시하는 기관과 웹접근성 관련 공공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학점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학습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아동학 전공에 학습자가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목별 최대 1,000명까지 정원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과목당 최대 800명으로 축소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의 활성화를 위해 재직 중 산업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2012년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과 관련된 14개 직업훈련시설, 41개 과정 98개 학습과목을 평가인정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27개 직업훈련시설, 95개 과정 260개 학습과목을 평가인정 하였다.

표준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아발달 등 10개 과목을 신설하였고, 기존에 고시된 과목 가운데 식품위생학 등 17개 과목을 다른 전공과 새롭게 연계하였다. 현장실습 관리를 위해 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의 과목시수에 이론을 추가하여 학점의 질 관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아동학 분야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아동음악과 동작 등 4과목을 삭제하여 전공영역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해 2012년에는 외환전문역 1종 등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9개, 게임기획전문가 등 기존 자격 재검토 7개에 대한 학점 부여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ERP정보관리사 2급 등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 8개, 정보처리기사 등 5개의 기 인정된 국가기술자격의 전공연계기준이 신설되었다.

## 나. 시사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아동학의 경우 국가자격과 맞물려 타 전공에 비해 학습자가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 전공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이러한 편중현상을 제어하고, 질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기간으로 주목할 수 있다. 우수기관 선정 및 보상, 평가인정등급제 실시, 평가인정 기준강화, 다양한 학점원과 자격의 발굴, 표준교육과정의 개편 등이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화된 실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 4. 향후 과제

향후에도 학점은행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학위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012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3년 도입한 평가인정등급제, 전공과목별 정원관리제 등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행정조치, 학사관리규정, 정보공시제 등의 법적 토대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공시제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구축과 이를 운영할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기관과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콜센터와 평가인정 전문인력 보강을 통하여 점증하는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평가인정 시 교육훈련기관의 경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여 이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때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국가자격체계(NQF)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의 결과가 학점은행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과학기술부(201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9호, 제19차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고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제2절 독학학위제

### 1. 사업 개요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정(1990년)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춘 자가 자학지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1~4단계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1990년 중앙교육평가원 주관 하에 처음 실시된 이후, 1998년 관련 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되었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결과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 검정해 줌으로써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운영 체제

##### 1) 전공 분야

〈표 2-2-2-1〉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학위종별	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중어중문학(신규 응시 폐지)
법학사	법학



학위종별	전공
행정학사	행정학
경영학사	경영학
이학사	컴퓨터과학, 수학(신규 응시 폐지)
공학사	정보통신학(3, 4단계만 지원 가능)
가정학사	가정학
간호학사	간호학사(4단계만 지원 가능)
교육학사	유아교육학(3, 4단계만 지원 가능)
농학사	농학(신규 응시 폐지)

\* 심리학 전공은 2014년부터 개설 운영함

## 2) 학위취득과정체제

독학학위제는 1~4단계의 시험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평가영역, 응시자격 등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2-2-2-1] 독학학위제 학위취득과정도



## 나. 사업추진 현황

### 1) 독학학위제 시험 실시 현황

독학학위제 시험지원자는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이후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3년에는 총 33,153명이 지원하여 2012년보다 5,323명(13.8%)이 감소하였다.

〈표 2-2-2-2〉 독학학위제 연도별/단계별 시험 실시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교양과정인정시험 (제1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제2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제3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제4단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0~ 2009년	126,592	87,770	53,979 (61.5)	69,144	51,021	34,508 (67.6)	42,525	33,623	26,343 (78.3)	39,698	32,816	11,905 (36.3)
2010년	12,050	8,474	5,710 (67.4)	10,495	7,461	4,892 (65.6)	4,057	2,858	2,064 (72.2)	1,905	1,450	742 (51.2)
2011년	15,878	11,448	8,516 (74.4)	12,904	9,549	6,410 (67.1)	4,759	3,342	2,769 (82.9)	2,012	1,553	787 (50.7)
2012년	17,835	13,055	9,684 (74.2)	13,517	10,135	7,393 (72.9)	4,842	3,454	2,630 (76.1)	2,282	1,760	950 (53.9)
2013년	14,884	10,568	7,922 (75.0)	11,239	8,219	7,393 (72.9)	4,139	2,934	2,540 (86.6)	2,891	2,258	961 (42.6)
계	187,239	131,315	85,111 (65.3)	117,299	86,385	59,054 (68.4)	60,322	46,211	36,346 (78.7)	48,788	39,837	15,345 (38.5)

\* 2014년 1월 기준, ( )안은 합격률(%)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독학학위정보시스템 DB.

### 2) 독학학위제 전공별 학위취득

2008년 이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도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 1~3단계 지원자의 증가에 비하여 학위취득자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독학학위제를 응시하는 목적이 학위취득만이 아닌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각종 시험자격 충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2012년 학위취득자는 2011년



에 비해 163명(20.7%) 증가하였고, 간호학 학위수여자가 2011년 179명에서 2012년 302명(68.7%)으로, 국어국문학 학위수여자가 2011년 94명에서 2012년 144명(53.2%)으로 급증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표 2-2-2-3〉 독학학위제 연도별/전공별 학위취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전공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중어 중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 교육학	수학	가정학	컴퓨터 과학	농학	정보 통신학	간호학	계
1992~ 2009년	1,658	1,896	22	851	838	640	1,973	24	1,119	2,097	40	0	747	11,905
2010년	108	166	1	38	37	11	69	0	56	63	0	0	193	742
2011년	94	238	0	45	54	21	54	2	49	51	0	0	179	787
2012년	144	222	0	51	41	19	51	0	54	66	0	0	302	950
2013년	99	214	0	54	32	22	99	0	59	70	1	2	309	961
계	2,103	2,736	23	1,039	1,002	713	2,246	26	1,337	2,347	41	2	1,730	15,345

\* 2014년 1월 기준. 2013년은 2014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임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분야는 2003~2006년까지 순차로 폐지, 기존 학적보유자만 응시 가능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독학학위정보시스템 DB.

### 3. 사업 운영 성과

#### 가. 신규전공 개설 운영

2006년 3개 전공(농학, 수학, 중어중문학) 폐지 이후 9개 전공으로 운영된 독학학위제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에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사회의 요구에 맞는 신규 전공 설치를 논의하고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공 분야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전공은 학습자의 요구와 독학학위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과학계열(심리학), 이공계열(정보통신학) 1개 전공 분야를 선정, 관보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13년 정보통신학 3~4단계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 심리학 전공 시험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표 2-2-2-4〉 독학학위제 정보통신학 시험과목

구분	정보통신학 시험과목			
	3단계	회로 이론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이론 임베디드 시스템	이동통신 시스템 정보통신기기
4단계	전자회로 정보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 멀티미디어 통신	

## 나. 지속적인 제도운영 개선 및 내실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독학학위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습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우선 독학학위제 시험접수 시 지원자 부속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2013년 1단계부터 지원자가 독학학위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이 재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했으나 과거 응시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거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부속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둘째, 독학학위제 지원 증명서 온라인 첨부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업체를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첨부 가능대학을 기존 200여 개에서 400여 개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1단계 시험부터 적용하고 있다.

셋째, 독학학위제 동일전공 인정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응시자격 심의를 위한 동일전공 인정심의절차를 기존 우편 또는 방문에서 2013년 5월부터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민원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전공학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공별 평가영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3년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의 평가영역을 재검토하여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6개 전공의 평가영역을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 다. 「독학학위제 응시자격 완화 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3년 7월 17일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독학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독학학위제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고졸 자격자에게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정행위자 등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 시 교육부 장관의 청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표 2-2-2-5〉 응시자격 완화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교양과정인정시험 (1단계)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 1단계 시험 3할(2과목) 이상 합격한 자 -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자나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 2단계 시험 3할(2과목) 이상 합격한 자 - 동일전공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 1~4단계 합격(면제)한 자 - 동일전공으로 대학에서 이상 수료자나 10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최동

#### 4. 향후 과제

첫째, 독학학위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불편사항 분석 및 개선을 통해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독학학위제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학점은행제와 연계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둘째, 독학학위제의 지원자 추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독학학위제 지원자는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33,153명으로 감소하였다. 분석결과 지원자 감소는 주로 20대, 경영학 전공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며,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획득을 위한 지원자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지원자 일부 감소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추이와 함께 관련 분야의



대학지원자 및 대학재학생 현황, 인력수급정책 및 현황, 연령별 학습가능인구 등 상세한 추가분석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독학학위제의 안정적인 제도운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수험료 인상이 요구된다. 독학학위제는 제도 시행 시기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 수험료(18,000원, 접수 수수료 제외)가 20년 이상 동결되어 그동안 증가된 지원자, 전공증설 등 비용증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어 왔다. 시험운용의 안정성과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수험료의 현실화 및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독학학위정보시스템 DB.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3절 평생학습계좌제

## 1. 사업 개요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 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인정,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의 주요 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2-3-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체계도



이 제도는 개인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결과 뿐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교육경험을 통한 학습결과도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 2. 사업 추진 현황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이 학습이력을 등록·누적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시스템에는 학교교육과 비형식, 무형식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학습과정) 이수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운영한 학습과정 이수결과는 학습과정 평가인정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최종 기록된다. 확인된 학습결과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할 수 있다.

### 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sup>1)</sup> 운영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개인이 학습이력을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만든 시스템이며,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의 학습계좌를 개설하고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 취득 사항, 학습과정 이수 실적, 특기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주소 및 직장,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과 초·중·고·대학(원) 학력사항, 자격 취득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실적 등을 기간별로 기록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으로는 일반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외국어 능력수준, 취미 및 동아리활동 실적, 수상 및 독서활동 실적, 특허출원 실적 등도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Accounts for Lifelong Learning의 약자(ALL)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의미를 담고 있음.



〈표 2-2-3-1〉 학습계좌 수료 가능 사항

구분	내용	
인적사항	성명 주소 및 직장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
학력사항	〈초·중등 학력〉 초·중·고 (졸업, 중퇴 여부, 대인학력 취득 여부 등 포함) 성인문해 초등학력 인정	〈고등교육 학위〉 대학·대학원 학점은행 또는 독학사 해외 석·박사학위
경력사항	직업상의 경험 및 근무 연한	
자격취득 사항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공인자격, 민간자격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실적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6대 영역)별 참여실적 노동부 교육훈련 참여실적	
특기사항	추가선택 사항 자원봉사활동, 외국어 능력,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실적, 수상 및 독서활동 실적, 간행물 및 특허출원 실적, 취미 및 동아리 활동사항, 기타 평가인정 학습과정 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실적 등	

출처: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 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이나 운영방법 등을 일정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프로그램인지를 공식 인정하는 절차이다. 평가 지표는 교육 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등이며, 이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개인은 해당 학습과정명, 이수기간 및 시간, 이수기관 등이 기재된 평생학습이력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 다. 학습결과 활용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확인된 개인의 학습이력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성인의 초등 및 중학 학력 취득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력 취득에 필요한 총 이수시간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과정에서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17개 시·도별 초졸 검정고시 시행규칙,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규칙(제15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규칙(제12조) 등에 근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 응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단, 국어, 영어, 수학은 제외).

셋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밖 학습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시수단위 인정)이 가능하다. 이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재학 중에 이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결과 등을 일정 범위(총 17단위) 하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본인의 학습활동이력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 3. 사업 운영 성과

2013년도 평생학습계좌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학습계좌를 개설하고 학습이력을 누적한 계좌개설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0년 10월 이후 단년도 최대 등록 학습자 수를 기록하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학습이력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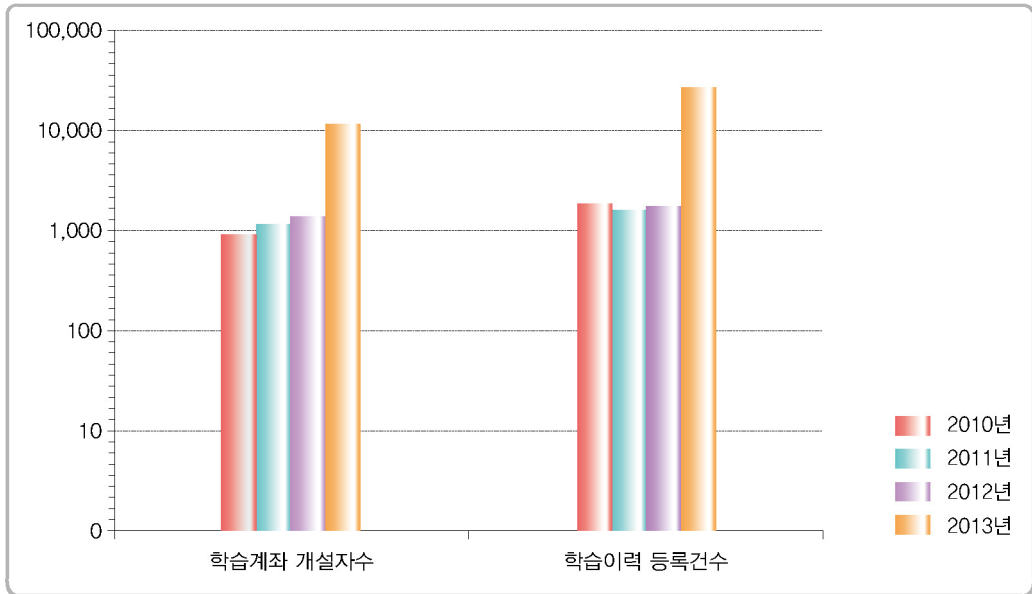
〈표 2-2-3-2〉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학습이력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학습 계좌 개설	학습이력											총계	
		학력	자격	경력	연수	학부 모	외국 어	강 행 물	특 허	수 상	봉 사	독 서		기 타 활 동
2010년	979	741	980	422	632	-	-	23	14	252	185	236	115	3,600
2011년	1,496	764	803	359	486	5	34	13	2	107	96	99	53	2,821
2012년	2,231	946	753	576	420	19	34	34	3	236	135	108	94	3,358
2013년	15,672	11,035	3,598	2,413	12,772	61	416	140	66	777	722	1,036	16,305	49,341
총계	20,378	13,486	6,134	3,770	14,310	85	484	210	85	1,372	1,138	1,479	16,567	59,12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단위: 명, 건



[그림 2-2-3-2]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학습이력 현황

둘째,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 학력취득 연계가 가능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저학력 및 학업중단자의 학력연계 취득이 가능한 학습과정 DB가 대폭 증가하여 학력 취득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과정 수가 확대되었다. 2010년 10월 이후부터 등록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는 총 2,352개이며, 이 가운데 초·중·고 학력취득 연계가 가능한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 수는 총 1,126개이다.



〈표 2-2-3-3〉 연도별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학습과정 수	131	430	317	224	209	458	365	218*	2,352
	878			433					

\* 기관단위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수 제외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표 2-2-3-4〉 초·중·고 학력별 검정고시 연계 과목 현황

단위: 개

검정고시 연계 과목	학습과정 수	학력수준		
		초	중	고
공업기술	70	-	-	70
과학	31	-	12	19
국사	11	-	-	11
기술·가정	153	1	33	119
가정과학	125	2	-	123
농업과학	25	-	-	25
미술	185	1	78	106
사회	144	-	40	104
음악	47	1	27	19
정보사회와 컴퓨터	159	-	-	159
중국어	16	-	-	16
체육	60	-	39	21
한문	29	-	-	29
해양과학	14	-	-	14
도덕	11	-	3	8
기업경영	19	-	-	19
일본어	26	-	-	26
영어	1	1	-	-
합계	1,126	6	232	888
		1,12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셋째, 개인이 등록한 학습이력의 자기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전까지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개인이 본인의 학습이력을 등록하여 단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체제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2013년에는 개인이 누적한 학습이력 현황을 스스로 진단·분석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도입하였다. 학습진단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한 학습이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수한 학습과정에 대한 ‘나의 학습 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특정 학습결과에 근거한 ‘연계 직업정보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등록 학습이력과 연계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진단 및 학습설계 정보제공기능의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대사와 서포터즈단을 선발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동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학습계좌를 개설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계좌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 4. 향후 과제

평생학습계좌제는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나, 새 정부가 발표한 평생학습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안착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력연계형 학습과정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성인학습자 초등학력인정체제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2/3시간만을 학력인정시수로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경우 평생학습계좌제와 성인학습자의 학력인정을 형식적으로만 연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초·중학력인정 이수시간으로 일괄 인정하는 방안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평생학습설계 서비스 기능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도입한 학습진단 기능은 본인의 학습결과를 진단·확인하는 수준까지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존 학습결과를 통해 보다 의미미한 학습설계가 가능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상별로 필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설계 공간을 특성화하여 전 생애적인 평생학습이력의 통합, 관리, 설계가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국정과제 72) 수립과 더불어 향후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에서 통합 관리할 국가단위의 평생학습이력관리 기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즉 방송대학교(프라임칼리지, TV공개강의 등), KERIS(KOCW), EBS 디지털 콘텐츠가 직·간접으로 연계되면 각 콘텐츠를 이수한 학습이력을 학습계좌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거대한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계좌제와 국가자격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의 연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현 수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학점은행제의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분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형식·무형식 학습의 인정, 형식학습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사전 작업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습이력관리시스템.

## 제3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평생교육 전담인력

---



- 제1절 평생교육사
- 제2절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 제1절 평생교육사

### 1. 제도 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4년 17%에서 2013년에는 30.2%로 크게 상승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또한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이어지며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로서 변화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별 대학 및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발급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격증이 관리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자격증 교부를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자격제도 질 관리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2013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일원화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자격제도 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 등의 제반 활동 등이 추진되었다.

### 2. 제도 관련 현황

#### 가.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현황

전체 양성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토대로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



년까지 배출된 평생교육사는 총 87,098명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에 배출된 평생교육사는 8,153명으로 2011년에 배출된 평생교육사(7,074명) 대비 15.2%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평생교육사 1급 배출자는 다음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70명, 2급 7,900명, 3급 183명이 각각 배출되었다.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포함하여 배출된 누적 현황은 2012년을 기준으로 평생교육사 1급 465명, 2급 79,547명(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포함), 3급 7,086명(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포함)이 각각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주로 대학에서 운영되었으나,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학 외 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외 양성형태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급과정, 지정양성기관의 양성과정, 학점은행기관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수한 자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그 중 지정기관의 양성과정은 현직 종사자 대상과정이었으나 시간제등록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등 성인학습자 대상 양성과정이 개설되면서 2010년 8월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되었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 발급은 2013년 기준 총 5,567명으로, 학점은행기관을 통한 자격증 발급자(2,160명)는 2012년에 배출된 평생교육사 대비 41.1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1-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연도	1급	2급	3급	총계	1급 누적	2급 누적	3급 누적
1986년	-	20	-	20	-	20	-
1987년	-	499	40	539	-	519	40
1988년	-	1,105	38	1,143	-	1,624	78
1989년	-	1,444	45	1,489	-	3,068	123
1990년	-	1,520	72	1,592	-	4,588	195
1991년	-	1,548	68	1,616	-	6,136	263
1992년	-	1,433	94	1,527	-	7,569	357
1993년	-	1,987	129	2,116	-	9,556	486
1994년	-	1,897	101	1,998	-	11,453	587
1995년	-	2,012	134	2,146	-	13,465	721



연도	1급	2급	3급	총계	1급 누적	2급 누적	3급 누적
1996년	-	1,877	194	2,071	-	15,342	915
1997년	-	1,952	176	2,128	-	17,294	1,091
1998년	-	1,766	331	2,097	-	19,060	1,422
1999년	-	1,947	586	2,533	-	21,007	2,008
2000년	22	2,586	516	3,124	22	23,593	2,524
2001년	25	2,878	513	3,416	47	26,471	3,037
2002년	38	2,957	636	3,631	85	29,428	3,673
2003년	31	2,982	601	3,614	116	32,410	4,274
2004년	32	2,776	551	3,359	148	35,186	4,825
2005년	26	3,734	490	4,250	174	38,920	5,315
2006년	33	3,735	143	3,911	207	42,655	5,458
2007년	16	4,566	316	4,898	223	47,221	5,774
2008년	33	5,448	273	5,754	256	52,669	6,047
2009년	57	5,447	260	5,764	313	58,116	6,307
2010년	55	6,697	383	7,135	368	64,813	6,690
2011년	27	6,834	213	7,074	395	71,647	6,903
2012년	70	7,900	183	8,153	465	79,547	7,086
<b>총계</b>	<b>465</b>	<b>79,547</b>	<b>7,086</b>	<b>87,098</b>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표 2-3-1-2〉 교육부 장관 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총계	
		승급 과정	지정양성 기관*	학점은행 기관	소계	지정양성 기관*	학점은행 기관		소계
2009년	25	-	305	-	305	56	-	56	386
2010년	13	35	810	75	920	77	-	77	1,010
2011년	-	-	-	382	382	-	2	2	384
2012년	42	-	-	1,530	1,530	-	5	5	1,577
2013년	41	-	-	2,160	2,160	-	9	9	2,210
<b>계</b>	<b>121</b>	<b>35</b>	<b>1,115</b>	<b>4,147</b>	<b>5,297</b>	<b>133</b>	<b>16</b>	<b>149</b>	<b>5,567</b>

\* 2010년 8월 운영 종료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91개 기관)에서 배출한 평생교육사는 4,378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평생교육시설(14개 기관) 1,413명(17.3%), 원격 및 사이버대학(17개 기관) 1,336명(16.3%), 전문대학(13개 기관) 586명(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은 주로 전문대학 유형과 일반평생교육시설을 통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에서 배출되었다.

〈표 2-3-1-3〉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 발급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 수 (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재발급 현황		
		계	1급	2급	3급	계	2급	3급
전문대학	13	586	-	413	173	4	-	4
교육대학	1	-	-	-	-	-	-	-
대학*	91	4,378	28	4,349	1	232	232	-
산업대학	2	118	-	118	-	-	-	-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1	88	-	85	3	-	-	-
원격 및 사이버대학	17	1,336	-	1,335	1	-	-	-
사내대학	-	-	-	-	-	-	-	-
기능대학	-	-	-	-	-	-	-	-
대학원대학	8	173	-	173	-	-	-	-
전공대학	1	19	-	19	-	-	-	-
일반평생교육시설	14	1,413	-	1,408	5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42	42	-	-	-	-	-
총계	149	8,153	70	7,900	183	236	232	4

\*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재구성

평생교육사 지역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이 4,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44명, 충남 542명, 경북 49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1-4〉 평생교육사 지역별 발급 현황

단위: 명

구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재발급 현황		
	계	1급	2급	3급	계	2급	3급
서울	4,895	57	4,827	11	45	45	-
부산	319	-	319	-	24	24	-
대구	56	-	33	23	4	4	-
인천	28	2	26	-	3	3	-
광주	344	-	344	-	9	9	-
대전	127	1	126	-	3	3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644	5	638	1	29	25	4
강원	20	-	20	-	1	1	-
충북	92	-	92	-	28	28	-
충남	542	1	538	3	6	6	-
전북	226	1	225	-	26	26	-
전남	220	-	110	110	3	3	-
경북	496	-	495	1	41	41	-
경남	144	3	107	34	14	14	-
제주	-	-	-	-	-	-	-
총계	8,153	70	7,900	183	236	232	4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나.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는 87,098명, 취업(재직)자가 3,769명으로 자격 취득자 대비 취업(재직)률은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다음 표의 배치 현황은 해당 법령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평생교육기관 전체의 배치 현황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현저한 취업률은 자격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확보 및 전문성 인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기관 대비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비율은 69.7%였고, 기관당 평생교육사 소지자 수는 0.99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규정 미준수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고, 의무배치 규정 이전에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권고사항이었던 이유로 배치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들의 주요 재직기관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 배치비율(9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격형태(70.0%), 평생학습관(69.8%),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6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1-5〉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단위: 명, 개, %

시설구분	사무직원 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총 사무 직원 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기관당 평생교육사 소지자 수	총 기관 수	배치 기관 수	배치 비율	
총계	-	-	0.99	3,965	2,764	69.7	
학교부설	유·초·중등학교부설	20	2	0.25	8	2	25.0
	대학(원)부설	1,981	490	1.21	405	286	70.6
	소계	2,001	492	1.19	413	288	69.7
원격형태	6,004	906	1.03	876	613	70.0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부설	1,245	419	1.23	340	323	95.0
	산업체부설	420	35	1.00	35	23	65.7
	소계	1,665	454	1.21	375	346	92.3
시민사회단체부설	1,436	455	0.87	524	347	66.2	
언론기관부설	1,658	493	0.70	703	449	63.9	
지식·인력개발형태	3,623	600	0.87	687	451	65.6	
평생학습관	1,989	535	1.38	387	270	69.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표 2-3-1-6〉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기관	배치기준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2명 이상 (1급 또는 2급 1명 포함)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명 이상(1급 또는 2급)
3. 법 제30조~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학점은행기관/법 제22조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출처: 법제처(2014),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3. 제도 운영 성과

2013년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질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한 시기였다. 구체적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사 교부 일원화 추진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평생교육법** <법률 제11770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산설 2013. 5. 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부칙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3. 5. 22>

이에 따라 세부 하위 법령 수정 및 검토안을 마련하고, 자격제도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반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발·배포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학에서 발급한 자격증 교부 관련 보유자료를 이관하고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14년부터 추진될 일원화 교부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질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자격제도의 정비 및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에 이어 자격제도 질 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질 관리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핵심과제인 평생교육사 양성, 배치 연수체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평생교육 현장실습이 무학점 체계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된 이후 과목운영 및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의 현장실습 운영의 체계적 수행을 돕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발, 보급하였다.

셋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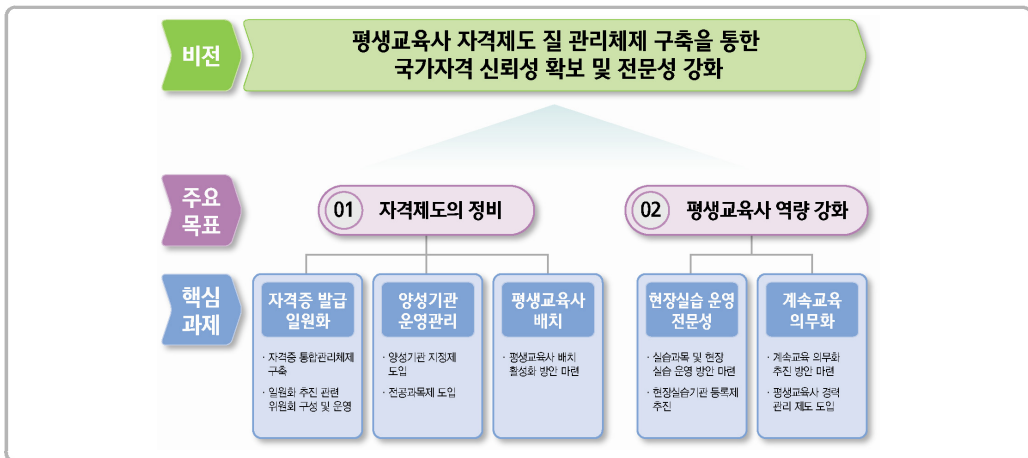


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별 맞춤 학습설계를 위한 전담상담원을 배치하여 상시 상담체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안내 및 홍보, 자격신청·검정 및 상담내역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4. 향후 과제

2014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우선과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원화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이다. 이를 위해 자격증 발급 업무 안착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자격제도 운영관계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연수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핵심과제인 양성, 배치, 연수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13). 앞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생교육 분야 양적 확대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사의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유지에 관한 질 관리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사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은 자격제도의 전문성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림 2-3-1-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방향



이에 2013년에는 자격제도 질 제고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논의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은 위의 그림과 같다.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질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자격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주요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격제도의 정비를 위한 핵심과제는 자격증 발급 일원화 도입, 양성기관 운영·관리, 평생교육사 배치이다. 자격증 발급 일원화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는 일원화 자격증 발급 DB 및 통계 관리 등을 통한 자격증 통합관리체제 구축과 일원화 추진 관련 위원회(검정위원회, 유사과목인정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이 제시되었다.

양성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양성기관 지정제 및 전공과목제 도입이 제시되었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별도의 기준 및 관리 없이 개별 대학에서 전공과 상관 없이 운영됨에 따라 양성기관별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양성기관 요건 및 양성과정 내용,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지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편성 시에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공과목제 도입을 통해 전공교수 편성 등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실천과제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및 전담공무원 배치 등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현장실습 운영의 전문성제고 및 계속교육 의무화 도입으로 제안되었다. 현장실습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습과목 및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계속교육 의무화 관련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제도 도입이 제시되었다. ‘계속교육’은 평생교육사의 입직 이후 전문적으로서의 지속적인 경력개발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계속교육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속교육 이력관리, 경력관리, 계속교육 운영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상에서 제시한 자격제도 개선방향을 기초로 '양성, 배치,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교육부(2013).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13. 9. 1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제2절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 1. 사업 개요

인생 100세 시대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평생학습은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풍토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국가 평생교육정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관계자의 역할 및 활동 영역의 폭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평생교육관계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과 연수 기회가 부족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평생학습 진흥기반 확대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역별·대상별로 특화된 전문 연수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관계자 연수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2013년에 추진한 평생교육관계자 연수는 연수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직무연수, 자격연수, 현안연수, 국내외 테마연수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연수과정별로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3-2-1〉 연수과정별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 현황

구분	연수과정명	현황(회수/인원)	
		2012년	2013년
직무 연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계자 연수	6회/292명	3회/349명
	평생교육사 CPE 연수(임파워링 연수*)	2회/143명	2회/282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및 사·도담당자 연수	2회/92명	3회/112명
	평생교육관계자 임파워링 연수	-	1회/130명
	학점은행 관계자 연수	2회/771명	-
자격 연수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1회/22명	1회/43명
현안 연수	충북 평생학습 심포지엄	-	1회/75명
	문해교육 교·강사 워크숍	-	2회/82명
국내외 테마 연수	평생교육 해외 테마 연수	2회/48명	2회/64명
	국내 현장 테마 연수	-	1회/87명

\* 2012년 평생교육사 임파워링 연수가 2013년 평생교육사 CPE연수로 명칭 변경 운영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2013), 2013년 평생교육CPE센터 성과보고

### 3. 사업 운영 성과

2013년 평생교육관계자연수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연수는 평생교육관계자를 기관별, 영역별로 구체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집중연수 형태로 진행하였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계자 연수는 2012년 권역별로 개최하였던 것을 2013년에는 상반기 2회(A·B 유형), 하반기 1회 전체 통합 연수로 개최·운영하였다. 이 연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실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제도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직무 연수로 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워크숍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일원화의 준비 단계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기존 권역별 연수 방식이 아닌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집합 연수를 통해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교육사 CPE 연수는 기존 연수의 광범위한 대상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도 진흥원 등 공공기관 재직 평생교육사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 연수 내용의 차별화, 전문화를 확보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전문역량 강화, 평생교육 우수 사례 및 성과 공유를 통한 평생교육 실천력 강화,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전문역량, 공공행정, 평생교육 분야로 트랙을 다양화하여 기관별, 경력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및 시·도 담당자 연수는 2012년 교사와 행정직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것에서 2013년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를 새롭게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분임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기존 시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고하였다. 특히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각 교육청 담당자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표준 업무편람을 제작하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체계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교육관계자 임파워링 연수는 평생교육관계자들의 현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둘째, 자격연수로는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평생교육 관련기관에서 평생교육 전문가로 일정기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승급 및 평생교육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은 1급 승급과정과 2급 승급과정으로 구분되는데, 2급 승급과정은 2011년부터 신청인원 미달로 폐강되고 있다. 1급 승급과정은 2012년 재구성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2013년 책임교수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표 2-3-2-2〉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교과목 재구성

2012년	2013년	신규 과목
3영역, 7개 분야	3영역, 7개 분야	평생교육사의 거시적 담론(3H)
29과목	30과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과목 승인 통보.

또한, 승급과정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책임교수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학습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한 워크숍 형태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모델을 도입하였고, 평가 기준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였다.

〈표 2-3-2-3〉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방법

2012년	2013년	비고
격주 토요일 진행 (총 12회)	영역별 1박 2일 워크숍 진행(총 7회)	전문성 강화: 영역별 집중 교육 가능 네트워크 강화: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가능 학습효과 강화: 학습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형평성 확보)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평생교육CPE센터 성과보고.

〈표 2-3-2-4〉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평가 기준

구분	영역	내용	비고
평가1	개별 프로젝트, 태도	영역별 과제 발표 등(35점) 수업 참여 태도(5점)	영역별 책임교수 평가제 도입
평가2	조별 프로젝트	조별 프로젝트(15점) 현장답사(5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평가 강화
평가3	종합시험	5개 영역(40점)	종합시험 80점 미만 탈락
공통	출석	80% 이상 출석 필수	Pass or Fail
종합 사정		평가 1, 2, 3 합산(100점 기준) 80점 미만 탈락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평가실시 계획.

셋째, 현안 연수로는 충북 평생학습 심포지엄과 문해교육 교·강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충북 평생학습 심포지엄은 평생교육의 새로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북지역 관계자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문해교육 교·강사 워크숍은 2013년 추진된 문해교육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 새롭게 개설된 중학교 과정에 대한 현안 공유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교·강사의 전문역량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교·강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넷째, 국내외 테마 연수는 국내·외 평생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평생교육 정책 및 운영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국외 연수에서는 세미나 및 현장설문조사, 조별 분임토의 등을 통해 연수의 질을 제고하였고, 현지 기관 및 연수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 현장 연수에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하여 일반인들이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2-3-2-5〉 국내외 테마 연수 추진 현황

구분		2013년	
국외 연수	연수국가	〈하계〉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동계〉 일본(큐슈지역)
	연수일정	8. 23(금)~8. 31(토)	11.12(화)~11.16(토)
	참가인원	35명	29명
	주요 방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르웨이 성인교육협회</li> <li>• 노르웨이 노동자교육협회</li> <li>• 스웨덴 국가교육청</li> <li>•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li> <li>• 성인교육위원회</li> <li>• 스웨덴 국가청소년청</li> <li>• 탐페레 성인학습센터(TAKK) 및 탐페레 시청</li> <li>• 이라비안란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미모토 평생학습 추진센터</li> <li>• 오이타현사외교육위원회 사회교육종합센터</li> <li>• 하카타 시민센터</li> <li>• 청춘학교</li> </ul>
국내 연수	장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제천	
	연수일정	10. 18(금)	
	참가인원	87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평생교육OPE센터 성과보고



## 4. 향후 과제

평생교육관계자 연수의 지속가능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

첫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제시된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는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 정보 제공, 상담·교수, 그밖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로 광범위하다. 2013년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 관련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직무만큼 그들의 요구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연수 운영 시스템으로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대상별(소속기관별, 경력별) 직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시 연수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연수의 전문화·차별화 및 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연수 협력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013년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외 11개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연수 사업 또한 각각 추진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반 확대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제각각 연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협력 운영 모델을 통해 연수의 중복성을 지양하면, 운영 인력 및 비용 절감 등 연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수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통한 학습 효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해 업무와 연수가 상시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수과정별 전문 교·강사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강사의 질을 넘을 수가 없다.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분야에서는 전문성 있는 교·강사의 인프라가 미흡하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동시에 교·강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평생교육CPE센터 성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평생교육 연수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대상별 평생교육 추진 현황

---



- 제1절 성인문해교육
- 제2절 직업능력개발
- 제3절 다문화 평생교육
- 제4절 여성 평생교육
- 제5절 노인 평생교육
- 제6절 군 평생교육
- 제7절 농·어업인 평생교육
- 제8절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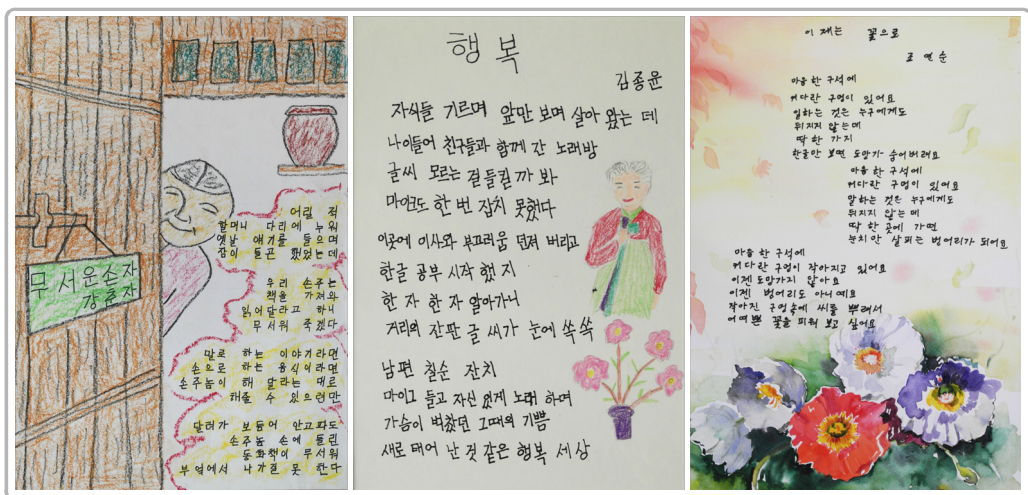


## 제1절 성인문해교육

### 1. 사업 개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다수이지만, 국내에는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기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성인이 있다. 어려서부터 시작한 식모살이에 주인집 아들 마중만 갈 수 있었던 학교는 꿈같은 존재이며, 나이가 든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손자가 들고 온 동화책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 이 사연은 201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한 문해학습자의 이야기이다.

국내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국립국어원, 2008).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 인구는 약 5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가 성인문해교육의 잠재적 수요자이다(통계청, 2010).



[그림 3-1-1-1] 201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작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주재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는 국내에 살고 있는 약 144만 명의 외국인주민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문해학습자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문해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거점기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저학력 성인학습자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성인문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해교육 학습자 참여 촉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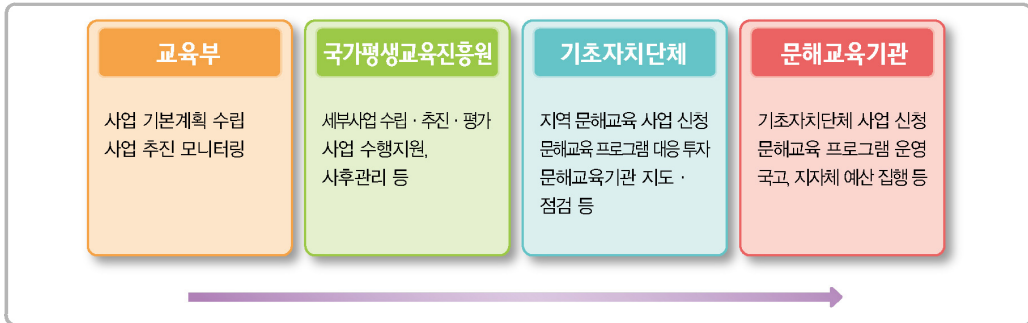
### 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성인학습자에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강사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지자체, 학교 등) 및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 문해교육기관에게 지원되며,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지원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다양한 문해교육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신청서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참여 문해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1-1-2]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체제

2006년부터 추진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8년차로 매년 18여억 원씩 지원되었으며, 연 평균 16,000여 명의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06년에 61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78개 문해교육기관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국의 절반에 이르는 130개 기초자치단체와 261개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는 지역 선도 사례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거점기관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 권역별로 19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표 3-1-1-1> 2006~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참여 현황

연도	지원 금액 (백만 원)	학습자 수* (명)	참여 지자체 (개)	문해교육기관 (개)	지역거점기관 (개)
2006년	1,375	14,668	61	178	-
2007년	1,800	21,294	108	356	-
2008년	2,000	25,579	118	439	-
2009년	2,000	24,638	130	353	23
2010년	2,000	23,778	134	348	27
2011년	1,800	20,135	129	360	24



연도	지원 금액 (백만 원)	학습자 수* (명)	참여 지자체 (개)	문해교육기관 (개)	지역거점기관 (개)
2012년	1,500	16,334	107	189	39
2013년	1,950	19,745*	130	261	19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 기준 학습자 현황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및 내부자료.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사업의 질 제고 및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평가절차'를 두어 한 해 동안 지원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학습자 지원 전략',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조기에 사업 공모와 교부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시의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4년 지원대상 기관의 60% 내외를 2013년에 선정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였다. 지역거점기관은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계획을 3개년으로 수립하고, 지역 문해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은 교육수준별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문해 3단계, 중학수준으로 구분된다. 2013년 사업에 총 964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이 중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은 494개(51.2%)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문해교육 학습자는 문해 1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5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1-1-2〉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수준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단위: 개, (%)

구분	문해 1단계	문해 2단계	문해 3단계	중학교 수준	합계
프로그램	494 (51.2)	233 (24.2)	150 (15.6)	87 (9.0)	964 (100.0)
학습자	9,438 (52.0)	4,214 (23.2)	2,773 (15.3)	1,729 (9.5)	18,154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 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전체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 혼합 프로그램이 5.6%, 외국인 프로그램이 4.5%를 차지하였다.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에는 16,15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단위: 개, (%)

구분	내국인 프로그램	외국인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대상자 혼합	합계
프로그램	844 (87.5)	43 (4.5)	18 (1.9)	5 (0.5)	54 (5.6)	964 (100.0)
학습자	16,151 (89.0)	55 (0.3)	671 (3.7)	273 (1.5)	1,004 (5.5)	18,154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습자가 여성으로 2012년에는 96.4%(14,420명), 2013년에는 95.1%(16,731명)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 및 70대 학습자가 2012년에는 9,612명(64.2%), 2013년에는 11,480명(6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1-1-4〉 2012~2013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현황\*

단위: 명, (%)

연령대	남		여		합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대	77	132	677	635	754(5.0)	767(4.4)
30대	77	101	370	453	447(3.0)	554(3.2)
40대	74	98	536	565	610(4.1)	663(3.8)
50대	100	187	2,485	2,667	2,585(17.3)	2,854(16.2)
60대	96	145	4,655	5,245	4,751(31.7)	5,390(30.6)
70대	83	143	4,778	5,947	4,861(32.5)	6,090(34.6)
80대 이상	20	33	905	1,198	925(6.2)	1,231(7.0)
기타**	16	20	14	21	30(0.2)	41(0.2)
합계	543 (3.6)	859 (4.9)	14,420 (96.4)	16,731 (95.1)	14,963 (100.0)	17,590 (100.0)

\* 2012~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설보고 기준(중복 수강 학습자 제외)

\*\* 기타: 다문화 가정 자녀, 10대 등, 연령 확인 불가 사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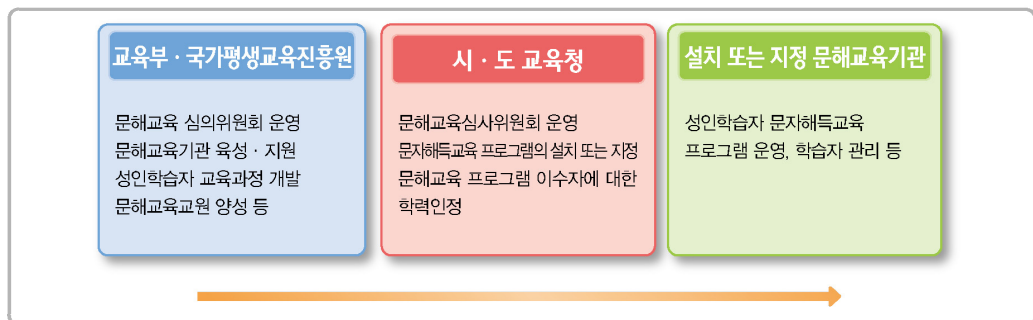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 나.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는 18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시·도교육청이 설치 또는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 76조에 의거하여 문해교육 전반에 걸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문해교육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교육법」 제70조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하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전문가를 기반으로 문해교육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하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학습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충족여부 심사과정을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을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치·지정받은 문해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 관리를 통해 학습자들을 관리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3-1-1-3]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2011~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의 기반을 완성하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 기회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 협의회,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 양성, 중학교과정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2011년 사업에서는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여, 전국 42개 기관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설치·지정되었다. 2013년에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의 134개 문해교육기관 4,700여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으며, 지난 3년간 1,295명의 학습자가 초등학력 인정을 받았다.

〈표 3-1-1-5〉 2011~2013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체제 현황

단위: 개, 명

교육청명 (총 17개)	2013년		연도별 학력인정자 수			현재 학력인정 프로그램 등록생 수			
	설치 기관 수	지정 기관 수	2011년 (12월)	2012년 (2·8월)	2013년 (29월)	1단계	2단계	3단계	학습자 수
서울시 교육청	17	23	0	354	433	391	457	620	1,468
부산시 교육청	13	-	-	-	-	137	257	-	394
대구시 교육청	10	0	0	56	102	초 125 중 90	-	초 151 중 30	초 276 중 120
인천시 교육청	-	2	-	-	-	60	-	-	60
광주시 교육청	2	2	-	-	-	초 60 중 29	25	26	초 111 중 29
대전시 교육청	0	1	58	41	-	-	-	41	41
울산시 교육청	-	-	-	-	-	-	-	-	-
경기도 교육청	6	19	-	16	126	210	300	357	867
강원도 교육청	-	-	-	-	-	-	-	-	-
충청북도 교육청	-	1	-	-	-	-	-	11	11
충청남도 교육청	1	18	0	18	80	225	227	136	588
전라북도 교육청	-	-	-	-	-	-	-	-	-
전라남도 교육청	1	12	-	-	-	282	155	115	552
경상북도 교육청	-	5	-	-	-	114	36	-	150
경상남도 교육청	-	-	-	-	-	-	-	-	-
제주도 교육청	-	1	-	-	11	21	42	6	69
세종시 교육청	-	-	-	-	-	-	-	-	-
합계	50	84	58	485	752	초 1,625 중 119	1,499	초 1,463 중 30	초 4,587 중 149
	134개		1,295명			4,736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2006~2007년에는 성인학습자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소망의 나무(1단계)’, ‘배움의 나무(2단계)’, ‘지혜의 나무(3단계)’, 총 12권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중학 학력인정을 위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성인문해 교과서를 총 15권을 개발하였다. 2013년에는 2006년에 개발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총 12권), 교사용 지도서(총 3권), 워크북(총 3권)에 대해 교과 내용의 시의성, 계열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단원체계를 재구성하고 교육내용 재편하는 등 전면개정을 추진하였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는 성인 학습자가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담당 교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문해교육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초·중·고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참여 자격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기본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80시간 이상 문해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력자와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6일, 현장실습 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과정은 참여 자격에 따라 2개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문해교육기관에서 3년(480시간) 이상 근무한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3일 집합교육이 있으며, 평생교육사 또는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해교육 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는 3일 집합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있다.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중학과정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6호, 성인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이 있다. 또한 중학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과서 개발 등 제반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이 추진되었다.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중학과정 문해교육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재량과목) 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3일과, 현장실습 2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이후, 문해교육교원은 1,783명이 되었으며,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은 1,676명,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은 107명이었다.

〈표 3-1-1-6〉 초등·중학 문해교육교원 양성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초등과정 교원	60	267	123	341	543	342	1,676
중학과정 교원*	-	-	-	-	-	107	107

\*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운영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표 3-1-1-7〉 2013년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연도	연수과정	이수자 수	누적 이수자 수
초등과정	기본과정	37	37
	기본과정(제주도)	70	107
	심화과정(1기)	38	145
	심화과정(2기)	36	181
	심화과정(3기)	38	219
	심화과정(4기)	30	249
	심화과정(5기)	39	288
	심화과정(6기)	27	315
	심화과정(7기)	20	335
	심화과정(8기)	7	342
소계		342	
중학과정	제1기	52	52
	제2기	35	87
	제3기	20	107
소계		107	
총 인원		449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 다.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문해교육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대한 격려 및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세계문해의 날(9월 8일)을 전후로 ‘대한민국 문해주간(9월 6일~12일)’을 정하고, 전국 37곳에서 동시에 시화전을 개최하여 문해교육을 집중 홍보하였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는 총 5,992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1차 지역거점기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06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최우수상) 10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우수상) 15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우수상) 15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장려상) 66명에게 시상하였다.

## 3. 사업 운영 성과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는 성인문해교육 성과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와 문해교육기관에서 한 해 동안 운영한 사업 성과, 프로그램 질 관리 및 학습자 지원 체제,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의 영역을 바탕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약 60%의 기관은 2014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년 선정된 지역거점기관은 사업 신청 시 3개년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년차 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거점기관 간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해 ‘상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거점기관의 전문성 향상, 사업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지역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기관의 네트워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역량을 진단해보고, 향후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는 수혜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교육청 문해교육관계자 워크숍,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이슈별 주요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운영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2011년 58명에서 2013년 752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전국에 1,295명의 학습자가 학력인정을 받게 되었다.

#### 4. 향후 과제

향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문해학습자의 안정적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국립국어원의 국민 기초문해력 조사(2008)와 인구주택총조사(2010)를 통해 잠재 수요자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취득한 학력 수준을 통하여 문해 수준을 추정하는 자료이며, 실제 국민의 문해수준은 2008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문해능력에 따른 문해잠재수요 파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3년 국민기초문해력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2014년에는 본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인문해교육의 신문해계층(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고려한 수요자 파악 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문해력' 조사를 통해 문해교육 신문해 계층 대상별로 조사하고,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문해교육기관의 규모, 운영 현황, 프로그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해교육기관 실태 조사 등도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 지원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적 문해교육 지원 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 학습자 학력인정체제의 확대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문해교육



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2013년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는 11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시·도 지역은 문해학습자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문해학습자가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추진 주체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교육청, 지역 문해교육 현장이 성공적인 운영 사례와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단계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3년 대한민국 문해주간 선포'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학습자의 실질적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문해교육 필요성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문해주간'에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의 문해교육기관이 다양한 매체에 '문해교육'을 홍보하여, 200여건이 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문해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문맹'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어원(2008). 국민 기초문해력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안전행정부.



## 제2절 직업능력개발

### 1. 사업 개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제도는 1970년대 공공 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에는 모든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향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시장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였다(고용노동부, 2013a). 2010년부터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에는 2002년부터 시작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학습모듈의 개발 확대,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다.

### 2. 사업 추진 현황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재직자훈련(향상훈련)과 실업자훈련(양성훈련)으로 구분한다(고용노동부, 2013b). 재직자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자 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준다.

아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에는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관학교 등이 있다. 재원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충당된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내일배움카드제는 308,000명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2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재직자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 근로자직무향상으로 세분화되며, 고용보험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2012년도는 유급휴가훈련(10,791명)을 포함한 사업주훈련이 3,190,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의 3,016,000명(유급휴가훈련 11,257명)보다도 다소 증가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2011년의 252,000명에서 2012년에 272,000명으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은 2011년 34,000명에서 2012년 38,000명으로, 근로자직무향상교육은 2011년 292,000명에서 2012년에는 165,000명으로 나타났다.

〈표 3-1-2-1〉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및 실시인원

구분	사업명(훈련대상)	재원	비고
실업자 직업 능력 개발	내일배움카드제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일반회계, 기금	• 내일배움카드제 (2011년 368,000명 → 2012년 308,000명)
	국가기간전력직종훈련(실업자)	고용보험기금	• 국가기간전력직종훈련 (2011년 25,000명 → 2012년 29,000명)
	취업사관학교(위기청소년)	일반회계	• 취업사관학교 (2011년 111명 → 2012년 127명)
	지역실업자		• 지역실업자 (2011년 1,699명 → 2012년 693명)
재직자 직업 능력 개발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근로자직무향상	고용보험 기금	• 사업주훈련 (2011년 3,016,000명 → 2012년 3,190,000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11년 252,000명 → 2012년 272,000명)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2011년 34,000명 → 2012년 38,000명) • 근로자직무향상 (2011년 292,000명 → 2012년 165,000명)

출처: 고용노동부(2012), 2012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2013a), 2013 고용노동백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다음 표와 같이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구분된다. 2012년 공공훈련기관에는 한국폴리텍대학(34개소)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1개소)이고, 민간훈련기관에는 사업주단체, 평생교육시설, 고용부 지정시설, 고용부 훈련법인 등 6,390개 소로 2011년의 7,014개소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표 3-1-2-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단위: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전체	7,049		6,425	
공공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폴리텍대학(34)</li> <li>한국기술교육대(1)</li> </ul>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폴리텍대학(34)</li> <li>한국기술교육대학교(1)</li> </ul>
민간	7,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 지정시설(874)</li> <li>고용부 훈련법인(55)</li> <li>학원(2,655)</li> <li>사업주 단체 등(1,769)</li> <li>평생교육시설(896)</li> <li>학원 전문대 등 기타(765)</li> </ul>	6,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 지정시설(797)</li> <li>고용부 훈련법인(54)</li> <li>학원(2,097)</li> <li>사업주 단체 등(1,888)</li> <li>평생교육시설(834)</li> <li>학원 전문대 등 기타(720)</li> </ul>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 수입

\*\* 장애인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기관 제외함

출처: 고용노동부(2012). 2012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2013a). 2013 고용노동백서.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임금근로자의 1년간 교육·훈련의 경험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2년(27.2%)보다 2013년(46.9%)에 그 비율이 좀 더 높았다(통계청, 2013).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2012년에는 36시간이었지만, 2013년에는 34시간이었다. 교육·훈련 경험 비율과 평균 교육·훈련 시간 모두 정규직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2-3〉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2012년 8월		2013년 8월	
	교육·훈련 경험있음**	평균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경험있음**	평균 교육·훈련 시간***
임금근로자	37.2	36	46.9	34
정규직	41.4	39	51.5	36
비정규직	28.8	30	37.3	28
- 한시적	33.9	28	45.4	25
·기간제	37.3	28	48.5	25
·비기간제	20.6	31	32.8	24
-시간제	18.0	22	26.1	22
-비전형	28.0	32	34.2	29

\*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임

\*\* 각각의 근로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 및 비용 부담 주체임

출처: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2013. 10. 24. 보도자료.



실업자직업능력개발은 2012년도에 33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1년의 394,000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다. 실업자훈련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신규실업자훈련 81,000명, 전직실업자훈련 227,000명, 지역실업자훈련 700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9,000명 등이다.

〈표 3-1-2-4〉 연도별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인원

단위: 천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훈련인원	107	102	117	113	153	304	394	337

출처: 고용노동부(2013a), 2013 고용노동백서.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의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전직실업자훈련은 226,617명으로 2011년의 279,733명보다는 다소 감소하였다. 신규실업자훈련은 80,993명, 고용촉진훈련은 693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28,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의 훈련실시인원은 337,182명으로 취업률은 24.1%이었다.

〈표 3-1-2-5〉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현황\*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전직실업자훈련	57,635	88,094	111,159	206,738	104,426	279,733	151,131	226,617
신규실업자훈련	16,680	25,885	43,969	78,330	44,480	88,602	70,523	80,993
고용촉진훈련	8,208	8,075	544	1,220	566	713	523	693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9,000	20,530	12,327	17,309	18,940	25,199	22,470	28,879

\* 2006년부터 실업자재취업훈련은 전직실업자훈련, 취업훈련은 신규실업자훈련, 정부위탁훈련은 우선선정직종훈련으로 명칭이 바뀜(우선선정직종훈련은 201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됨)

\*\* 2009년도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원 미포함, 2010년도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원 포함

\*\*\* 2012년 신규실업자훈련 광특포함

출처: 고용노동부(2013a), 2013 고용노동백서.



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도 정부는 직무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이 현장(일)에 맞게 운영 되도록 하는 연결기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2002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병원행정 등 68개(1차), 숙박기획·개발 등 182개(2차) 등 250개 NCS를 개발 중에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또한 정부는 2013년 9월에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 기업 현장에서 체계적인 이론·실무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 '일 기반 학습'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도입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현장 적합성이 낮은 교육으로 인해 인력 미스매치, 청년 실업 및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력 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실무 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51개 기업을 1차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표 3-1-2-6〉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 참여 기업 현황

단위: 개, 명

분야	기업 수	훈련 인원	평균훈련 인원	비고
합계	51	362	7.1	명장기업 6개
소프트웨어 분야	16(31.4%)	101(27.9%)	6.3	
기계 분야	23(45.1%)	167(46.1%)	7.3	명장기업 4개 포함
금형 분야	7(13.7%)	53(14.6%)	7.6	명장기업 1개 포함
로봇·반도체·기타 분야	5(9.8%)	41(11.3%)	8.2	명장기업 1개 포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The HRD Review. 16권 6호, p. 234.

### 3. 사업 운영 성과

2010년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산업현장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a).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002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286개 직무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4년까지 모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학점이나 학위로 인정하여 '선취업-후학습'의 경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 학점인정제를 도입, 운영(2012년 12개 기관, 16개 과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51개의 시범 참여 기업을 선정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기업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에는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10,000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4. 향후 과제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개인의 자율적인 교육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직자와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기초 생활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사전상담 의무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특화과정의 확대와 함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사업이나 학습휴가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습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산업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학교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에서의 교육이 산업체의 직무내용과 연계되어 학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재직자나 실업자, 취약계층 등의 직업훈련도 산업체 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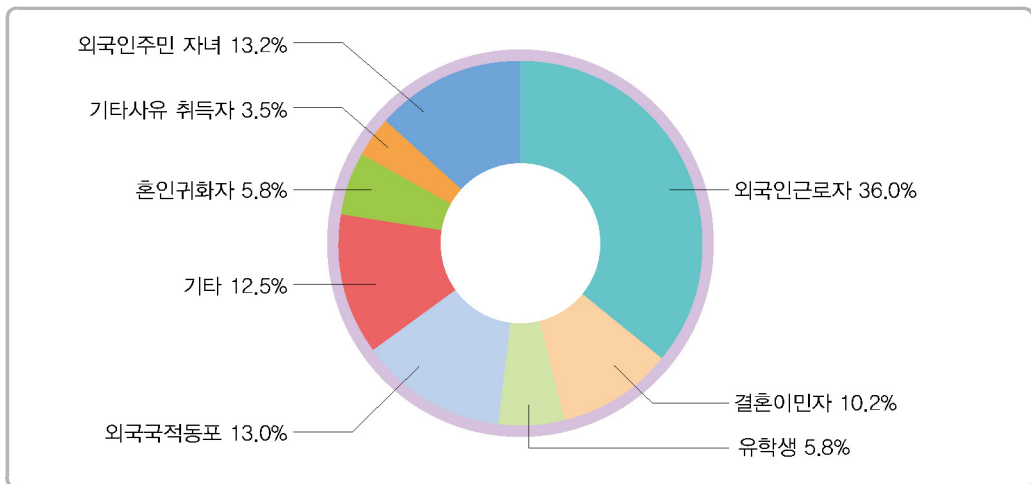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2012). 2012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3a). 2013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3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3. 10. 2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The HRD Review. 16권 6호.



## 제3절 다문화 평생교육

### 1. 사업 개요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국내외 사회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이주민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3%에 달하는 144만여 명(귀화자 포함)에 이르며(안행정부, 2013), 이는 지난 2001년의 57만 명 대비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유형별로도 단기체류자인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희망하는 장기 혹은 영구거주 이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학생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 재학생의 1%(약 7만여 명)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교육부, 2013).



[그림 3-1-3-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이들의 국내 적응지원과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및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주요 정부부처의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현황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및 관계부처 종합지원을 담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3년 여가부, 교육부를 포함한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은 크게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가부의 경우 관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215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구성원(특히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자녀) 대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비롯하여, 복지, 상담,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공무원, 경찰, 다문화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로 다문화이해교육을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거점, 일반운영기관(263개)을 통해 성인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 중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생활 주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교육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교육부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 동향은 2012년 3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과 이 방안을 모태로 2013년 3월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sup>1)</sup>’을 통해 기본적인 골격과 성격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은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정책방향 수립, 다문화학생의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라는 세 가지 추진배경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정책과제인 ① 공교육 진입을 원스톱 서비스, ②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③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④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각 과제별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정책과제의 기본 목표와 주요 세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증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다문화 예비학교(2013년 글로벌 선도학교 ‘예비형’ 변경)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안내 및 학교 편입학 관련 서류준비 및 학교배정(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학사상당 지원 등 다문화학생의 입국부터 학교적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2년 한국어(KSL)교재를 개발하였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 선도학교 연구형(32개교)을 통해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이 1:1로 멘토, 멘티로 활동하는 다문화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 다문화교육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에서 2013년 3월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의 기본 골조는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이중언어능력을 높이고, 결혼이주여성의 자립능력 신장을 지원하였다.

셋째,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문화학생 및 일반학생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선도학교를 지원하였다(집중지원형, 거점형, 예비형, 연구형 2013년 200개교). 또한,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교원 및 학교관리자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부모들의 자녀양육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추진의 허브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다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다문화전담부서 지정 및 신설,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다문화교육센터의 설치·지정 운영, 그리고 지역단위 다문화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정부부처의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3-1〉 주요 부처별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추진체계	중앙·지역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글로벌선도학교(200개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다문화가족본부,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2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78개)
정책계획	2013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계획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정책초점	다문화학생 공교육진입지원, 다문화친화형 학교환경 구축	다문화가족 구성원 복지, 상담, 언어교육 지원	이주민 초기 정착 지원
주요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관리자, 교강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영유아 자녀, 다문화가족 구성원	이민자
주요 정책산업	글로벌선도학교 지원, 한국어(KSL) 교육과정운영 지원, 다문화학부모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다문화인식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해피스타트프로그램



### 3. 사업 운영 성과

2013년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 등 이주민들의 초기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학생의 원활한 학교교육 적응을 위해 한국어(KSL) 재 개발 및 보급, 해당 교육과정 도입 및 시범운영,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입학절차 안내자료의 개발 및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도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와 기능(2013년 215개)을 확대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일반인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최근까지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은 대부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일반인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기획,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글로벌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학생·다문화학생의 상호이해 및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산하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일반인 대상 다문화인식 제고 동영상 시리즈(4부작, 너와 내가 만날 때)를 EBS 지식 e채널로 개발, 보급해 나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공무원 및 다문화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4. 향후 과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사회는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실태임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 대응해 나간다면 ‘다문화사회’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자양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범 정부 차원에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교육 정책사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만, 해당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현장 지향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비전과 방향을 담은 다문화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이나 여가부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등 현재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정부부처의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이나 철학적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현안 중심으로 정책들이 입안,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교육이 일부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정착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진행된다든지, 해외 문물이나 특정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한정되거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나친 시혜적 차원의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며, 이를 반영한 중장기 다문화교육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관련부처별 추진체계와 업무의 연계, 통합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정책사업들을 주관하는 관련부처들이 늘어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내용과 시스템의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사업들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속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교육대상으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이해교육, 자녀양육교육, 가족통합교육 등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산재,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정작 정책수혜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을



입안, 수행하는 관련 정부부처 간, 더 나아가 일선 교육현장 간의 면밀한 협의와 조율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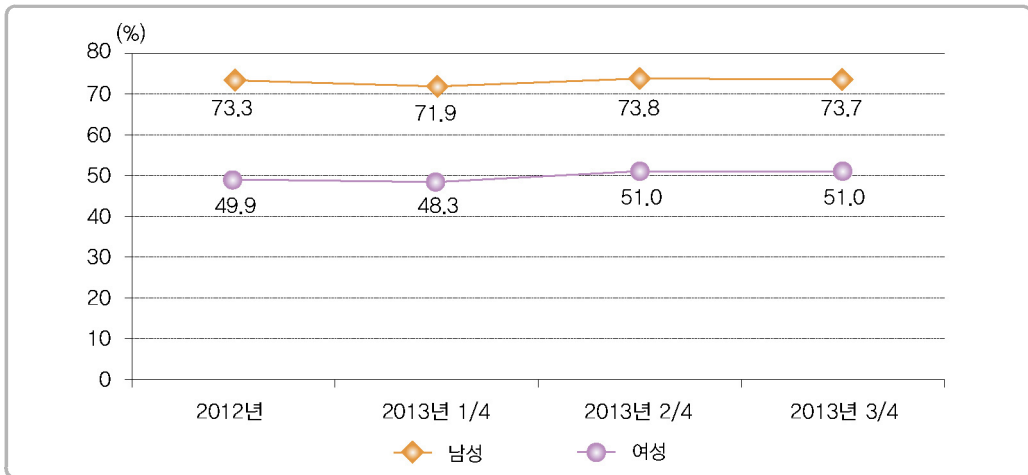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서울: 교육부.
- 법무부(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서울: 법무부.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서울: 안전행정부.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제4절 여성 평생교육

### 1. 사업 개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및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글로벌 정책 목표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6~65세)은 OECD 가입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2013년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6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남녀 간에는 약 23%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통계청(2012~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4-1] 2012년, 2013년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GDP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30·40대 여성들의 집단적 경력단절현상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원인과 재취업 장애의 요인을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취업관행이라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촉진법」<sup>1)</sup>을 2008년에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이를 국정과제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2009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사업방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sup>2)</sup>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사업의 기본적 방향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 전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고하여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를 지정·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새일센터 사업 추진 경과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정·운영하는 여성 종합 취업지원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 2007년 4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08년 5월에 통과됨.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교육내용과 실적자료는 여성가족부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함.



〈표 3-1-4-1〉 새일센터 주요 사업내용

지원 범위	주요 내용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및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여성 인턴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 ※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현황, 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
사후관리	취업 후 직장 적응 지도, 일·가정 양립 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p.90)를 바탕으로 재구성.

새일센터는 2009년 2월에 5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경제위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09년 7월에 2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5개소, 2011년 1월 13개소가 추가되어 전국적으로는 90개소가 지정·운영되었다. 2012년에 10개소가 더 지정되었고, 2013년에는 지역별로 20개의 새일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총 120개의 새일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다.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새일센터에 배치된 전문직업상담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개별 직업상담을 실시한 후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신청 및 선발 절차를 거친 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자녀여성(세 자녀 이상), 장애여성,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훈련생 선발 시 우선 대상이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취업이 용이한 사회서비스 직종, 녹색 관련 직종, 전문직종, 지역산업 유망직종 등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직장 과 단절된 경력단절여성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직업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4-2〉 경력단절여성 대상 세부 교육과정

교육과정	세부내용 범위	주요 교육과정
일반	취업유망과정	• 방과 후 지도사 과정, 생태문화체험지도사, 친환경패션리폼 전문가, 제빵기능사 및 바리스타양성과정, 어린이 영어지도사
	신성장 녹색성장	• 도시농업코디네이터 양성, 숲해설가 양성, 자연생태 아동지도사, 천연염색전문지도사, 도시농업지도사, 생태여행기획가
	전문	• 컴퓨터설계실무, 탄소소재생산 전문인력양성, 오피스종합실무자, 기계설계사무원 양성과정
	지역특화	• 프리미엄피커, 리크루팅 컨설턴트, 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바이오품질관리사, 향만물류전문인력, 태양광 산업품질 전문인력, 자동차부품산업 설계디자인 인력양성
취약	중고령여성	• 실버케어, 영유아 건강돌보미, 실버건강관리사, 노인건강 여가지도사, 문화체험해설사, 실버케어전문가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전문강사, 세계문화체험 해설사, 의류수선리폼전문가, 다국어 아동요리강사, 관광가이드 자격증 과정
	장애여성	• 한복제작 및 소품제작교육, 한지공예직업교육, 컨택센터 상담교육, DIY 공예전문가 양성과정
	북한이탈여성	• 무역사무원 양성, 중국어 관광통역원, 한식조리전문가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2009년부터 시작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사업’은 2011년 총 310개 과정에서 교육인원 7,084명 중 6,567명이 수료하여 92.7%의 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1년에 수료한 인원 중 약 3,899명이 취업하여 59.4%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까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연 인원은 총 29,858명으로 27,620명이 해당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중 15,914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57.6%의 취업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3-1-4-3〉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단위: 명, %

구분	교육 인원(a)	수료 인원(b)	수료율 (b/a)	취업 현황					
				소계(c)	상용	계약	일용	창업	취업률(c/b)
2009년	4,378	4,133	94.4	2,232	1,638	-	594	-	54.0
2010년	9,256	8,508	91.9	4,640	3,005	-	1,433	202	54.5
2011년	7,084	6,567	92.7	3,899	2,124	659	976	140	59.4
2012년	9,140	8,412	92.0	5,143	2,617	908	1,456	162	61.1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총체적·전문적 취업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촉진하였다.

### 3. 향후 과제

지난 5년간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국내 여성취업률의 상승을 저해하는 주요 집단인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정책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은 상당히 많은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한 여성들 중 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는 부분은 이런 직업훈련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인 취업플랜이 부족하다. 현재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3개월의 직업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취업에 연계하는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2~3년, 장시간의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단기간의 직업훈련과 직업적응기간을 거쳐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망직종 발굴과 취업을 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및 전략산업 진흥과 연계한 지역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과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중·고령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 여성가족부(2012). **2011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제5절 노인 평생교육

### 1. 사업 개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 생활지원 차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방안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노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사업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교육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노인생활 지원의 측면이 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크게 노인평생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평생교육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된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노인자원봉사사업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노인평생교육사업

한국에서 노인이 '교육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민간노인교육단체에 의해 운영되던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이혜연·김기석, 2009). 이후 1987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노인교육정책 지원이 문교부의 사회교육국 담당업무에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국으로 이전된 이래 대부분의 노인 관련 사업 및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지원 하에 있다. 노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부터이며, 초기 노인



교육 정책의 대상이었던 노인교실도 현재에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규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199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노인교육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노인이 ‘교육정책’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그러나 노인평생교육시설들은 보건복지부 감독 하에 그대로 있으면서 노인 평생교육정책 조정 기능만 수행하게 되면서 부처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노인 평생교육정책 조정 기능도 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로 통합·축소되었고, 2008년부터는 노인 평생교육 업무 직제가 폐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1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보건복지부, 2013a), 이 세 유형의 시설 모두 일정 부분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의 교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가 노인복지관 사업 중 하나로 평생교육적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며, 교육보다는 여가 기능에 치우쳐 있지만 최근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처음 초등학교 학구단위의 노인평생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에는 여가활동과 교육이라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및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평생교육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시설이다. 노인교실은 실제로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일괄 등록되고 있다.



## 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정지원 사업과 자립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나뉜다. 사회공헌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으로 구분되고, 시장진입형 사업은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자립형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과의 협력과 공동투자를 통해 노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모델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누어진다.

〈표 3-1-5-1〉 노인일자리사업 영역

사업 영역		
재정지원 사업	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진입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자립형 사업	창업모델형	
	시장자립형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통계동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을 위하여 2013년 5월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3).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 유형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소양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나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형은 각 6시간,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필요시 6시간을 교육한다. 직무교육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습득이나 실습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형 외의 유형은 각 8시간 이상, 교육형은 16시간을 이수한다. 보수교육은 교육형, 복지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교육내용은 안전교육 20.9%, 사업 및 정책소개 20.2%, 직무교육 12.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 다.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의 사회참여가 강조되면서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법률에는 「노인복지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위촉 및 업무)는 노인자원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법적 성격으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특화된 내용은 없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자원봉사 관련 법률은 노인층의 자원봉사에 특화된 법률과 자원봉사활동에 특화된 법률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앙 행정체계는 노인 연령계층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분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5-2〉 보건복지부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전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의 지식·경험·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신규 30개, 우수 8개) 개발·보급</li> <li>독자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 리더 양성 프로그램</li> </ul>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li> <li>역량 있는 리더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1,352개 클럽 구성, 클럽코치 2,000명 등 참여)</li> </ul>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 2012년도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li> </ul>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및 소개</li> <li>전국 노인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소개 및 안내</li> <li>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각종 자료 공유 및 의견 제시</li> <li>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관련 자료 게재</li> <li>노인 자원봉사 수기 및 사진 공모전 관련 내용</li> <li>노인 자원봉사 활동 소감, 사진 등 각종 홍보물 제작</li> <li>노인 자원봉사 관련 커뮤니티 구성·운영</li> </ul>
전문 노인 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의 기획, 사전준비, 실행 및 점검, 평가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화된 노인 자원봉사 모델 개발</li> <li>전문 자원봉사자 확보, 봉사 수요처 개발, 봉사자 교육 및 양성, 소요자원의 동원, 봉사자 관리방법 등 전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 기술을 발굴하여 매뉴얼로 제작·보급</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13b). 노인자원봉사활성화.

한편, 교육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문직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교육봉사활동 지원 사업인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사업을 추진하여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전문직 퇴직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필요한 평생교육봉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은 초기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의 지원과 연계에 의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3. 사업 운영 성과

#### 가. 노인평생교육사업

2012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335개의 노인교실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서울 352개, 부산 167개, 경기 166개 등의 순으로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a).<sup>1)</sup>

〈표 3-1-5-3〉 시·도별 노인교실 수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52	167	43	35	39	14	24	7	166	19	15	80	83	68	110	91	22	1,335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3a). 노인복지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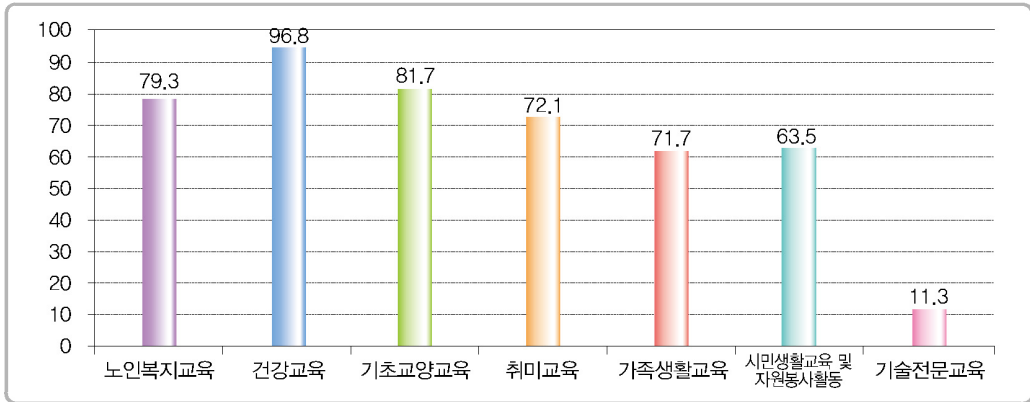
노인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교양교육, 노인복지교육 등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인교실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중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고 일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12년 12월 현재 대한노인회는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각 지역별로 전국에 328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자 수는 44,891명에 이른다(대한노인회, 2013).

1) 이 수치는 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노인교실만을 파악한 것으로, 각종 노인단체,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및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미등록 기관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3a). 노인복지시설현황.

[그림 3-1-5-1] 노인교실 프로그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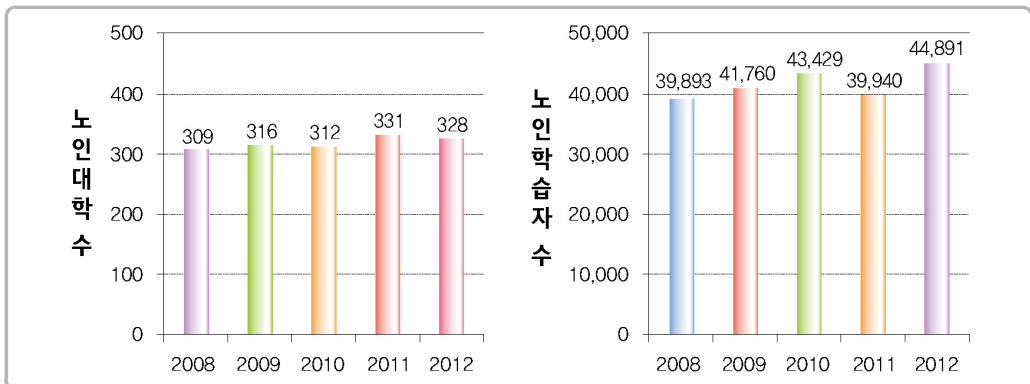
〈표 3-1-5-4〉 대한노인회 시·도별 노인대학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6	12	8	10	5	2	6	1	72	23	15	21	15	29	39	32	12	328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대한노인회(2013). 대한노인회 내부자료.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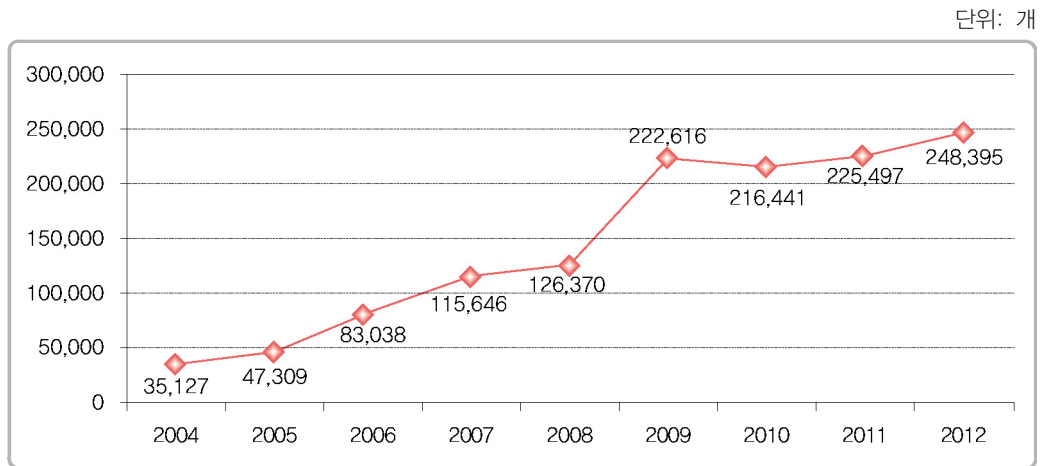
출처: 대한노인회(2013). 대한노인회 내부자료.

[그림 3-1-5-2]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및 노인학습자 수 추이



## 나. 노인일자리아업

2004년 25,000개의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시작된 노인일자리아업은 사업 시행 후, 창출된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12월 기준 248,395개의 노인일자리아를 창출하였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아통계동향.

[그림 3-1-5-3] 노인일자리아 창출 추이

사업유형별로는 다음 표와 같이 공익형 143,478개, 교육형 27,505개, 복지형 46,727개, 시장형 16,101개, 인력파견형, 9,349개, 창업모델형 89개, 시장자립형, 5,146개로 공익형과 복지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표 3-1-5-5> 사업유형별 일자리아 창출 실적

단위: 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시장자립형	합계
143,478	27,505	46,727	16,101	9,349	89	5,146	248,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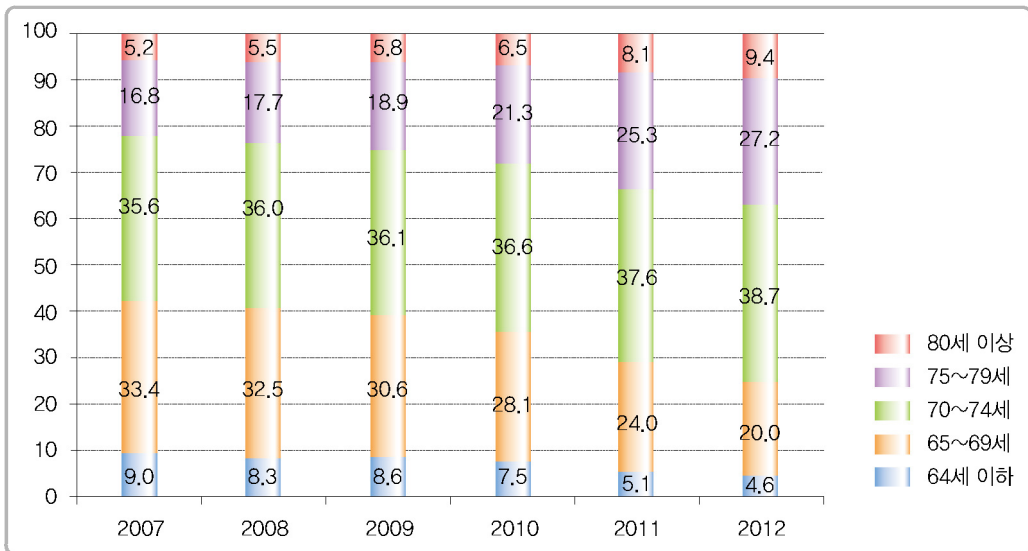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아통계동향.



2012년 12월 기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269,064명으로 평균연령은 72.9세였다. 64세 이하,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70~74세(38.7%)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75~79세(27.2%), 65~69세(20.0%)의 순으로 나타났고, 80세 이상도 9.4%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60대 참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70대 이상 참여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참여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90,973명(33.8%), 여성이 178,091명(66.2%)으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초등 학력 이하가 63.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단위: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통계동향

[그림 3-1-5-4] 연령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추이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수는 2012년 기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1,219개로 이들 기관에서 총 5,513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수행기관 수는 대한노인회가 20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관 200개, 지방자치단체 178개, 종합사회복지관 172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수는 노인복지관이 1,41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으며,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1,127개, 대한노인회 837개, 지방자치단체 68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및 사업단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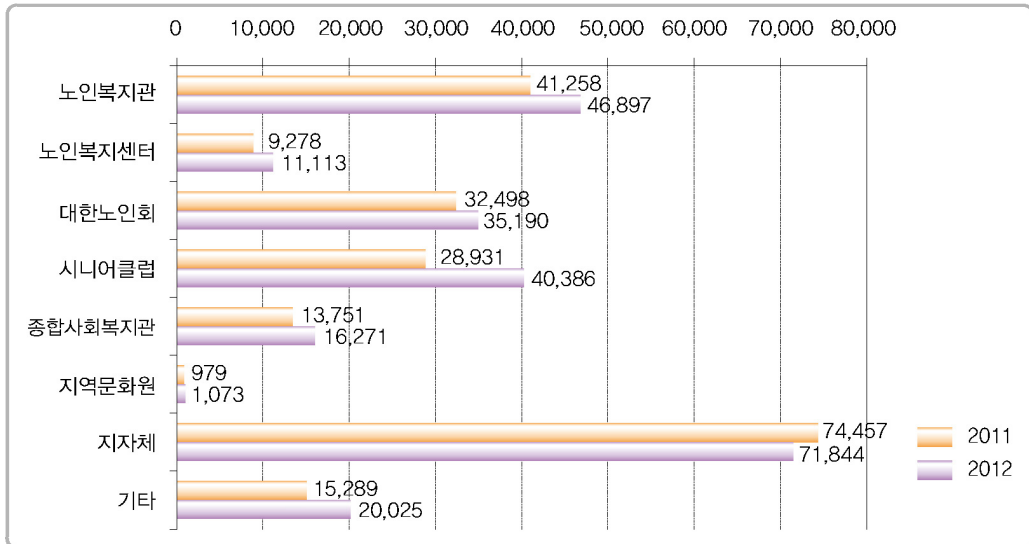
구분	노인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대한 노인회	시니어 클럽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문화원	지방자치 단체	기타	합계
기관 수	200	160	206	104	172	26	178	173	1,219
사업단 수	1,411	342	837	1,127	538	51	680	527	5,513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통계동향.

수행기관 유형별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줄고, 노인 단체들의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개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통계동향.

[그림 3-1-5-5]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유형별 일자리 창출 실적



## 다. 노인자원봉사사업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연도별 봉사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1,57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그 다음의 표와 같이 서울, 충남, 인천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1-5-7〉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연도별 봉사자 수

단위: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81	1,902	2,044	2,041	2,146	1,887	1,926	2,001	1,844	1,756	1,57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표 3-1-5-8〉 지역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자 수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82	-	100	161	136	133	64	67	86	94	175	-	115	79	100	80	1,57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주요 봉사활동 영역은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평생교육 분야의 예술 영역, 학습지도 분야의 문해교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의 영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표 3-1-5-9〉 영역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자 수

단위: 명

학습지도 분야					일반평생교육 분야				기타	계
문해교육	외국어	교과지도	방과후 학습지도	컴퓨터	상담	예술	체육	역사지도		
279	122	110	234	40	128	418	90	9	414	1,844

\* 주: 중복응답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4.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생 100세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노인교육은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세대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의 중심에서 있다. 이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비이다.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은 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시설로 구분하여 관리·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노인을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노인교육, 노인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1990년대 이후 발표된 다양한 노인교육 관련 정책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정책은 많지 않다. 따라서 노인교육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평생교육시설과 노인학습자에 대한 현황파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인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여 노인의 학습요구를 정책집행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에서도 25세 이상 64세 미만 성인학습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학습자와 노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평생교육 범주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노인교육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 노인을 교수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모두 평생교육 차원의 노인교육 범주로 포함하여 폭넓은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노인교육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일자리아업, 봉사활동사업 등을 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노경란, 2013). 일차적으로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평생학습 접근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봉사활동 참여 자체가 평생학습의 장(場)이 되어 일자리와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2011). **2010 평생교육백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3).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지역 어른신이 앞장선다**. 교육부 보도자료(2013. 5. 28).
- 노경란(2013). **학습을 통한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 학습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13차 평생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대한노인회(2013). 대한노인회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a). **2013 노인복지시설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3b). 노인자원봉사활성화.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6](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6)(검색일: 2013년 12월 5일)
- 이혜연·김기석(2009). 한국노인교육정책의 전개와 특징. **한국노년학**, 29(3), 935-95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2012년 노인일자리아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통계동향**.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제6절 군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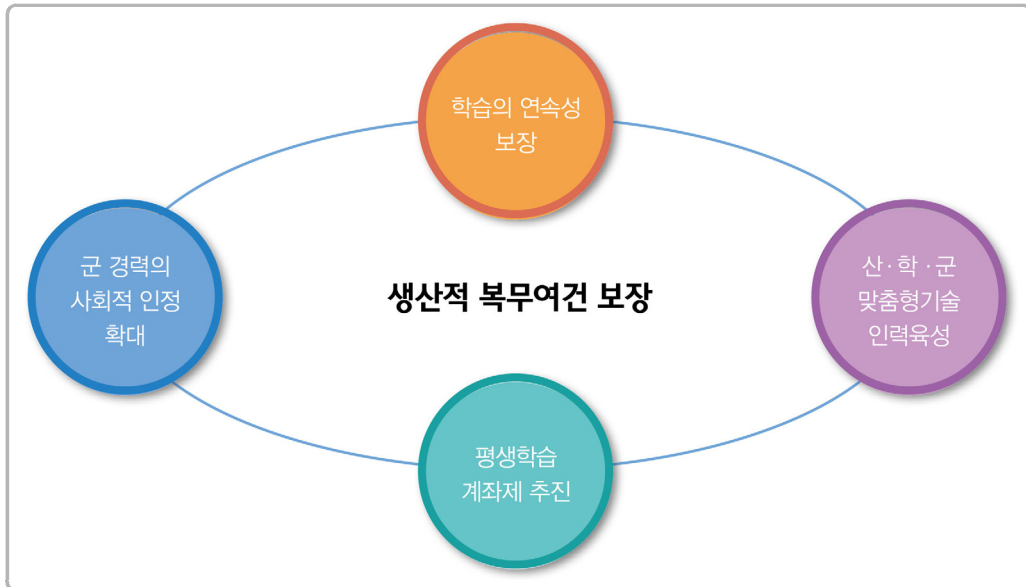
### 1. 사업 개요

군 평생학습정책은 개인의 잠재력 계발에 대한 요구 증가와 군조직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군내 평생교육체계 정립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군 복무자와 면제자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의무복무 장병의 군 복무가산점의 폐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아우르는 대안으로 군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전투형 군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국방 전문인력과 국방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인재육성, 생산적 군 복무여건 보장,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연계 체제 구축, 산·학·군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군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자기개발 학습을 통해 전역 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군무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과 e-러닝 콘텐츠 학습 등 복무 중에도 입대 전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생산적 군 복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군 평생교육의 중점사업은 학습의 연속성 보장,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평생학습계좌제에 의한 군 교육훈련 및 경험 인정, 산·학·군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 등이다. 군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 개념은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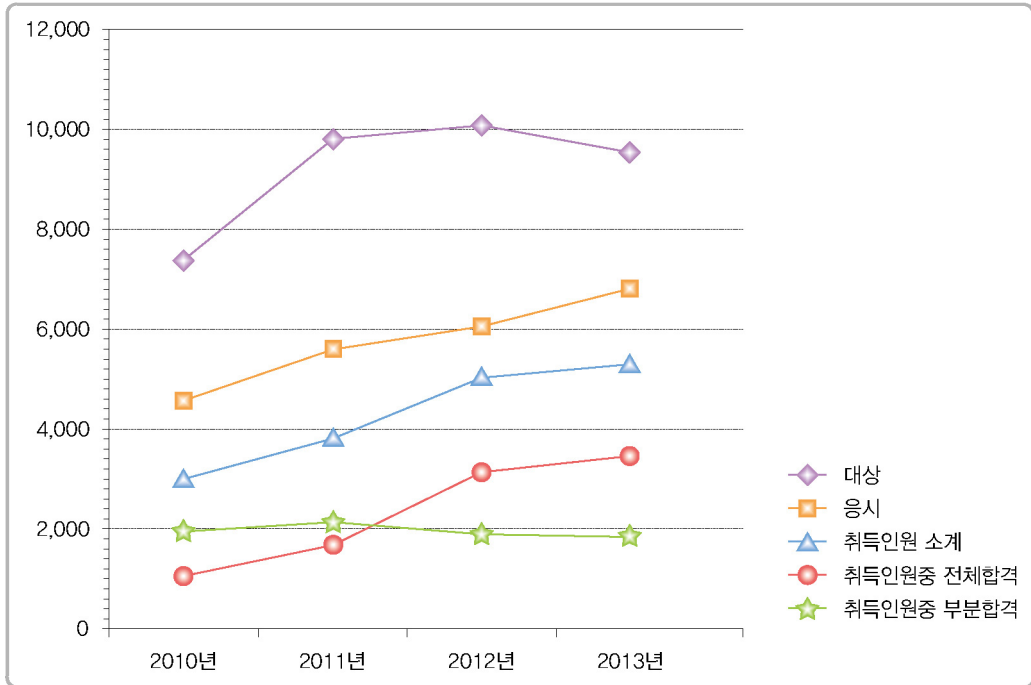


[그림 3-1-6-1] 군 평생교육 정책 추진도

### 가. 학습의 연속성 보장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군 복무가 국방의 의무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졸 미만의 학력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를 지원하며,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병사들은 학점 및 자격증 취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복무 중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미만 장병 대상으로 검정고시 취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2013년 기준 고졸 미만자는 9,500여 명이 입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개인별 학습용 교재세트(18만원 상당)를 지원하였으며, 동영상 학습콘텐츠의 무상 제공(8개 과목 819개 강좌)과 부대별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국방부(2013). 국방부 내부자료.

[그림 3-1-6-2] 고졸 미만 병사 검정고시 취득 현황

둘째,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원격강좌를 개설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원격강좌 개설대학은 2007년 5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0년 54개 대학에서 2011년 69개로 2012년에는 84개, 2013년에는 99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에 130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강인원도 2010년 5,161명에서 2011년 7,033명, 2012년에는 9,300명, 2013년에는 10,300명으로 점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원격교육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학습용 PC(48,000여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였으며, 학습용 PC사용료 전액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신장 확대를 위해 학습용 교재와 e-러닝 콘텐츠(599편, 5억 원)를 지원하고, 부대별 학습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2010년 1,068명에서 2012년에는 3,213명, 2013년에는 3,53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1-6-1〉 연차별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목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대학 수	99개	110개	130개	145개	155개

출처: 육군본부(2013). 육군본부 내부자료.

셋째, 장병 상시학습 지원을 통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외국어, 전산, 국가자격시험 등 선호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지식정보방을 개설하였다. 2012년에는 2,300여 편의 학습콘텐츠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8,275여 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장병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화영어 수강, 영어마을 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학능력 시험(TOEIC, TEPS, OPIc 등)을 응시하는 장병들이 응시료를 일정부분 할인받도록 운영기관과 연계하였다. 한편, 간부들의 자기개발과 최신 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M-kiss(Military knowledge integrated service system) 사업은 군 간부들에게 개인역량 강화, 리더십, 부대 경영에 필요한 경영기법을 제공하여 사회와 단절된 정보·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넷째, 군 우수 분야 자격화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그동안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교육과정 재설계와 자격신설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가 자격화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추진이 2012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에는 구체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헬기정비, 심해잠수, 항공장구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하였다. 장병 1인 1자격 취득 추진은 그 목표가 매년 상향 조정되었으며, 연도별 자격증 보유율도 2010년 50%에서 2011년 60%, 2012년에는 66.7%에 이르렀다. 2013년 7월 기준 다음 표와 같이 66.9%로, 12월에는 연간 목표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6-2〉 군 장병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보유자	332,525	45,175	3,794	55,586	219,806	8,164
보유율	66.9	100	100	79.9	59.9	71.4

\* 2013년 7월 기준

출처: 국방부(2013). 국방부 내부자료.



## 나.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군에서는 군 복무 기간에 자기역량 개발과 장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 경험한 교육훈련 경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군 교육훈련 및 경험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군사학 학점은행제와 군 특기병 교육훈련 평가인정이 있다.

먼저, 군사학 학점은행제는 2002년 12월에 ‘군사학’ 표준교육과정 반영/공시를 시작으로 실시되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3월과 2004년 3월에 각각 초군반 및 고군반 11개교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행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육사생도를 대상으로 ‘군사학’ 학위를 수여(육사 61기)하였으며, 2006년 2월 부사관 ‘군사학’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2007년 3월에는 3사교 ‘군사학’ 학위를 수여(3사 42기)하였다.

학위 취득인원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3년 기준 장교 2,700명, 부사관 10명이며, 장교는 지상전학,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으로 군사학사를, 부사관은 군사행정학으로 군사전문학사를 각각 취득하였다. 장교는 45학점 이수 시 군사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고 부사관은 군사학 45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수 시 군사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군사학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통해 군사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학문적 연구 활성화에 따른 군사전문가를 육성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표 3-1-6-3〉 학점은행제 군 관련 학위 취득 현황

단위: 명

구분	취득인원	지상전학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장교 (군사학사)	2,700	2,307		43		350	
부사관 (군사전문학사)	10	군사 행정	군수 관리	지상전	항공 기술	항공 작전	해상전
		-	-	10	-	-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DB.



다음으로 군 특기병 교육훈련은 2006년 1월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6개 병과교가 시범운영 되었다. 이후 2007년 4월에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한 병역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령정비가 완료되었다. 학점인정 군 교육기관 및 수료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 기준, 총 22개 병과학교에서 64,46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특기병 교육훈련 평가인정의 추진성과로는 병과학교 특기병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의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기병 교육에 한정되어 있던 학점인정 범위를 일반 병사로 확대하게 된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3-1-6-4〉 군 교육기관 및 수료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병과교	22개교	군수교 등 10개교	정통교 등 7개교	정통교 등 3개교	군외교 등 2개교
수료자	64,460	38,218	9,386	9,285	7,571

출처: 국방부(2010). 국방부 내부자료.

## 다.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 기록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군 내·외 각종 교육과정에 대한 개인 수료내용을 국가 학습계좌에 기록·누적하여 취업정보로 활용하거나, 학력 및 자격인정과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2010년 5월, 육군 평생학습계좌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병과학교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한 군 경력 및 교육인증제도 연구와 2011년 7월 평생학습계좌제 이용안내를 위한 군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군에서는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병과학교의 1주 이상 교육하는 전 과정을, 2단계는 야전부대의 1주 이상 교육과정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준에 충족하는 과정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1주 이상 교육과정은 종합군수학교 등 11개 학교에 71개 과정을 신청하여 41개 과정을 인정받았으며, 1주 이상의 교육과정 중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준에 충족되는 과정은 조리병 집체교육, 운전병교육, 특기병교육 및 분대장교육 등이 있다. 2013년 현재 육·해·공군의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6-5〉 군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황\*

단위: 개

구분	신청				합격				전체 평가인정 학습과정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2010년	71	39	42	152	41	26	35	102	878
2011년	2	48	0	50	0	38	0	38	433
2012년	0	37	0	37	0	34	0	34	458
2013년 상반기	0	49	27	76	0	45	25	70	364
합계	73	173	69	315	41	143	60	244	2,133

\* 육·해·공군 학습과정 평가인정 합격률은 77.4%이며, 전체 평가인정 학습과정 대비 군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비율은 11.4%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군은 앞으로 우수한 교육훈련 과정을 선별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 있다. 또한 군은 군 경력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필기시험 면제 대상은 환경, 자동차정비, 전기공사,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 기능사 등이며, 향후 면제종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헬기정비사, 전자광학장비관리사, 총기관리사, 폭발물관리사, 낙하산 훈련지도사 등 군 특수 분야 경력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에는 국방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라.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산·학·군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은 입대 전 기술인력 양성, 군 복무 간 활용 및 전역 후 취업지원의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입대 전에는 특성화고에서 군과 산업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군 복무 시에는 전공 분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서 복무하게 함으로써 개인으로는 경력과 전문성을 계발하여 학교교육, 군복무 및 취업 간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입대 전 군에서 필요한 기술을 이미 습득하였으므로 군 자체의 특기교육을 대폭 줄이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역 후 정부부처 및 산업체의 협조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취업함으로써 산업기술 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군 관련 분야의 기술을 미리 익히고 입대하여 군에서 필요한 우수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은 의무복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전역 후에는 군무원,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계속 연관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전직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국정과제인 기술특전사(가칭)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제대군인이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터 및 무역협회와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집교육과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기업체 특별채용을 위한 산·학·군 간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군의 기관과 연계된 대표기업으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전기·통신은 한국전력과 KT 등과 우수인재 양성 및 군 복무 후 취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5월에는 「e-military U: electronic - Military University(군 전문학사 학위 과정)」를 개설하여 전문학사로 복무 중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공학계열의 사이버 과정이라는 특성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일반부사관들의 e-MU과정 선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3. 사업 운영 성과

국방부 병영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30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 복무 병사의 애로사항 파악 및 병영문화선진화 과제들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그 결과, 병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개인 생활(휴가, 외박 등) 보장 확대(31.9%), 복무에 따른 보상과 혜택의 증대(26.3%), 병사복지 및 문화활동 여건 개선(13.8%), 개인학습 시간보장(11.3%), 대학학업 및 자기계발 여건확대(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복무에 따른 보상과 혜택증대(27.4%), 병사복지 및 문화활동 여건개선(15.7%), 개인학습 보장(15.4%), 군인다운 군인의 육성(12.2%), 대학학업 및 자기계발 여건확대(12.5%),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보장 확대(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군 평생교육의 환경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교육권 보장 차원의 학습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의 진로준비와 자기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군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등을 사회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4. 향후 과제

현재 군에서의 당면 과제는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입대 장병에 대한 군 복무 몰입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다. 이에 향후 군 평생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방개혁의 한 부분인 '꿈과 보람이 있는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군 평생교육 체제구축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적 장치

1) 병영문화선진화위원회는 2012년 2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3,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로는 '군평생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군평생교육진흥법(안)'은 군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 및 학습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군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군 평생교육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군 평생교육의 이념에 기초한 국방교육훈련 기본계획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

셋째, 군 평생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군 평생교육은 개인적인 관점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개인 강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 요구 중심의 일반적 학습뿐만 아니라 장병 개개인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생애학습 프로그램, 군 기술교육과 사회기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군내 학교교육과 직업보도 교육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교육정량제'와 '평생교육 쿠폰제(학습계좌제)'와 같은 군 복무기간과 비례한 선택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직업능력 인증제'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각 군의 군복무 가치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병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군 복무 수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이 현역 복무 가치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군 경험의 학점·자격인정과 사회 인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군 직무 및 교육 훈련체계를 사회직종, 자격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이나 자격기준을 신속히 개선 또는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DB.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 국방부(2012). **전투형 육성을 위한 2012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 서울: 국방부.
- 국방부(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육군본부(2013). 육군본부 내부자료.



## 제7절 농·어업인 평생교육

### 1. 사업 개요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다양한 관련 계획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농업인 교육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이후,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 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2008년 '신농업교육체계', 2010년 '농업교육 3개년(2011~2013) 기본계획', 2011년 '농업교육 체계개편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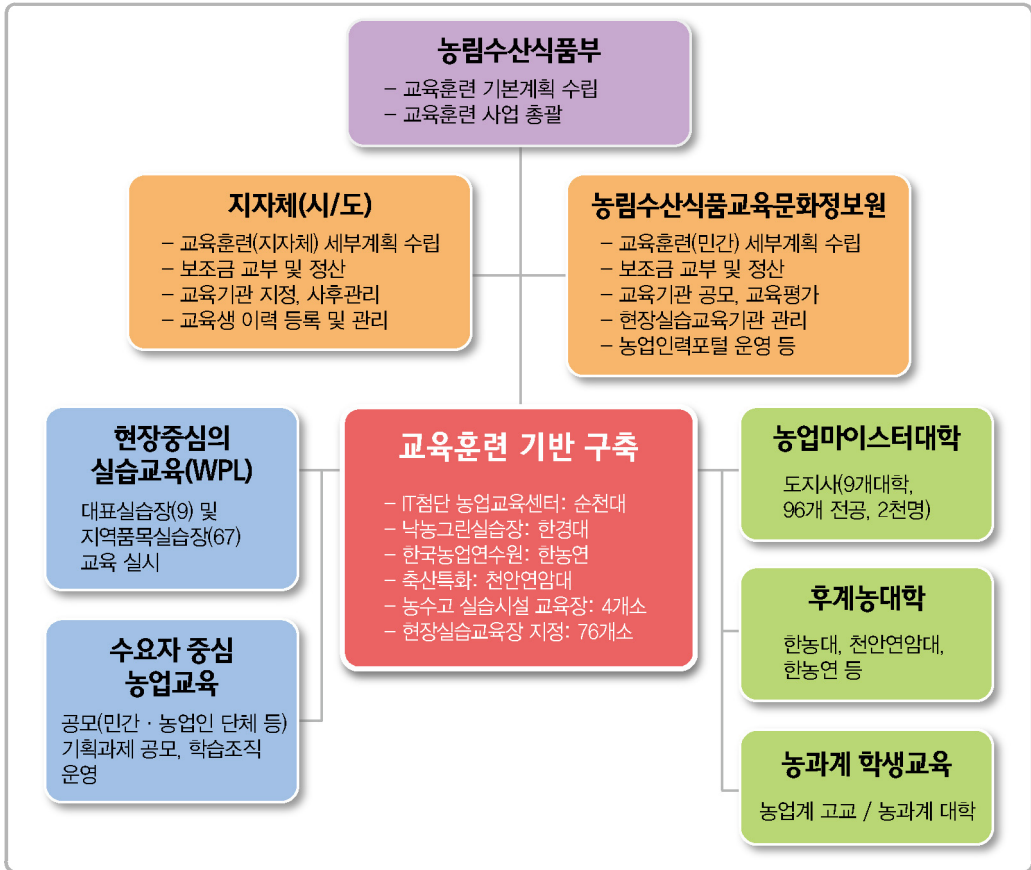
이같은 정책의 흐름 속에 2013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핵심인력 20만 명 육성을 위해 농업·농촌교육훈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지속되었으며, 2013년에는 25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다.

### 2. 사업 추진 현황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은 미래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계학교 교육지원 개편, 농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수요자의 요구와 가치를 충족하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 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은 크게 민간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이하 지자체사업)으로 구분된다. 민간사업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여기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교육,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 현장실습교육(WPL), 공모 중심의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각종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교육지원사업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사업은 그린낙농실습교육장, 특성화 농·수고 현장실습교육장, 후계농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은 크게 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 사업, 창업·후계인력 육성사업, 실습중심 교육과정 내실화사업, 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사업, 그리고 농업·농촌교육 기반강화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세부사업의 목적, 2013년도 사업예산 및 목표, 2012년도 실적 등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3-1-7-1]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추진체계



〈표 3-1-7-1〉 2013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목적	2013년도 사업 예산 및 목표	2012년도 실적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교육	고교 재학생 대상 농산업 분야(영농 포함)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2,400백만 원 15개 학교(45개 프로그램) 6,500명 농업계 고교(72개 교) 대상 공동 프로그램	10개 농고 5,170명 및 농고활성화 공동 프로그램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농산업분야(영농 포함)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2,600백만 원 15개 학교(45개 프로그램) 1,800명	10개 농과계 대학 1,690명
후계농 교육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변화에 능동적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농업인 육성	500백만 원 2,500명	1,522명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	농촌 결혼이민 여성의 농업 인력 육성 및 안정적인 정착	1,326백만 원 1,300명	1,326명
농업마이스터대학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5,177백만원 9개 대학, 96개 품목, 2,000명	9개 대학, 88개 품목, 1,590명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시장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주체 육성	249백만 원 9개 경영체, 9개 프로그램	14개 기관, 14개 프로그램
현장실습교육 (WPL)	선도농업인의 현장 전문기술 습득 체제 운영	1,470백만 원 3,500명	3,398명
그린낙농실습교육장	친환경 목장 및 유가공 전문교육장 조성을 통한 선진 낙농후계자 양성	1,200백만 원	한경대 공정률 75%
특성화 농·수고 현장 실습교육장	특성화 농·수고에 최신 영농기술 실습시설 및 장비 지원	2,000백만 원 4개 교	4개교
농업·농촌 공모교육	현장 교육수요를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기관 발굴, 육성	2,430백만 원 40개 기관, 50개 과정	48개 기관, 72개 과정
기획과제 공모교육	신농정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적기 육성	1,000백만 원 15개 기관, 20개 과정	12개 기관, 12개 과정
자생적 학습조직 육성	농산업 공동경영체의 지식공동체 양성	350백만 원 200개 조직	71개
농업인 국외훈련	농업인 대상 국외 선진지 사례학습, 현장실습, 벤치마킹	600백만 원 12개 기관, 14개 프로그램, 300명	12개 기관 13개 프로그램 260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800백만 원 80개 농업경영체	70개 농업경영체 72명



사업명	사업 목적	2013년도 사업 예산 및 목표	2012년도 실적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교육컨설팅	농어업회의소 자립 및 운영 지원	200백만 원 9개 프로그램, 200명	6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창립
농업경영혁신교육	농업마이스터 등 우수 농업경영인의 역량 향상	565백만 원	신규
농정원 교육운영 지원	농업·농촌교육을 위한 정책 지원 기능 고도화	2,000백만 원	-
농업인 네트워크 및 교류센터 지원	농어민단체 및 지역분부를 통한 현장중심적 고충 해결	500백만 원 1,800건	1,789건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3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상에서 제시된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외에 농업인력 육성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는 농촌진흥청을 들 수 있다. 2013년도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농촌진흥청, 2013)에 따르면, 농업인력육성 교육은 크게 실용기술교육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과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로 구분된다. 이 중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은 전문농업인 교육이다. 전문농업인 교육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7-2〉 전문농업인 교육의 세부 내용

	교육영역 및 과정	규모 및 예산
농업인 전문교육	지방단위 농업인 전문교육(품목별 단기교육)	154개소, 385백만 원
	실용기술교육	235개소, 468백만 원
	생활문화교육	118개소, 236백만 원
	농심교육	174개소, 182백만 원
	엘리트농업인현장교육	1개소, 160백만 원
	중앙단위 농업인교육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친농업 신수요계층 및 귀농·귀촌 교육, 사이버 농업기술교육)	
농업인대학		136개소, 2,034백만 원
귀농·귀촌교육		69개소, 4,560명, 2,730백만 원
생활농업기술교육	한국전통음식학교	10개소, 1,000백만 원



교육영역 및 과정		규모 및 예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4회 이상 육성	1,322백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684백만 원
	생활지도사(농촌여성리더) 양성	224백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270백만 원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품목농업인연구회	400개회, 800백만 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3,000명, 195백만 원

출처: 농촌진흥청(2013). 2013년도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 3. 사업 운영 성과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훈련 사업에는 실제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실습 시설의 최신화, 경영 및 학습조직 육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및 고충 해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농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현장 농업인력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특정 작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요구가 공모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었고,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전문교육, 농업인대학, 농기계교육훈련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훈련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습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이 추진되었다.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하여 경영규모,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확립되어 있다. 5단계로 구성된 이 체계에서는 각각의 수준에 맞게 농심교육·생활문화교육·실용기술교육으로 구성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품목별 단기교육·품목별 장기교육(농업인대학)으로 구성된 전문농업기술교육의 제공을 통해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고도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실습 중심 및 중·장기의 심화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영농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에서는 실습중심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실습교육장의 현대화 사업, WPL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영농 및 농산업체 경영 기술이 획득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었다.

넷째, 귀농·귀촌교육, 여성농업리더 육성,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 등의 시행은 다각적인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농업인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특징적인 점은 농업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영농인력은 현재와는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귀농·귀촌교육, 여성농업리더 육성,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 등의 시행은 농업인력을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농업계 고교와 농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젊고 유망한 농업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자생적인 학습이 실시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추진되었다. 농산업 관련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농업교육·훈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사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농업인들이 자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생적 학습조직 육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등은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이수가 아니라, 심도 있는 학습과 공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 성과 이외에도 농정 시책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었다는 점, 국외 우수사례를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 등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추진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향후 과제

평생교육 측면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농·어업인을 위한 기존의 교육·훈련은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영역인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중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인 개인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농·어업인에 대한 장기적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농·어업 경영조직으로서 조직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경력개발 차원에서 농·어업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잠재·예비-준비-진입-발전-은퇴와 같은 단계설정을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표준 이수 모형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마상진, 2012). 조직개발 차원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어업인 학습공동체가 보다 활발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영농조합의 경우 노하우 전수를 위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식 성문화(成文化) 방법에 대한 전수가 필요하다. 개인 영농인의 경우에는 학습공동체를 지역단위로 구축하거나, 작목에 따라서는 전국단위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3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2013). 2013년도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원: 농촌진흥청.  
 마상진(2012). 농정원의 역할과 농업교육 발전방향. 농업교육 열린포럼 자료집(pp. 1-38).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 제8절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 1. 사업 개요

2013년 9월 기준으로 25,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1,000명 수준을 보이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약 2,5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다. 2011년 말 북한 최고 권력자의 급작스런 사망에 이은 내부단속 강화 등으로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다소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경제난 등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의 탈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평생교육은 남한과 상이한 체제에서 생활하였던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남한 사회 적응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입국 초기 수용시설(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교육과 정착지에서 지역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적응교육이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2012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가 14,200여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58%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4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4%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연령대별 분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세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에의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과 더불어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3-1-8-1〉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 1998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잠정)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405	250	7,829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909	1,097	791	17,820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1,041	25,649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6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2013년 9월 입국자 기준).

〈표 3-1-8-2〉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06	1,344	2,101	1,818	1,120	390	300	7,579
여	511	1,530	4,630	5,702	2,968	874	814	17,029
합계	1,017	2,874	6,731	7,520	4,088	1,264	1,114	24,608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2012년 12월 입국자 기준).

한편, 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2012년에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결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이 38.9%로 전체 국민의 고용률(60%)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7.2%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실업률인 2.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73%가량이 월 평균 150만 원 이하로 나타났고,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39.3%로 근로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3〉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현황

소득액	비율
50만 원 이하	12.7%
51~100만 원	26.6%
101~150만 원	34.1%
151~200만 원	19.3%
201만 원 이상	7.3%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 2012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착패널조사, p. 61.



## 나. 초기적응 시설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초기 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평생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응교육은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습득 및 경제적·직업적 역량 배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크게 표준교육과정과 자율·보충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표준교육과정은 심리 정서 안정, 남한 사회 이해,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 훈련 등으로, 자율·보충과정은 운전면허, 부모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8-4〉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주제	세부영역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9시간, 11.7%)	1. 정서안정 프로그램(30시간)
	2. 건강증진 프로그램(19시간)
우리 사회 이해 증진 (124시간, 29.5%)	1. 민주시민 프로그램(10시간)
	2. 자본주의 적응 프로그램(6시간)
	3. 사회이해 프로그램(40시간)
	4. 언어적응 프로그램(32시간)
	5. 현장체험 학습(36시간)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훈련 (196시간, 46.7%)	1. 기초검사 및 취업제도 이해 프로그램(12시간)
	2. 직업정보 및 취업 안내 프로그램(40시간)
	3. 진로지도 프로그램(14시간)
	4. 기초 직업적응 훈련(130시간)
초기 정착지원 (51시간, 12.1%)	1. 정착지원제도 이해 프로그램(10시간)
	2. 하나원 생활안내 프로그램(15시간)
	3. 행정지원 프로그램(26시간)
합계	420시간

출처: 통일부(2012). 통일부 내부자료.

## 다. 정착지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의 초기 적응교육 이수 후 정착지로 이동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에서 지역 및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



(일명 하나센터)는 지역정착 초기 3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적응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정보뿐 아니라 취업, 진학 등 지역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역정착 단계에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표 3-1-8-5〉 지역적응센터의 초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예시

영역	주제	세부내용	교육시간
초기 정착 지원 교육	일상생활 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및 제도 안내 (물건구입, 은행거래, 법률, 경제,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등)	5일 (20시간)
	지역사회 이해	지역 현황, 정착지원기관, 지역 내 주요기관 소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용방법 안내)	
		지역 내 주요기관 탐방 (사·도청, 구청, 고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보호담당관 특강	각 보호담당관의 역할 소개와 초기미팅 (신변, 거주지, 취업보호 담당관/필요 시 교육청 관계자)		
진로 탐색과 직업 준비 교육	근로이력 증진프로그램	- 생활점검 및 생활설계 - 취업(근로활동)의 동기와 목적 정리	5일 (20시간)
	직장생활 이해	- 직업의 종류와 필요성, 직장문화, 대인관계, 갈등해결방법, 의사소통방법 훈련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 직업훈련프로그램 탐색 및 방문 -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훈련	
개인 역량 강화 교육	자기이해	- 자기이해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 강점 및 약점 확인, 자기이해 강화를 위한 훈련 - 정신건강 예방교육 :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식, 정신건강 관리 방법	3일 (12시간)
	의사소통 향상	- 표준말 교육(발음 교정, 외래어 교육, 의사소통 방법 등) : 필요 시 1:1 별도 심화교육 지원	
	사회 및 문화체험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방문 - 지역 내 문화시설 관람 등	
인생 설계	성공사례 소개	- 모범적인 선배 북한이탈주민 또는 내국인과의 대화 - 인생 성공사례 영상물 상영 등	2일 (8시간)
	초기상담	- 하나원 인계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문제, 능력에 대한 파악	
	전문가 상담	-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인생 방향 제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직업능력향상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은 직업능력개발 지원, 창업교육, 영농기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응교육은 생활적응교육, 문화교양교육, 부모교육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 3.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또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부처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민간단체 등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대를 고려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횡단적인 각 연령대에서 필요한 과업을 포괄하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인식을 함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 북한이탈주민은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인식과 가치, 그에 기반한 생활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경력 등 북한이탈주민의 선행학습 경험 및 역량, 심리·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원 및 지역정착 초기에는 사회적응교육 형식으로 각종 평생교육에 참여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 부족, 인식 미비 등으로 평생교육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교육과 함께 휴식, 여가 기능을 병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체제와 프로그램이 장기적 관점에서 구축·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 2012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패널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 제2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학교평생교육 추진 현황

---



- 제1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 제2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제1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 1. 사업 개요

인생 100세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 또한 학령기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수한 교육자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이희수 외, 2002)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질 수 있다(최상근, 2006).

OECD(2001)는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통해 지역 활성화의 중핵으로써 학교의 새로운 역할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관료제적 '현상유지형'에서 '지역 사회 학습센터 및 학습조직형', 그리고 '네트워크형 및 탈학교형'으로 발전하는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평생교육의 특징은 첫째, 학교는 누구나에게 교육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 기회를 농촌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학교는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기능 수행에 있어 사회의 여타 기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학교는 교육에 알맞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유리한 여건은 보다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어느 지역에서든지 학교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학교와 교육자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신뢰와 기대는 보다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평생교육체제 안에 재편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계되고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그 실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이희수, 2013).



## 2. 사업 추진 현황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증가해왔다. 2000년 초반부터 학교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시작되었고, 관련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학교의 책무가 강화되었으며,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통해 학교를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주도 아래 평생교육 시범학교가 운영되었으며, 2007년 제2차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학교평생교육 사업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특성화·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를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학교를 통합한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평생교육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1-1〉 2000년대 이후 학교(초·중·고)평생교육 추진 경과

연도	추진 사업
2000년 초반	• 학교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시작
2002년	•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학교를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재구조화하는 계획 발표
2005~2007년	• 평생교육시범학교 시행(교육과학기술부) - 2005년 26교/2006년 22교/2007년 19교
2007년	•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학교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2007~2010년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시행(교육과학기술부)



연도	추진 사업			
	구분	1차년도 (2007년 11월~2008년 8월)	2차년도 (2008년 9월~2009년 8월)	3차년도 (2009년 8월~2010년 8월)
	사업비	43.9억 원	34억 원	34억 원
	규모	34개 지역교육청 122개 학교	34개 지역교육청 122개 학교	38개 지역교육청 145개 학교
	총 프로그램 수	1,213개	1,419개	1,288개
	총 참여 학습자 수	41,811명	64,747명	38,876명
2009년 이후	• 시·도교육청 개별적으로 학교평생교육 사업 추진			

2010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 특교사업비 교부 종료로 중단되면서, 이후 학교 평생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3년 현재 강원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1-2〉 2013년 시·도 교육청 학교(초·중·고)평생교육 추진 현황

교육청명	추진사업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초·중·고교에서 1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li> <li>-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 운영</li> <li>- 정상적인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li> <li>-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li> </ul> </li> <li>•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9교, 378개 프로그램(교당 300만~800만 원 지원)</li> </ul> </li> <li>•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17교</li> <li>• 학교평생학습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개(1,013명 참여)/팀당 30만~50만 원 지원</li> <li>-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학습봉사 활동</li> </ul> </li> <li>• 학교평생교육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교 단위 또는 실무 단위로 2교 이상 시행</li> </ul> </li> <li>• 학교평생교육 연수 운영: 담당교사 연수, 학교평생학습동아리 연수, 지역교육청-지치구 담당자 연수 실시</li> <li>• 학교평생교육 성과 관리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교육 모니터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운영 실적 조사</li> </ul> </li> </ul>



교육청명	추진사업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교육 릴레이 홍보</li> <li>- 매월 지역교육청별 학교평생교육 또는 학교평생학습동아리 우수사례 홍보·공유, 전파</li> <li>• 평생교육 강사은행제 운영</li> </ul>
부산광역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학습센터 선정·운영: 110교</li> <li>• 인적·물적 자원이 우수한 학교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자체 우수 강사를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li> <li>- 학교도서관, 특별실,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 활용</li> </ul> </li> <li>• 평생교육 우수 강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평생교육 강사 인력풀 지원: 부산평생학습포털사이트 (<a href="http://bs.pen.go.kr">http://bs.pen.go.kr</a>) 홈페이지 탑재</li> <li>- 평생학습관 등 유관기관과 강사 정보 공유</li> </ul> </li> <li>• 평생교육 운영 업무 지원: 퇴직 교직원(70명) 활용</li> <li>•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당 1강좌 이상 운영 권장: 초·중·고(628교)</li> <li>-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연계</li> </ul> </li> <li>• 시민의식 함양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식 함양 강좌 개설 확대</li> <li>-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개설 권장</li> </ul> </li> <li>•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li> </ul>
대구광역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80,47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운영, 운영 우수학교 선정</li> </ul> </li> <li>• 평생학습관 운영(2,318,0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 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초, 중, 고, 특 437교</li> </ul> </li> <li>•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212,96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내일학교: 3교(명덕초, 성서초, 금포초), 130명</li> <li>- 기초(1, 2단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7교</li> </ul> </li> </ul>
인천광역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평생학습관, 학교시설을 활용·연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학교 연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7개관, 32개교</li> </ul> </li> <li>•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초·중·고 14교</li> </ul>
광주광역시교육청	<p>시행 안함</p>
대전광역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0교</li> <li>•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 연구대회</li> </ul>
울산광역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사회 교육의 장으로 학교시설 개방</li> </ul>
경기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 123교, 316개 프로그램</li> <li>•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2교, 5개 프로그램</li> <li>• 다문화 가정 학교 평생교육: 15교, 45개 프로그램</li> <li>• 학교 자체계획에 따른 평생교육: 213교, 400개 프로그램</li> </ul>
강원도교육청	<p>시행 안함</p>



교육청명	추진사업 내용
충청북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중심학교 운영(22교)</li> <li>• 여성·노인교실 운영(초11교)</li> <li>•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11교)</li> </ul>
충청남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시설개방</li> </ul>
전라북도교육청	시행 인함
전라남도교육청	시행 인함
경상북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중심학교 운영 28교, 40,000천 원</li> </ul>
경상남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li> <li>• 평생교육 우수학교 선정·지원(36개교, 108,000천 원)</li> </ul>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교(초10, 중8, 고2), 60,000천 원 지원</li> </ul> </li> <li>•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여유포실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li> <li>-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18교)</li> <li>- 지역주민 동아리 및 교직원 동아리 연계 추진</li> </ul> </li> <li>•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관 운영교 확대(1교→2교)</li> <li>-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업으로 살펴본 2013년 학교평생교육은 2012년에 비해 그 규모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의 단순 개방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자원을 활용한 직업 과정 프로그램(경기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기관 연계 프로그램(인천광역시교육청), 여성·노인교실(충청북도교육청)과 소외계층(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대상별 프로그램,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교육감 지정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평생교육센터 지정(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평생교육 업무지원을 위한 퇴직교원 활용(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학교평생교육만의 특화된 평생교육 사업들로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사업 운영 성과

지금까지 학교평생교육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학교를 개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2013년의 학교평생교육 운영 성과는 우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평생교육을 특성화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퇴직 교원을 활용하여 학교평생교육 업무지원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학교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 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수 분야 과정이나, 초·중학교의 자격증 프로그램은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봉사활동에 참여한다거나 강사로 활동하는 등 학습자 개인에게 새로운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하여 제2의 인생으로 도약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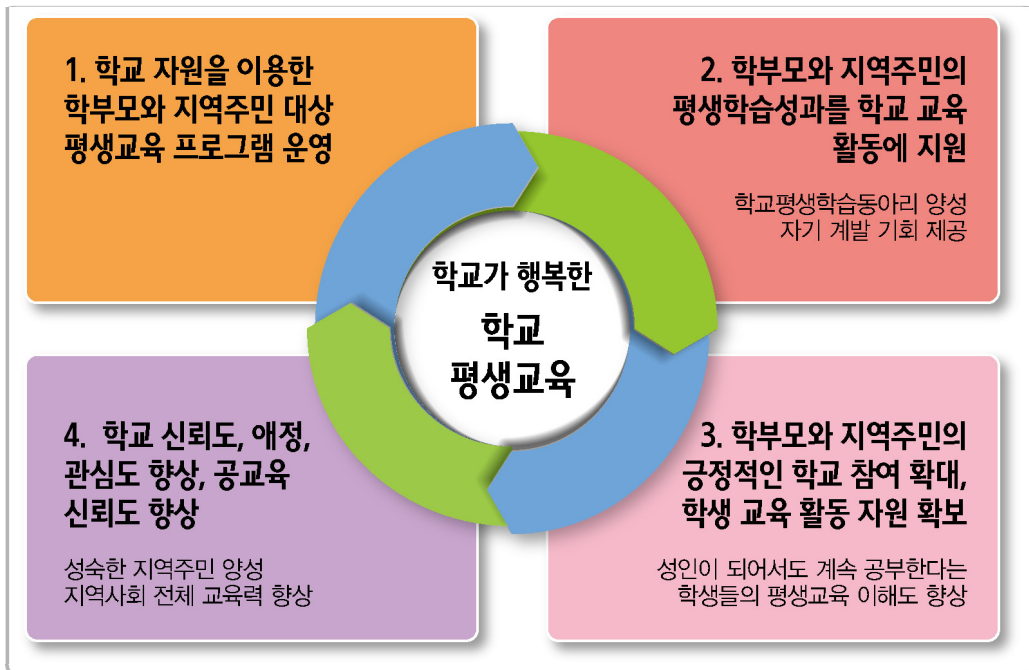
둘째, 학교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교평생교육으로의 인식 전환을 성과로 들 수 있다. 학교평생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평생교육에 갖는 업무 부담이었다.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교평생교육 운영은 학교가 학교 평생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습득하게 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 학교에 학습결과를 환원하고 싶어 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교내 발표회·교사 연수·환경미화·학생 수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환원하는 과정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값진 학습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활동이 확대되면서 학교평생교육에 거부감을 가졌던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학교는 학교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셋째, 학교 중심의 평생학습공동체를 실현하였다. 학교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도시의 시민들은 학교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알게 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초등학력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장을 받게 되는 어르신(문해 학습자)들의 학교 방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학교평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평생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 통합과 함께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년 학교평생교육 운영 계획.

[그림 3-2-1-1] 학교평생교육의 성과



## 4. 향후 과제

학교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관심은 필수적이다. 학교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인 만큼 시·도교육청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이나, 학교나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학교평생교육 사업 추진만이 학교평생교육이 학교 본연의 역할과 책무로서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법적 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교 자체의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학교에서 용이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운영 학교가 점차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개발, 강사, 운영방식, 학습성과 환원 등 운영 전체에서 시스템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일방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니라 학교평생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평생교육에 적합한 강사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 활동 및 지역사회 학습봉사 활성화 등 학교평생교육이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어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평생교육의 정책적 영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학교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제외한 성인이며, 콘텐츠 또한 학부모 교육을 제외한 내용만을 학교평생교육의 범위로 국한하여 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2013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과 평생교육은 몇몇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학부모 교육이 학교평생교육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육이 학교평생교육이 아닌



것처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이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도 해당되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평생교육의 대상이나 콘텐츠 등 정책적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2013년 학교평생교육 운영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희수(2013). **평생학습시대, 학교는 살아 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서울행복교육**. 2013년 서울평생학습 축제 동북아 학교평생교육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희수·김득영·전인식·전도근·이현석(2002). **주5일 근무제 대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근(2006).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OECD(2001).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aris: OECD.



## 제2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1. 사업 개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이하 '방송중·고')는 사회·문화적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기초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되었다. 더 나아가 방송중·고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방송고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의 11개 공립 고등학교에서 시작하였고 2013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내 40개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되어 있다. 방송중은 2013년 대구와 광주 교육청 내의 공립학교에 부설로 2개교가 시작하였다. 방송중·고의 교육체제는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교육대상의 ICT 활용능력 향상으로 2009년 이러닝체제로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방송고는 39년간 약 22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69,000여 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사회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국민의 기초 학력 증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방송중 설치 및 운영의 법령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에 있다. 방송중의 설치·교육과정·방법 및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었다. 방송고 설치 및 운영의 법령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 있고 방송고의 설치·교육과정·방법 및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중과 그 근거가 동일하다.

방송중·고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원격 수업 유형과 학교에 등교하는 출석 수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출석수업'은 격주 일요일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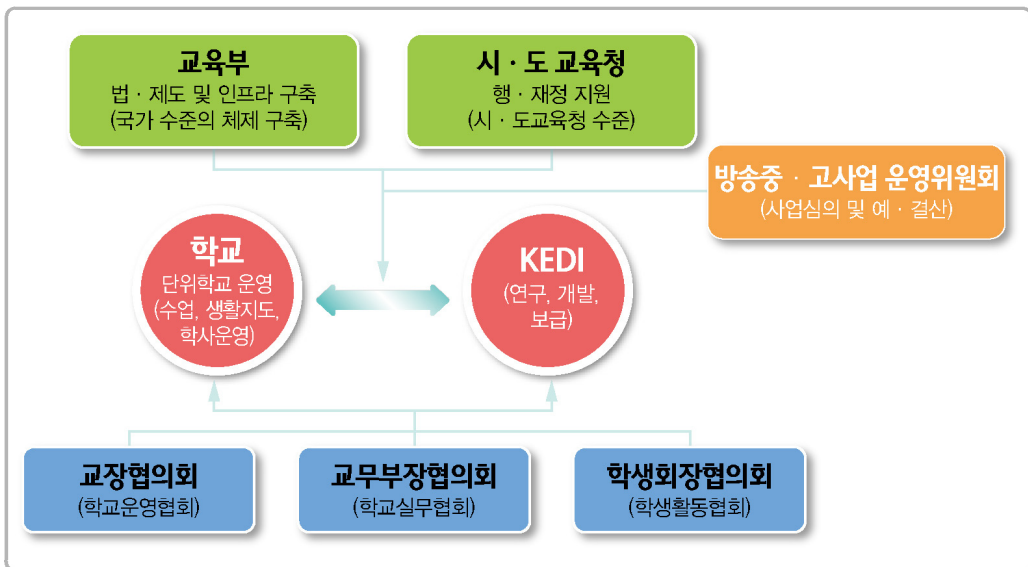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실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교에서 담당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a).

## 2. 사업추진 현황

### 가. 사업추진체계

방송중·고 운영사업은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지원체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송고 사업 운영위원회(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참여)에 의해 공정한 사업 심의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중·고 운영의 사업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방송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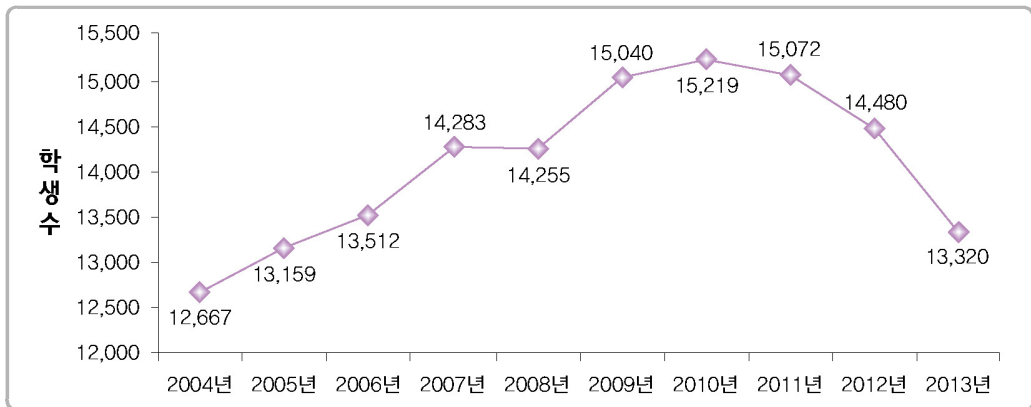
[그림 3-2-2-1] 방송고 운영사업 추진 체계



## 나. 방송중·고 일반 현황

### 1) 방송고 재학생 현황

최근 10년간 방송고 학생 수는 2004년에 12,66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5,219명으로 많아졌다. 2013년 현재 총 재학생 수는 13,320명으로 1학년 3,982명, 2학년 4,507명, 3학년 4,831명이다.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이 5,260명(39.5%)을 차지하고 여학생은 8,060명(60.5%)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그림 3-2-2-2] 최근 10년간 방송고 학생 수 변동 추이

다음 표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2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50대의 비중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학업중단 학생 등의 문제로 10대 및 20대 학생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2-1> 방송고 학생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학생 수	2,520	2,472	1,396	2,521	3,422	915	74	13,320
(비율)	(18.9)	(18.6)	(10.5)	(18.9)	(25.7)	(6.9)	(0.6)	(100.0)

\*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방송고 학생의 직업별 분포는 전업주부가 2,784명(20.7%)으로 가장 많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미취업자가 2,591명(19.5%)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학생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2-2〉 방송고 학생의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기업대 표/임원	전문직	기술/ 기능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수 산업	자영업	종교/ 예술인	전업 주부	미취업 및 기타	계
학생 수 (비율)	121 (0.9)	176 (1.3)	923 (6.9)	891 (6.7)	2,059 (15.5)	418 (3.1)	1,220 (9.2)	113 (0.8)	2,784 (20.7)	4,584 (34.5)	13,320 (100.0)

\*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방송고 학생 중 특수소외계층은 보훈대상자 137명, 기초생활수급자 517명, 장애인 67명, 새터민 3명, 보호관찰대상자 19명, 다문화가정자녀 14명, 결혼이민자 8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방송중 재학생 현황

2013년 개교한 방송중 재학생은 1학년 160명이다. 남학생이 37명(23.1%), 여학생이 123명(76.9%)으로 여학생 비율이 매우 높다. 다음 표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4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60대의 비중이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학생은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2-3〉 방송중 학생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학생 수 (비율)	1 (0.6)	0 (0)	1 (0.6)	8 (5.0)	68 (42.5)	76 (47.5)	6 (3.8)	160 (100.0)

\*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방송중 학생의 직업별 분포는 전업주부가 62명(38.8%)으로 가장 많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미취업자가 2명(1.3%)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학생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2-4〉 방송중 학생의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기업대표/임원	전문직	기술/기능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수산업	자영업	종교/예술인	전업주부	미취업 및 기타	계
학생 수 (비율)	2 (1.3)	2 (1.3)	7 (4.4)	0 (0)	19 (11.9)	5 (3.1)	28 (17.5)	8 (5.1)	62 (38.8)	27 (16.6)	160 (100.0)

\*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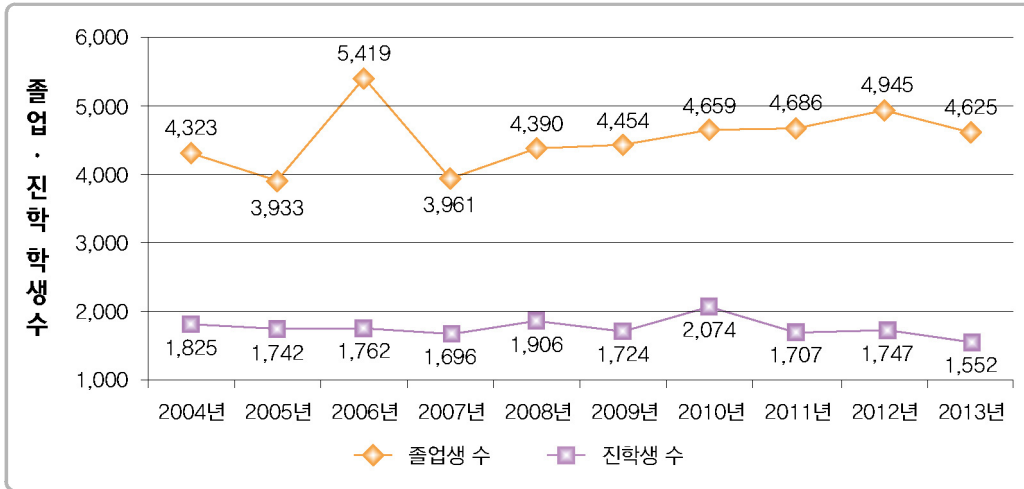
### 3) 졸업 및 진학 현황

방송중은 2013년 개교하여 졸업 및 진학자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방송고는 1977년 2,6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13년 현재까지 226,456명의 누적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78년부터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1978년에는 전체 졸업생 5,335명 중 471명인 8.8%정도가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최근 10년간 방송고 졸업생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3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방송고 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33.6%로 나타났으며, 졸업생 4,625명 중 1,552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졸업생의 51.8%가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단일 학교 수준에서는 경북지역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고가 100%로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진학 대학유형은 2년제가 53.1%, 4년제 대학 15.2%,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이 31.7%였다. 다음 그림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 방송고 졸업생 및 진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그림 3-2-2-3] 최근 10년간 방송고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 4)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 교육비 부담

방송중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헌법 제31조 ③항 [시행 1988.2.25.][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실시한다. 방송고 학생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에 의해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하며 방송고의 수업료는 공립 고등학교보다 적게 책정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책정되어 차이가 있으나 학기당 평균 수업료는 약 52,480원이며, 수업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학기당 70,400원이고, 가장 저렴한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학기당 29,140원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 다. 평생교육 추진 과제 및 내용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한 방송중·고 관련 사업 가운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송통신고 운영 사업과 ‘방송통신고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업에 포함된 추진 과제와 내용을 제시 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2-5〉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 운영사업 추진 과제 및 내용

추진 과제	추진 내용
방송통신고 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중 확대 설치</li> <li>• 방송중·고 시수단위이수제 활성화</li> </ul>
학사 운영 체제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중·고 교원연수</li> <li>• 방송중·고 학생 상담</li> <li>•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 고도화</li> </ul>
교수·학습 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중·고 인터넷 수업 콘텐츠 개발·운영</li> <li>• 10대 학생 인성·진로교육 강화</li> <li>• 기초학력 집중 지원</li> </ul>

### 3. 사업 운영 성과

#### 가. 추진 성과

##### 1) 방송중·고 관련 제도 개선

###### ① 방송중·고 설치 확대

전 국민의 10.3%인 약 390만 명이 중학교 미학력자로서 방송중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3년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북성중학교 부설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내 대구고등학교 부설로 2개교가 개교하였고, 16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중 수요자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14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내 수원제일중학교 부설과 의정부 호원중학교 내 부설, 대전교육청



내 봉명중학교 부설, 경남교육청 창원 경원중학교 부설로 모두 4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고 수요 증가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내 성남 서현고등학교 부설과 부천 상동고등학교 부설로 2개 학교가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방송중은 6개교, 방송고는 42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 ② 방송중·고 시수단위이수제 운영 활성화

시수단위이수제는 방송중·고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교 외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방송중의 필수 1,598시수를 제외하고 학교 자율 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배정된 1,054시수와 방송고의 필수 104단위를 제외한 58단위가 시수단위이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수단위이수제는 2011년부터 3개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여 2012년까지 2년간 시범 적용함으로써 시수단위이수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 40개의 방송고와 2개의 방송중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방송중은 2명의 학생이 5개의 이수원<sup>1)</sup>을 신청하였고, 방송고는 144명의 학생이 414개의 이수원을 신청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2) 학사운영 체제 개선 및 지원 강화

### ① 방송고 교사 대상 원격·집합 직무연수

방송고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원연수는 원격직무연수와 집합직무연수로 구분된다. 집합직무연수는 연중 2회 실시되었는데, 전반기에는 총 101명이 참석하였고 교육내용은 단위이수제 운영 안내, 방송고 교무·학사운영, 방송고 e-스쿨 시스템 이용, 콘텐츠 및 교과교재 이용 안내로 구성되었다. 후반기는 방송고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즐거운 학교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원격직무연수는 원격교원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1) 이수원은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활동 영역으로 2012년 7월 기준으로 평생학습계좌제(1,700여 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160여 개), 평생직업교육학원(390여 개), 자격증(1,100여 개), 검정고시(36과목), 대안학교(34개교)가 이수원으로 선정되어 있음.



전반기 71명, 후반기 59명의 교사가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은 상황에 따른 수업방법과 코칭, 화법을 포함한 12과목으로 구성되었다.

### ② 방송중·고 학생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방송중·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상담서비스는 인터넷 수업 시청 및 홈페이지 이용 방법 등의 다양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문제 상황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방송중·고 상담센터의 유형별 상담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2-6〉 방송고 종합상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원격지원상담	합계
2011년	5,633(71.2)	2,279(28.8)	467(5.9)	7,912(100.0)
2012년	4,280(80.6)	807(15.2%)	225(4.2)	5,312(100.0)
2013년	5,719(82.0)	896(12.0)	360(6.0)	6,975(100.0)

\* 2013년 11월말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 ③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고도화

방송중·고는 교육과정 운영 중 방송·정보 통신에 의한 운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인터넷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맞도록 교과목별로 콘텐츠를 구성·배치하기 위한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LCMS)을 함께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방송중·고 교원들의 교육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LMS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방송중·고는 동일한 교육시스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중이 확대 설치될 경우 인프라 부족을 대비하여 방송중의 교육시스템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 3) 교수·학습 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 ① 다매체 기반 방송중·고 콘텐츠 개발 및 제공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방송중·고는 지속적으로 다매체 기반의 수업 콘텐츠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부터 수업용 콘텐츠를 IPTV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제공하면서 수업용 콘텐츠에 차세대 웹 표준(HTML5)을 적용하고,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 22개 과목을 개발하여 2013년에 운영하였고, 2014년 운영을 위해 2013년에 21개 과목을 개발 중이다. 다음 표는 2013년에 운영된 과목과 2014년 운영 예정 중인 과목을 보여주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표 3-2-2-7〉 2013년 운영 과목 및 2014년 운영 예정 과목

구분		과목		과목 수
2013년 운영 과목	고등 학교	3학년	독서와 문법 I, 한국지리, 경제 사회문화, 화학 I, 생명과학 I, 스포츠문화, 미술감상, 음악과 사회, 일본어 I, 중국어 I	11
		1학년	기초 영어	1
	중학교	1학년	국어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영어 한문 정보 진로와 직업	10
2014년 운영 예정 과목	고등 학교	1학년	국어 I, 기초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운동과 건강생활, 미술창작, 음악과 생활 기술·가정, 진로와 직업, 한문 I	10
		2학년	영어 I	1
	중학교	2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술·가정, 사회, 역사, 체육, 생활일본어, 생활중국어, 보건	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b), 2013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중간보고서.

#### ② 10대 학생 인성·진로교육 강화

10대 학생들의 학업 중단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방송고의 10대 학생의 재학률이 점차 증가하였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의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0대 학생들을 위한 인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국 40개 학교에 보급하였다. 다음 표는 인성·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회차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2-8〉 인성·진로 교육 프로그램 회차 및 내용

나를 위해 떠나는 긍정 여행(인성)		나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희망 여행(진로)	
구분	주제	구분	주제
1교시	너와 나 '우리'	1교시	직업 세계의 이해
2교시	내 인생 돌아보기 및 감정 표현하기	2교시	흥미와 직업
3교시	나의 강점과 약점	3교시	나의 진로세우기 I : 목표세우기
4교시	강점 발전시키기	4교시	나의 진로세우기 II : 실천하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방송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③ 영어·수학 기초학력향상 지원

방송중·고 학생 대부분은 학업공백기가 길거나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생들이다. 이에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방송중·고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인터넷 수업과 함께 재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수학과 영어에서 1:1 개별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1:1 개별 튜터제 운영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하고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학습자의 수준에 특화된 지원 및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 현재 전화 907건, 문자메시지 2,760건, 메일 149건, 원격지원 164건 등 총 3,980건의 튜터 지도가 있었다.

## 4. 향후 과제

방송중·고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력 성인과 다문화가정 자녀, 학업중단 청소년과 같은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방송중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2개교의 방송중이 운영되고 있고, 2014년에 4개교가 추가로 설치되지만 교육소외계층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방송중에서 방송고로 이어지는中等교육 학제를 완성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평생교육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취득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송중·고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교 밖' 학생들이었다. 이에 이들의 경험과 경력



을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하는 시수·단위이수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된 1,00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수준의 평생교육학원 및 시설, 직업능력개발원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일부분이다. 따라서 전국의 방송중·고 학생에게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된 프로그램만을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면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잠재적으로 방송중·고의 ‘시수·단위이수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송중·고 10대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평생교육의 개념에는 학령기에 속해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도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박선행, 2011). 이와 같은 이유에서 10대 학업 중단 청소년들도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방송고의 10대 학생들 재학률도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중도 탈락률도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10대 학생들을 위해서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전문교과 및 직업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제한적인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진로 상담과 함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개인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10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방송통신고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선행(2011). 고등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7(2), 65-92.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방송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a). **2013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예산실행계획 협의회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b). **2013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중간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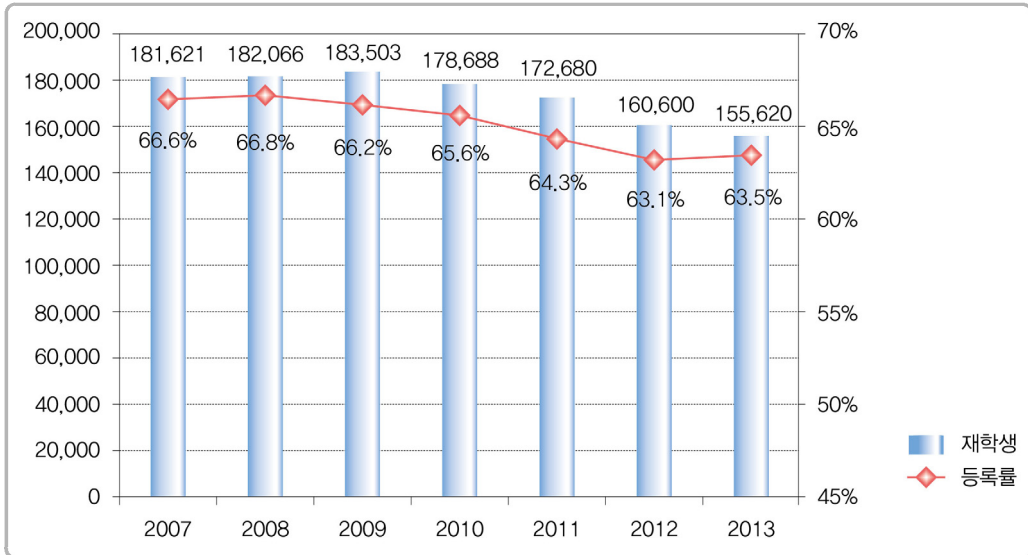
### 1. 사업 개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원격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이념으로 하여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 대학평생학습의 본산으로 발전해 왔다. 방송대는 국내의 유일한 국립 원격개방대학(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으로서 사회경제적 사정, 연령, 지리적 여건 등에 의해 학습기회의 제약을 받았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 2.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 가. 학습자 현황: 대학평생학습의 다양한 요구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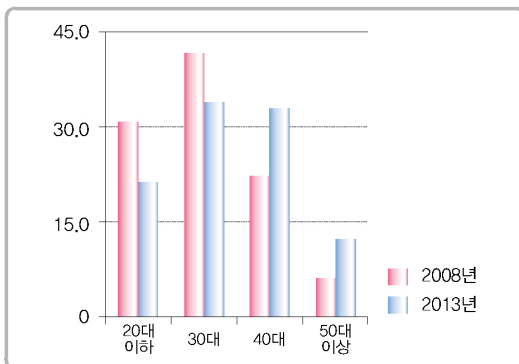
방송대의 학생 규모는 국내 중등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단계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방송대의 입학생은 총 260만 명이며, 이 중 56만 명이 졸업하였다. 최근 고등교육 보편화 등 외부 교육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 등록생의 규모는 2002년 207,44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하여 2013년 현재 155,620명이다.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7~2013). 통계연보

[그림 3-2-3-1] 연도별 재학생 수와 등록률 변화 추이(1학기 기준)

한편, 학생규모의 양적 변화 추이 이면에는 학습자 특성 및 학습요구 차원에서 질적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 방송대 학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다. 1993년 25세였던 재학생 평균 연령은 2013년에 39세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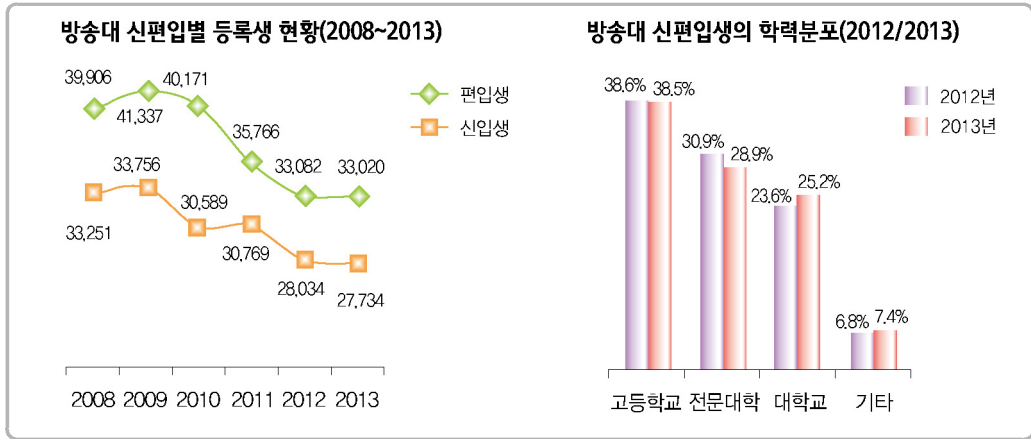
연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08년	30.5%	41.6%	22.0%	5.9%
2009년	29.3%	40.6%	23.4%	6.7%
2010년	26.7%	39.9%	25.6%	7.9%
2011년	24.3%	38.5%	28.1%	9.1%
2012년	22.7%	36.5%	30.3%	10.5%
2013년	21.1%	33.9%	32.9%	12.1%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2013). IDE 통계분석보고 제3호

[그림 3-2-3-2] 2013년 방송대 재학생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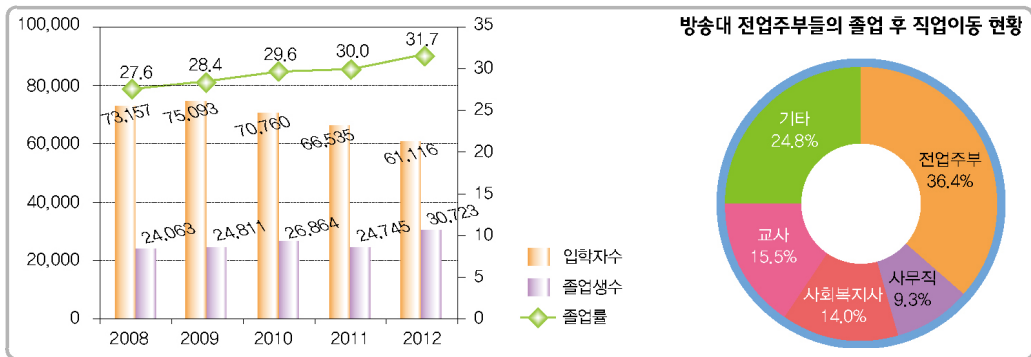
또한 방송대에서 학력계층의 다양화 및 고학력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편입생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율도 2000년 12%, 2008년 17%, 2013년 25%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2013). IDE 통계분석보고 제1호

[그림 3-2-3-3] 2013년 방송대 신·편입생의 입학 전 최종학력 분포

근래에 튜터제도 확대, 학생통합서비스센터 운영 등 학사제도 개선의 성과로 2013년 2월 졸업률은 31.7%까지 높아졌다. 졸업 후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입학 전에 전업주부였던 학습자의 63.6%가 졸업 후에 취업한 점도 주목된다.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3). 2013년도 졸업생 실태조사(n=7,911).

[그림 3-2-3-4] 최근 방송대 졸업생(2011~2012) 현황



## 나. 원격개방학습 제도 정비: 대학평생학습의 개방성·유연성 확대

다양해진 학습자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학습자층을 발굴하기 위해 방송대는 최근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1972년에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학습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등록금(한 학기 평균 36만 원) 정책과 무시험 서류전형 입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2013년에는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학기 모집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sup>1)</sup>

둘째, 방송대는 학습자 요구별로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 프라임칼리지(Prime College)를 설치하여 과목별·코스별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13년도 학칙 개정을 통해 기존 학부와 프라임칼리지 간에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정비하였다.

셋째, 원격학습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교육방송(OUN: Open University Network)과 멀티미디어 웹 강의 외에도 모바일 러닝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2013년 6월 현재 76,000명의 학습자가 'U-KNOU + 스마트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프라임칼리지의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되었다.



[그림 3-2-3-5] 'U-KNOU + 스마트 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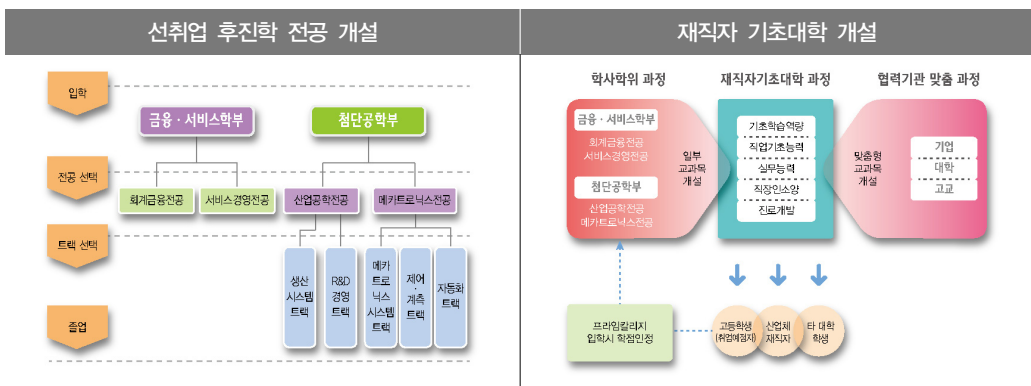
[그림 3-2-3-6] 프라임칼리지 모바일 앱 화면

1) 2013년 총 입학지원자 115,011명 중에서 2학기 입학지원자는 16,739명으로서 전체 지원자 중에서 약 15%를 차지함.



### 다. 대학평생학습 허브로서 역할 확대: 재직자의 ‘일-학습 선순환’ 지원

방송대는 2012년에 베이비부머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착수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구축 사업’에 이어, 2013년에는 교육부로부터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였다. 고졸 선취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교육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3). 국가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중간보고

[그림 3-2-3-7] 고졸 선취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 성과

첫째,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선취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학부, 첨단공학부를 신설하여 2014년에 2,000명의 입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직자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기초대학’ 과정도 개발하였으며, 현재 이화미디어고등학교의 재학생 268명에게 해당 교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의 허브대학으로서 대외적 교육협력 사업에도 주력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이공계열 부문의 원격교육 콘텐츠 및 사이버 랩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사내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KDB 금융대학교,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위탁받아 2013년 동안에 총 595명의 수강생을 수용하였다. 2013년 사업을 기초로 향후 재직자의 평생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표 3-2-3-1〉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MOU 체결 현황

구분	협정체결 기관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2013. 5. 2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공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연구	2013. 5. 28
기업	KDB 금융대학교	교육프로그램, 콘텐츠의 상호개발 및 공동이용	2013. 1.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2013. 2. 2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교육프로그램, 콘텐츠의 상호개발 및 공동이용	2013. 3. 2
	현대중공업 공과대학	교육 및 학술 교류	2013. 6. 21
경제계	중소기업중앙회	고졸 재직자 계속교육 및 중소기업 교육훈련 지원	2013. 8. 21
고교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	고졸 취업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2013. 11. 4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부자료.

### 3. 향후 과제

방송대는 앞으로도 국가 원격평생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성인 공교육’ 이념을 적극 구현하는 교육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대학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식허브’로서 역할을 더욱 증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향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학습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경로(learning pathway)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과목별 등록제 및 모듈형 교육과정 체제의 확대, 학습자 선택에 의한 다층적인 졸업자격 인정제도의 운영, 사전경험 학습인정제 도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둘째, 대국민 교양증진 및 행복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착수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OER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에게 특화된 실무중심형 OER 콘텐츠의 개발, 방송대 교육방송 채널(OUN)을 통한 대국민 교양프로그램의 증진, 교육소외계층(장애우·다문화 가정·탈북이주민)을 위한 교육복지형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대 지역캠퍼스(13개 지역대학, 32개 시·군 학습관) 시설을 전 국민을 위한 교육의 공공재로 개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캠퍼스의 교육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각 지역에 소재해 있는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도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송대는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대한상회의소 등 경제계와 교육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공동이러닝센터'의 추진체계가 정비되면 방송대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과의 연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3). **국가스마트 추진학 체제 구축 사업중간보고**. 서울: 교육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2013). **IDE 통계분석보고(제1호/제3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7~2013). **통계연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3). **졸업통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평생교육의 지역화

---



- 제1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 제2절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 제1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 1. 사업 개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를 유도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으로 구분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군·구 자치단체가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의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은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시·도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 2.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성과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기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초기에 시·군·구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해온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하고 지역주민의 학습기회를 확산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사업 중기에는 단순한 프로그램 확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회를 위해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평생학습의 연계를 통한 예산·인력 투입 및 목표달성 등은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시·군·구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

최근 추진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존의 자치단체 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한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책계획 수립까지 가능할 수 있는 바텀업(Bottom-up)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현재 118개 평생학습도시 중 상당수가 이러한 부분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도시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2012년 대비 57개가 확대된 총 85개 도시를 지원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10,320백만 원으로 운영되었다.

〈표 4-1-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신규 도시	8개 / 총 700백만 원	28개 / 총 5,320백만 원
기존 도시	20개 / 총 800백만 원	48개 / 총 4,700백만 원
일반 시군구	-	9개 / 총 300백만 원
총계	28개 / 총 1,500백만 원	85개 / 총 10,320백만 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공모·심사 결과 교육부는 28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고,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2012년도까지 지정된 90개 평생학습도시 중 48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지원하였다. 2013년의 경우 ‘학습형 일자리 창출’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 및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표 4-1-1-2〉 기존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사례

특성화 유형	도시별 주요 사업 내용	
취·창업 교육형	서울 영등포구	• 경제적 자아실현형/지역사회 환원형/학습자 공동사업일자리형: 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찾아가는 친정엄마 양성과정 등
	부산 진구	• 4050세대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지립능력 향상, 창업대비 및 재능기부 과정 운영 : 부산수제어묵, 커피전문점, 실천예절 재능기부 등
	광주 광산구	• 자연생태를 활용한 힐링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힐링 숲치방사, 힐링 발효효소치방사, 힐링푸드조리사과정 최초 개발 운영
	울산 중구	• 학습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공동체 형성: 지역 내 전문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재취업 및 창업교육 실시
	강원 동해시	• 퇴직준비 행복학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업창업 및 일자리 창출
	경기 안산시	• 학습-일을 연계한 학습공동체 형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매니저양성과정 운영, 시니어동영상제작단 운영
	경기 이천시	• 지역현안사업(이천물류패션단지)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job매칭을 통한 취업 연계
	경기 포천시	•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학습지원을 통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
	충북 제천시	• 제천 치유 전문가 양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충북 단양군	• ‘살맛나는 농촌만들기’ 군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 설계: 블랙초크베리 육성 및 농가 소득 향상 프로그램 개발
	강원 화천군	•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캐릭터상품 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협동조합 설립으로 수익창출 활동)
	충북 청주시	• 학습동아리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창업과정 운영 및 선진모델 개발
	충남 부여군	• 사회적 마을기업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및 찾아가는 문해교사 보수과정 운영
	전북 완주군	• 친환경 휴건축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창업 공동체 양성 및 소득 창출
	경북 안동시	• 귀농인구 증대와 농가 부업을 통한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연계: 창업을 위한 양봉 양성

특성화 유형	도시별 주요 사업 내용	
학습형 일자리 창출형	부산 연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사교육과 파견 학습자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특화거리 특성화사업을 통한 평생학습 핸드메이드 오픈마켓 운영 등</li> </ul>
	인천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산선비대학 운영을 통한 강사양성 및 학산학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운영</li> </ul>
	인천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원활동가 양성 및 활동 연계 추진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책임어주기 및 성교육지도 학습지원 활동가 등</li> </ul>
	대전 유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능니눔 참여를 통한 마을별 배움사랑방 조성</li> </ul>
	충남 서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이수 후 동아리 활동 및 일자리 연계: 발관리사, 발관리지도사 양성과정</li> </ul>
	전남 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환경, 문화, 평생학습리더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 지역사회 자원봉사 의무화를 통해 다양한 재능기부 연계 운영</li> </ul>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형	서울 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을 활용한 영역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 마을공동체 확산 및 민간-개인-공공의 협력, 연결고리 마련</li> </ul>
	부산 사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평생학습관이 거점이 되고 주민센터 등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 지정</li> </ul>
	대구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강사 양성과정, 마을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 마을컨설팅 등</li> </ul>
	대구 수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성 스토리텔러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단 구축, 청소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및 일자리 연계</li> </ul>
	경기 남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평생학습 인프라 부족 해결과 마을소통 및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학습등대 설치</li> </ul>
	전북 김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중심의 학습과정으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 4050안전보안관 양성과정, 아동안전관리사 양성과정, 바른 먹거리 푸듀케이터 과정 운영</li> </ul>
	전남 곡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봉사활동가 양성을 통한 지역현안문제 자체 해결: 장미공원 맞춤형 인재 양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li> </ul>
	전남 여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별 평생학습 거점 조성을 통해 평생학습 여건 확대: 행복마을학교 지원, 마을학교리더 양성과정 운영</li> </ul>
	경남 양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학습지원센터 거점기관 선정 및 행복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사회환원 활동가 지원 등</li> </ul>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3년에 추진한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은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 추진 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평가하여 28개 지역을 지원하였다.



〈표 4-1-1-3〉 201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주요 사업 내용

지역	주요 사업 내용
서울 강남구	• 지역 관광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 및 지역자원활용 학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서울 금천구	• 4050 맞춤형 학습지도사교실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울 노원구	• 소통활동가 양성 휴먼북 열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협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추진
서울 도봉구	• 학습-학습조직-자원봉사-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나눔-일자리 창출'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학습 공동체 건설
서울 서대문구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골목지기 강사양성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성화
서울 송파구	• 노인세대를 위한 맞춤형 학습과정 창출을 통하여 실버극단이라는 노인만의 당당한 일자리 창출
부산 금정구	• 금정구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양성된 금정산생태문화해설사가 재능 기부 및 금정산 홍보대사로 활동
부산 남구	• 찾아가는 배달강좌 '러닝콜(learning call)': 배달강사 일자리 창출
부산 사하구	• 지역의 생태·문화적 명소들을 '이야기 도래지'로 지정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의 생태·문화를 해설할 수 있는 '이야기 교우니' 양성
부산 서구	• 이팔청춘 액티브 시니어 지원사업
대구 북구	• 4050 중·장년층 세대의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재능나눔을 통한 배움·나눔 실천
대전 서구	•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및 마을기업 창업 추진
강원 인제군	• 노인의 자아실현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취·창업 직업소양 프로그램으로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단 구성
강원 평창군	• 귀농·귀촌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지역농촌관광 마케팅 전문가 양성
경기 가평군	• 중·장년 웰(WLL) 사업 '가평군 지평선 지도자 양성'
경기 군포시	• 미술치료사, 영상·사진 등 분야별 마을 전문교육가를 육성하여 4050세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 및 배움과 나눔의 실천 지원
경기 김포시	• 4050 세대의 인생 이모작 준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 성남시	• 100개 평생학습 기관 및 기업의 컨소시엄과 연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평생학습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경기 양주시	•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을화관 등의 지역시설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 마을 조성
경기 의왕시	• 4050 및 고령세대의 생태(숲)해설가 교육 및 전문가 양성으로 재능기부 및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기여



지역	주요 사업 내용
경기 의정부시	•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사회적응 활동 지원
경기 화성시	• 동아리 간 협업을 통해 지역실화를 소재로 한 순수 창작 동화책 제작 등 개인의 학습성장은 물론 지역문화공유에 기여하는 동아리 연합활동 지원사업
충북 옥천군	• 지역의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4050세대를 대상으로 옥천학 이문 및 현장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학습 분위기를 확산하고 옥천군 애항심 고취
충북 음성군	• 은퇴(예정)자에게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 지원
충남 홍성군	• 분야별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 자격과정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 공동 일자리 창출
경북 경주시	• 찾아가는 평생학습 경로당 ‘행복교실’ 운영
경북 영주시	• 교육소외계층(결혼이주여성 및 문외자 등)에게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경남 창원군	• 행복 지팡이 사량방 시범마을 조성: 지역 비문해자,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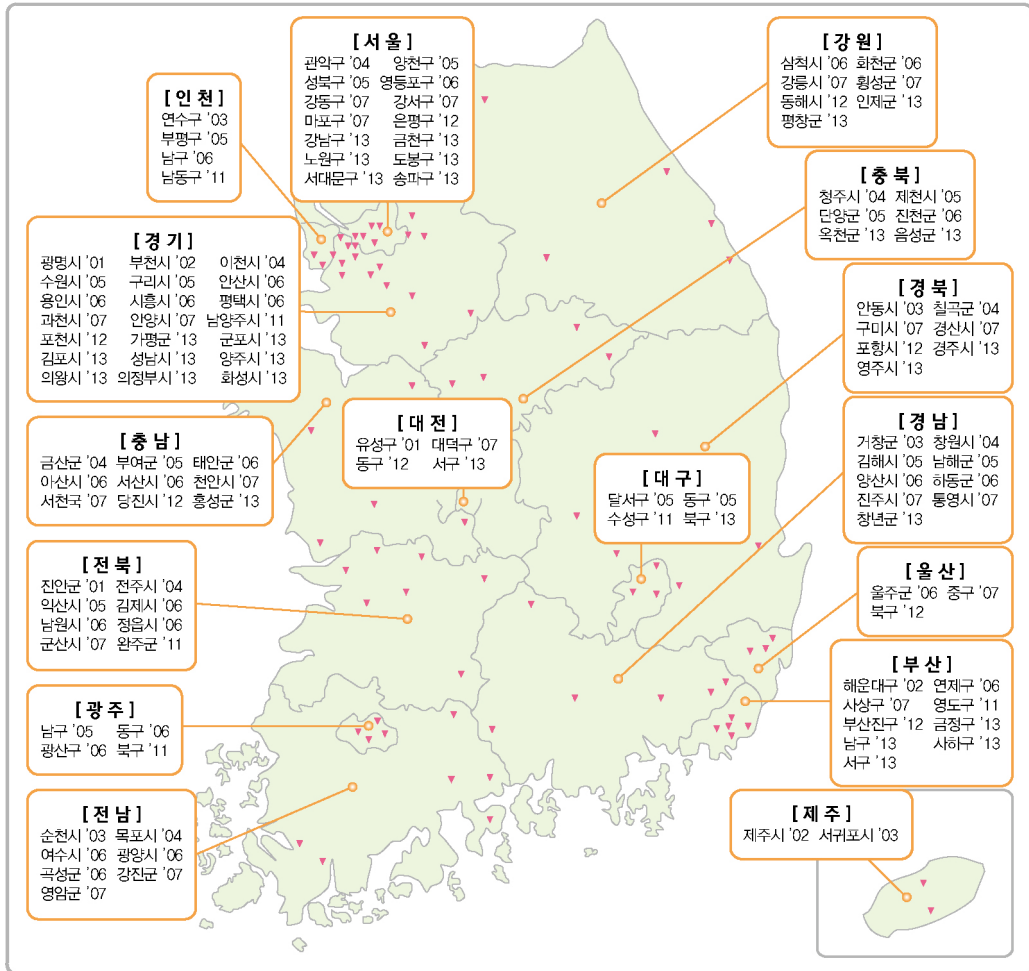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3년 12월 기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총 118개로 이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sup>1)</sup>의 약 52%에 달하는 수준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며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해오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시·군·구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9개의 일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였다. 특히 일반 시·군·구의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은 2013년에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성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평생학습도시로의 지정을 준비하는 일반 시·군·구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국고 대비 지방비 100% 이상을 대응투자함으로써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sup>

1)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기초자치체도를 폐지하여 제외함.

2)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따른 지원 단가상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50백만 원 이상 대응투자 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1-1-1]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2011년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2개의 시·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10개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지원하였다.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사업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하여 계속지원을 원칙으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10개 시·도에 총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지원 대비 50% 이상을 대응투자 하였다.



〈표 4-1-1-4〉 2013년 일반 시·군·구 평생교육 특성화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역	주요 사업 내용
서울 구로구	• 산전·산후 산모 및 가족 정신건강 관리 전문상담사 양성 프로젝트로 4050세대 특성화 일자리 창출
부산 동래구	• ‘열췌 동래 4050 재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통해 4050세대 개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대구 서구	•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부모전문상담사양성 과정으로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성폭력예방지도사 양성
경기 안성시	•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강사 및 학습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학습하는 마을 조성
충북 증평군	• Nature again! 증평보존 인력개발 프로젝트로 평생교육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
충북 청원군	• 실과 바늘의 생활예술 퀼트(Quilt) 평생교육을 통해 퀼트샵 운영 및 퀼트 전문강사 양성으로 퀼트 평생학습 지도강사와 같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
전남 보성군	• 향기와 여유가 있는 ‘찾아가는 차문화교실’로 찾아가는 차문화교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
경북 고령군	• 풍물교육을 통해 지역 풍물단 구성 및 풍물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업
경북 청도군	• 지역이 행복한 카운슬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에게 재교육기회 및 취업기회 제공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표 4-1-1-5〉 2013년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사업 지원 현황

구분	시·도명(운영시점)	지원액(국고)	
신규지원(3개)	인천(2013. 5), 경북(2013. 7), 광주(2013. 4)	총 1,120,000천 원 (지역별 차등지원)	
계속 지원	2년차 지원 (5개)	부산(2011. 7), 울산(2012. 7) 충북(2011. 4), 충남(2012. 1), 제주(2012. 12)	총 1,400,000천 원 (지역별 차등지원)
	3년차 지원 (2개)	대전(2011. 7), 경기(2011. 12)	총 360,000천 원 (지역별 균등지원)
계		2,880,000천 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은 17개시·도 모든 지역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1-6〉 시·도별 평생교육 담당부서 및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지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설립형태	지원부서	담당부서
서울	지정예정	서울연구원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부산	지정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교육협력과 평생교육담당
대구	지정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
인천	지정	인천인재육성재단	교육기획관 평생교육담당
광주	지정	광주발전연구원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인재육성팀
대전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담당
울산	지정	울산발전연구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평생교육팀
경기	재단법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원	지정예정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관실 교육협력팀
충북	지정	충북발전연구원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충남	지정	충남인재육성재단 위탁	교육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담당
전북	미정	전북발전연구원	교육법무과 인재양성담당
전남	미정	전남발전연구원	행정과 교육지원담당
경북	지정	대구대학교	인재양성과 인재육성담당
경남	미정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제주	지정	제주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세종	미정	미정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3년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광역 시·도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해당 권역 평생학습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미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운영 계획을 구상 중인 광역 시·도에도 사업 관련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였다.

### 3. 향후 과제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완비를 위한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실질적 구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역별 주요 기능을 선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대표사업으로 수행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평생학습도시와 신규 평생학습도시 또는 우수도시와 미흡도시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별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 간의 중복 운영을 지양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050 뉴스타트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2절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 1. 사업 개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이하 가사토) 사업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저소득층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육 현안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사토’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가용 가능한 교육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교육 자원(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복지관, 각종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2013년 8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201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 2. 사업 추진 현황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 6월 2차년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국고지원금 대비 50% 이상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6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 기준 국고지원금 30억 원 대비 대응투자는 27억 5천만 원으로, 총 57억 5천만 원이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쓰인다.



〈표 4-1-2-1〉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선정 기초자치단체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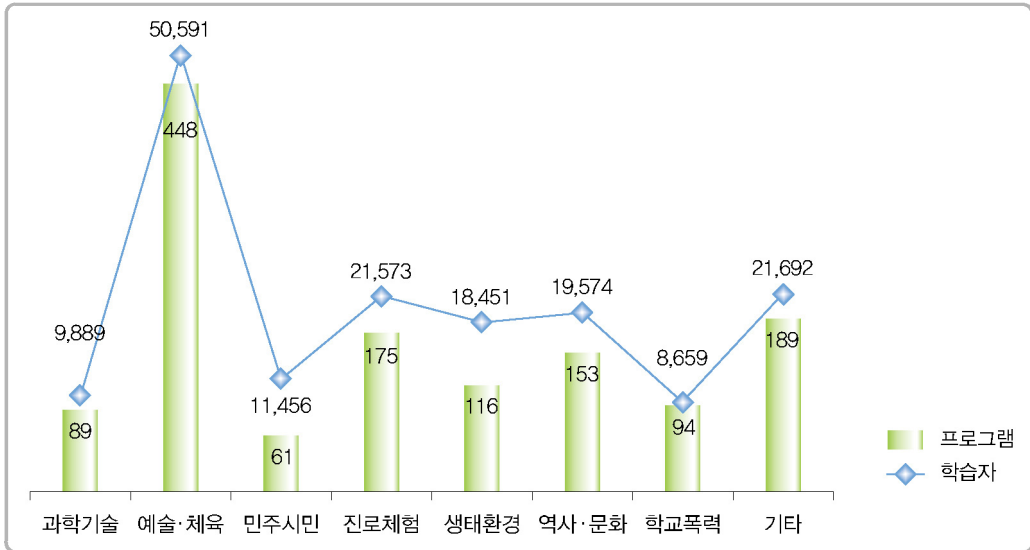
시·도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서울	구로구, 은평구, 도봉구, 광진구, 강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7
부산	서구,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영도구, 사하구, 남구, 사상구, 중구, 북구	11
대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서구, 남구	5
인천	남동구, 연수구	2
광주	동구, 북구, 남구	3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4
울산	남구	1
경기	부천시, 안성시,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성남시, 양평군, 광주시, 시흥시	10
강원	태백시,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영월군	5
충북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3
충남	천안시	1
전북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익산시, 군산시	5
전남	순천시, 담양군	2
경북	경산시, 안동시, 울진군, 김천시	4
경남	하동군, 거창군, 창원시	3
제주	서귀포시	1
계		6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가사토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보면 교육기관에서 1,3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고, 참여 학습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내용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체육 분야에서 448개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체험, 역사·문화,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순으로 운영 중이다.(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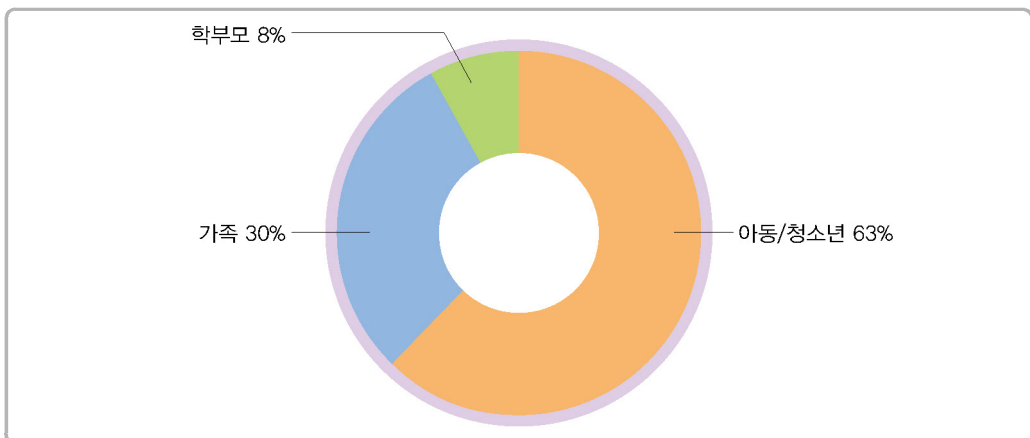
단위: 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1-2-1] 2013년 영역별 가사토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사토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분석해 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63%이며,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30%,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1-2-2] 2013년 대상별 가사토 사업 프로그램 계획 현황



### 3. 사업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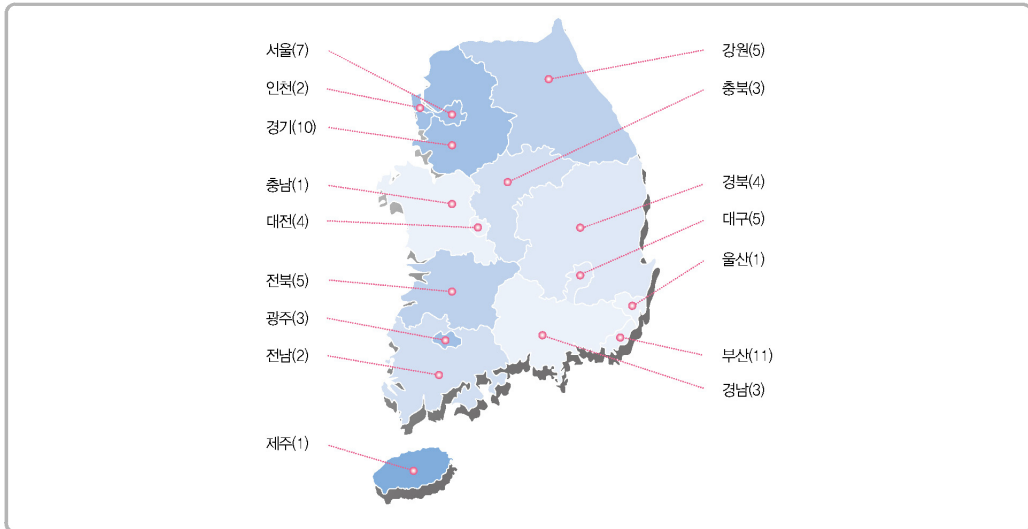
먼저 2014년 8월까지 시행되는 2013년 가사토 사업은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단기성 프로그램의 비중은 줄이고 1개월 이상의 월·분기별 중장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진로체험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체험중심 프로그램, 맞벌이·다문화·저소득층 등 가정특성이 고려된 프로그램 및 가족(부모)참여형 프로그램, 학교폭력의 치유와 회복, 시민·역사의식 제고 등 지역교육 현안해결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2-2〉 2013년 기초자치단체 가사토 사업 운영 계획 사례

기초자치단체	운영 계획 사례
광주 북구	멘토제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음식여행, 미디어여행, 신화여행, 책여행, 생태여행 등 5개의 테마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제공
대전 대덕구	대덕 생태해설사 등 대덕구만의 전문리더를 강사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내(), 가족, 친구를 주제로 각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
부산 서구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3세대(代)가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서울 은평구	‘신나는 애프터 센터’를 지역의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기관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구성 및 연계하여 문화예술,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에게 제공
충북 청주시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또래 활동가 육성 및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2012년에 이어 지역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그동안 지역 청소년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개선 및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가사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서비스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됨은 물론 시·도 단위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1-2-3] 선정 지방자치단체 전국 분포 현황

## 4. 향후 과제

가사토 사업은 2013년 사업을 기점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이 종료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노력 및 성과 그리고 본 사업에 대응투자 비율이 평균 90% 이상 유지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사토 사업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하는 지역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학습자원이 연계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제2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평생교육 문화 조성

---



- 제1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제2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 제3절 평생학습동아리
- 제4절 평생교육 국제협력



# 제1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1. 사업 개요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평생학습 우수 사례 공유와 평생학습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전국평생학습축제(이하 '축제')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이하 박람회)'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2013년 제2회 박람회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박람회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적·사회적 자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계층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복학습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상호매칭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문화 증진을 통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다.

## 2. 사업 추진 현황

박람회는 다음의 5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 사무국을 설계하고 박람회 조직·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의 주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 기획 구성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공동 주관기관과의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합의점 도출과 사무국의 팀 구성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행사의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입찰 공고부터 기술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이 단계에서 추진해야 한다.

2단계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이다. 전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평생학습도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전국단위 평생학습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안내를 실시하고,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단계는 참가신청서 접수를 통해 전시 프로그램 및 행사의 주제 적합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및 행사 조정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관련기관 및 단체(행사 대행사, 참가 기관 등)와의 의사소통체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는 운영 매뉴얼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 개·폐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지원 대책 및 운영 프로그램, 참여 기관(단체)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박람회 행사장 구성 및 배치를 확정하고 참가 기관(단체)의 지원 물품, 필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무대 프로그램 큐시트 등을 포함한 '박람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이 단계는 박람회 실행 전 마지막 단계로서, 무엇보다도 홍보를 극대화하여 개최지뿐만 아니라 주최, 주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홍보, 자원 봉사자, 교통, 숙박, 음식 등의 종합 행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유관 기관 연계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 충원 또는 일용직 채용 등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교통, 숙박 등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세심함과 치밀함이 요구된다.

4단계는 실행 단계이다. 박람회 운영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행사장 구성 및 종합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시기이다. 현장 상황실에서는 전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정례 모임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종합 안내, 전시장과 행사장 내 시설 관리 및 지원, 교통, 숙박, 식당 등을 관리·운영한다.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일일평가회를 개최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되도록 한다.

5단계는 박람회 평가 및 정리 단계이다. 박람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박람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는 다양한 기관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전시·체험관 기획·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박람회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운영위원회 최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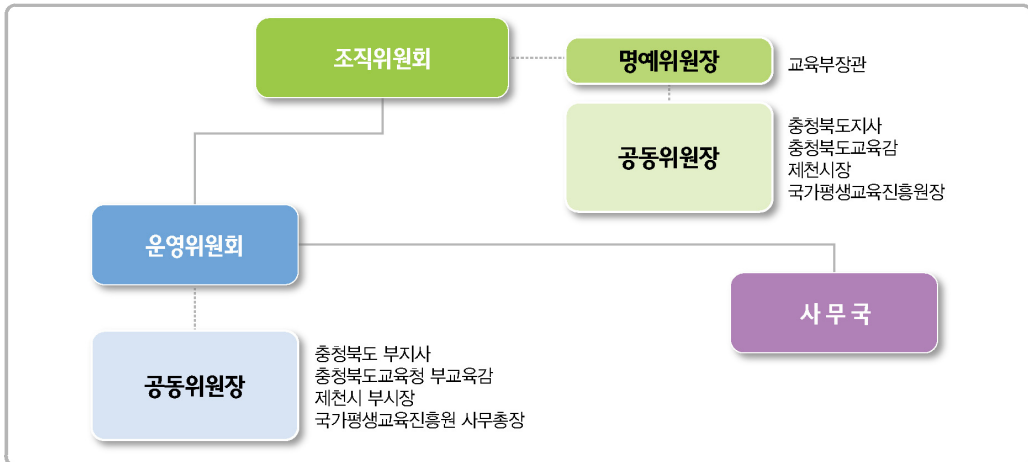


보고회를 개최하여 박람회 성과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산 운영위원회 개최 후 조직·운영 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박람회는 마무리된다.

2013년 제2회 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는 통상적으로 2012년에 공모하여 선정되지만, 2012년에 개최도시를 선정하지 못하여 2013년 1월에 개최지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4월에 제천시로 선정되었다. 개최지 선정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천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사무국에서는 박람회 운영규정, 사무관리 규정, 재무회계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 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다. 7월~8월에는 세부프로그램 공모와 선정작업을 진행하였고,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홍보 및 참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박람회를 준비하였다. 9월~10월에는 세부실행계획 및 매뉴얼을 확정하고 최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주관기관들과 참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기획 및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박람회가 무리 없이 개최되었다.

## 가. 추진체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교육부(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그림 4-2-1-1]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체계



## 나.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박람회의 추진 조직은 박람회 조직 운영의 대표조직인 조직위원회,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실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표 4-2-1-1〉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조직 운영의 대표 조직으로서 대외 명칭 사용</li> <li>• 박람회 참여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공조체제 구축</li> </ul>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운영 총괄, 사무국 운영 지도·감독</li> <li>• 박람회 세부 실행계획, 예·결산 심의·의결</li> <li>• 박람회 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 심의·의결</li> <li>• 유관기관 협의 추진 및 박람회 인력 행정지원 대책 강구</li> </ul>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기획·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li> <li>• 민간지원기구 운영, 자원봉사 등 인력 채용·관리, 홍보 등</li> </ul>

출처: 교육부(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 다. 박람회 개요

박람회는 ‘즐겁지 아니한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행복’을 키워드로 하여 부제와 표어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박람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2-1-2〉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요

구분	내용
주제	즐겁지 아니한가!!!! 행복한 평생학습
부제	배우는 기쁨, 행복한 미래
표어	당신의 평생학습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기간	2013년 10월 17일(목) ~ 10월 20일(일)[4일간]
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교육부
주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제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후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구분	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예산	1,500,000천 원

출처: 교육부(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 라. 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박람회는 1단계(1~4월)에서 개최지 선정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단계(5월)에는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립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3단계(6월)에는 홍보 체험관 운영 계획과 참가신청을 확정하고, 4단계(7~8월)에는 홍보, 홈페이지 오픈, 행사 대행업체 선정, 자원봉사자 운영을 확정하였다. 5단계(9~10월)에는 세부 실행계획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6단계(11~12월)에는 결산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표 4-2-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단계	추진기간	추진목표
1단계	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지 선정</li> <li>•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li> <li>• 예산 계획 수립</li> </ul>
2단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설립 및 창립 총회</li> <li>• 사무국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li> <li>• 주관기관별 운영프로그램(안) 선정</li> </ul>
3단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별 운영프로그램 1차 확정</li> <li>• 홍보·체험관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li> <li>• 홍보·체험관 프로그램 참가 신청(1차)</li> <li>• 전국 우수 프로그램 공모</li> <li>• 포스터 및 서체 확정</li> <li>• 행사대행업체 공모</li> </ul>
4단계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오픈</li> <li>• 홍보·체험관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li> <li>• 전국 우수 프로그램 선정</li> <li>• 동아리 작품전시, 우수 사례발표 참가 공모 및 선정</li> <li>• 학습동아리 등 경연대회 참가팀 공모 및 선정</li> </ul>



단계	추진기간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관계자 설명회(부스 등)</li> <li>• 자원봉사자 모집</li> <li>• 식당 운영 계획 수립 및 숙박업, 요식업 관계자 설명회</li> <li>• 자원봉사자 배치 및 자원봉사자 교육</li> <li>• 행사대행업체 선정</li> </ul>
5단계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실행계획 및 매뉴얼 확정</li> <li>• 셔틀버스 운영 계획 수립</li> <li>• 참가기관·단체 숙박 수요 조사</li> <li>• 홍보·체험관 운영지침 통보</li> <li>• 홍보 관련 기자 간담회 실시</li> <li>• 종합 대책 회의 개최</li> <li>• 참가 관계자 최종 설명회</li> <li>• 자원봉사자 발대식</li> <li>• 종합 상황실 설치, 긴급지원 및 안전대책 이행</li> <li>•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 실무자 최종 리허설</li> <li>• 박람회 개최</li> </ul>
6단계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사업별 결산</li> <li>•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보고회 개최</li> </ul>

출처: 교육부(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 3. 사업 운영 성과

제2회 박람회에서는 참가기관 및 단체의 특색을 살린 8개의 홍보, 전시, 체험관이 구성되어 다양한 홍보체험과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광역시·도 통합부스 및 기초자치단체 부스를 한곳에 설치하여 학습도시 및 비학습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평생학습 행복 키워드, 한국 평생교육 60년사, 대한민국 평생학습 명예의 전당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의 글로벌화로 국제학술대회 및 각종 평생교육 세미나를 개최, 전 세계에 국내 평생학습 발전상을 알리고 공유하여 지역문화를 교류하는 데 일조하였고, 개최도시의 특성을 살린 '힐링학습으로 초대'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표 4-2-1-4〉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현황

구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현황
참여기관 (전국/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9개 평생학습도시, 35개 학점은행제기관 및 유관기관, 19개 평생학습중심대학, 77개 동아리 공연, 27개 동아리 사례발표 등 총 461개 지자체,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및 단체</li> </ul>
주요 전시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총 21개 기관 및 개인 수상</li> <li>- 7가지 키워드를 통한 개막 세리머니</li> </ul> </li> <li>• 주제관: 4개관(주제관, 제천시, 충청북도, 충북교육청)</li> <li>• 동행관: 64개 광역도시 통합관 및 131개 비통합관</li> <li>• 희망관: 35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li> <li>• 대학관: 전국 19개 평생학습중심대학</li> <li>• 초대관: 전국 8개기관 33개 동아리 작품 전시</li> <li>• 사랑길(프리마켓 14개), 배움길(제천시 지역 평생학습기관 12개), 어울림 한마당(제천시 지역 동아리 및 단체 40개), 체험버스(국립현대미술관 등 3대)</li> <li>• 드림토크콘서트: 유명만&amp;황성진의 체인지, 오종철, 이영석의 꿀통소</li> <li>• 전국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경진대회: 27개팀 사례발표</li> <li>•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전시회: 수상작 106개 작품 전시</li> <li>• 전국 청소년 사생대회</li> <li>• 전국 청소년 백일장</li> <li>• 전국 사진촬영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로켓 날리기 대회</li> <li>• 힐링 아카데미(연세대학교 한준상 교수)</li> <li>• 전국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전시 경진대회(24개팀 참가)</li> <li>•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제천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40개 나눔 체험버스 운영)</li> <li>• 전국 평생학습 만화제·영화제 시상식</li> <li>• 제5회 NILE 국제학술대회 및 UNESCO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아·태 지역 후속 회의</li> <li>•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118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참석</li> <li>• 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amp; 제5회 한·일 성인 평생교육 교류 세미나(한국평생교육학회와 일본사회 교육학회 약 300여 명 관계자)</li> <li>•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토론회(평생학습관련 종사자 약 200여 명)</li> <li>• 평생교육사 一石三鳥 세미나: 평생교육사 100여 명 참석</li> <li>• 평생교육인의 밤: 부스참가자, 평생교육관계자 등 참여</li> <li>• 무대공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공연, 평생학습동아리 공연, 문화공연(9개 팀)</li> </ul>
기관 홍보 언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통이 기자단 운영: 박람회 사전 홍보 및 박람회 주요 공연, 프로그램 촬영 및 현장 취재 후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에 기사 게시</li> </ul>



구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현황
ON-LINE 홍보 인쇄물 홍보 옥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공식 보도자료 7건 작성 배포</li> <li>• 인터넷 뉴스보도: 와이뉴스 34회, 제천인터넷뉴스 6회, 제이뉴스통신 8회</li> <li>• 프레스센터 운영</li> <li>• SPOT광고 송출 : 충주MBC, CJB, YTN, 수도권 전광판, 수도권 지하철, 전국 농협 CD기, 다음 초기화면 배너광고, 월간잡지(여성동아 등)</li> <li>• 개막식 및 박람회 취재: 충주 MBC, 충주 KBS, CCS 충북방송</li> <li>• 박람회 홍보: 사전홍보 38건, 박람회기간 중 홍보 40건, 사후홍보 15건</li> </ul>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백서

제2회 박람회는 제1회 박람회보다 참여기관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전시, 체험관을 8개의 특색 있는 전시관 등으로 구성하였고, 통합부스와 비통합부스의 장점을 살려 동행관 안에 구역을 나누었다. 또한 제1회 박람회 보다 더 많은 세미나와 각종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 4. 향후 과제

박람회가 축제에서 사업명이 변경되고 예산이 줄어들어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역의 인적·사회적 자본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평생학습 문화 증진, 지역학습공동체 형성 및 강화 등 평생학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상황에서는 누구도 쉽게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sup>1)</sup>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증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광역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박람회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화의 전국적

1) 2013년 박람회 총 예산 15억 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2억 원으로 비율은 약 13.3%임



확산과 더불어 행사기간 동안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개최도시에 경제적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전국행사인 박람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가 산업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개최된 축제와 2012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일관된 프로그램들의 집합소였다.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그들만의 잔치이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겨 행사 진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여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박람회도 언젠가는 축제처럼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데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2013).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서울: 교육부.



## 제2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 1. 사업 개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이하 평생학습대상) 사업은 일상의 삶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2004년 제1회 평생학습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한국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부)가 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교육부가 주최하면서 평생학습 분야의 유일한 정부 시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국가, 평생학습 각 영역의 협회, 학회 등이 주관하여 국가차원의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목적은 개인학습자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 및 영역에서 일어나는 평생학습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포상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학습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특히,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시작된 2012년부터는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과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국가 단위 평생학습문화 촉진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2013년 제10회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동 주관하였다. 국립특수교육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 아시아나항공(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



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한국문해교육협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상 16개 평생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여 역대 최대 후원기관을 확보하였다.

각 추진체제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주최 기관인 교육부에서는 국고 예산(45백만 원)을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으로서 홍보, 신청접수, 심사 등 사업을 운영한다. 공동주관기관인 중앙일보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언론사와 방송사로서 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후원기관에서는 시상금 등 후원금과 홍보를 지원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3년 평생학습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유관 기관들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대상 최고 의결기구로 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회(이하 대상선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대상선정위원회는 ‘평생학습대상 운영에 관한 지침(2013.5.21 제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위촉하며, 20인 내외로 구성하였다. 대상선정위원회는 평생학습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결정, 평생학습대상 기금 조성, 평생학습대상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선정위원회는 교육부 국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하여 주관 및 후원기관장들로 구성되었다.

평생학습대상 심사위원회는 평생학습대상 선정위원들의 추천으로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평생학습대상 심사기준 선정 및 평생학습대상 심사를 담당하였으며, 제10회 평생학습대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평생학습대상 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후보자를 대상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상선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제10회 평생학습대상 접수 결과, 개인부문 62건, 사업부문 57건으로 총 119건이 접수되었다. 사업부문(올해의 평생학습 프로젝트)은 국민 행복과 지역사회 변화 발전에 기여한 평생교육사업이며, 개인부문(올해의 평생학습인)은 지속적 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학습 성과를 보여준 개인학습자 또는 교육현장에서의 활동·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성공적으로



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인교육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학습자 또는 성인교육자는 평생학습계좌제의 평생학습이력철 또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수기를 제출하였으며, 사업 부문의 경우 공적요약, 프로젝트 성과 및 활동 사례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출하였다. 신청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를 병행하였다.

평생학습대상 신청 공고는 매해 5~6월경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포스터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 부착하여 대국민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접수된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다단계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발한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접수 서류 및 증빙서류(포트폴리오 등)를 기초로 평가지표와 평가편람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하여 2차 심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서면심사 결과 선정 규모는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간 점수차를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부문별 심사영역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4-2-2-1〉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영역 및 배점(사업부문)

평가영역	정의	배점
1. 사업목적과 비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추진 목적과 비전의 적절성 정도	20
2. 주요 사업 내용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운영 성과 및 특성화 정도	20
3. 사회적 공헌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에의 공헌 정도	30
4. 성과 및 가치창출	사업을 통한 개인, 기관, 단체의 역량 제고 및 가치 창출 정도	30
합계		1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표 4-2-2-2〉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영역 및 배점(개인부문)

평가영역	정의	배점
1. 지식의 습득과 학습의 지속	새로운 지식의 습득 노력과 지속성 정도	25
2. 자기개발 및 혁신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노력 정도	25
3. 타인에의 긍정적 영향	학습효과를 통하여 주변에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 정도	30
4. 사회적 공헌	평생학습 결과의 활용 및 사회적 공헌 정도	20
합계		1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차 심사는 사업부문의 경우 발표 심사, 개인부문의 경우 면담심사로 진행되며, 접수 서류 내용 확인 및 평생교육의 의지, 성과 등에 대한 확인, 진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3차 현장 심사의 경우 사업부문에만 해당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과 기관에 직접 심사위원단이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성과를 직접 확인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다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점수와 평가결과를 대상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상선정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최종 수상자를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사업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우수상(교육부장관상) 4점 등 총 21점(사업부문 15점, 개인부문 6점)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였다. 부문별 수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1)</sup>

〈표 4-2-2-3〉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현황(사업부문)

시상명	훈격	사업명(신청기관/단체)
대상	국무총리상	1·2·3 학습등대(경기 남양주시)
우수상	교육부장관상	Egg 학습기부뱅크(대전 유성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마을만들기(평생교육실천협의회)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누구나학교(수원시평생학습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훈련(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	공향초꿈빛마루평생교육(인천공향초등학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상	작은거위, 광주 남구여 노래하래(광주 남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장상	학습놀이터 조성사업 토요일엔 놀러가(경기 광명시)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	인생이 행복한 생태학습(전남 순천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상	백마Win-Win아카데미(육군제9보병사단)
	중앙일보사 이사장상	지(地)X지(知) 파트너십 프로젝트(공주대평생교육원)
장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학점은행제 칠곡평생학습대학(경북 칠곡군)
	한국평생교육학회장상	창의혁신 인적자원개발연구회(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상	평생학습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서울 강동구)
	한국산학연합회장상	사회적 기업양성 아카데미 평생학습(경기 파주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사례집

1) 수상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상사례집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가능함.



〈표 4-2-2-4〉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현황(개인부문)

시상명	훈격	수상자(특징)
우수상	교육부장관상	박정순(탈북자, 문해교육강사)
		박재효(군인, 방송대출신 공학박사)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권희경(중소기업 사장, 만학도)
	한국문해교육협회장상	박상균(경찰대 교수, 야학봉사)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장상	이재실(공학·교육학 박사)
장려상	국립특수교육원장상	정인순(장애인, 여성농업경영인)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사례집.

### 3. 사업 운영 성과

2013년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숙원이었던 국무총리상으로 훈격 격상을 달성했다. 평생학습대상이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 유일의 국가단위 시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무총리상으로의 승격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온 성과를 인정받아 훈격을 격상시킬 수 있었다. 정부시상은 단계적 격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대통령상으로의 격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평생학습대상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등 사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수상사례가 대중에게 공감을 갖게 하고 평생학습문화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대상 사업에서 공정성과 원칙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대상의 목적, 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동주관기관 및 후원기관들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평생학습대상 사업으로 책정된 국고 예산(45백만 원)은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학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책을 제시해주시 못하였다. 그러나 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평생학습대상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만의 사업이 아니라 평생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의 공동 사업으로 인식하게 하고, 후원금 증액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시상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시상부문을 간소화하고 수상사례의 파급효과를 높였다. 기존 평생학습대상 사업 시상 부문은 개인학습자, 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교육기관 및 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7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2012년에는 다양한 기관들을 공통적인 요소로 묶어 개인부문, 기관 및 단체 부문, 공공기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간소화하였다. 이렇듯 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상 기관 및 단체가 어떤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2013년 제10회 평생학습대상 사업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개인부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상사례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기관 및 단체 부문을 사업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특성화된 평생교육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시상함으로써 수상사례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4. 향후 과제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시상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상사례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부문으로 조정할 사유와 필요성은 타당하지만, 사업 부문의 신청 주제 즉, 교육기관 및 단체들은 이질적인 성격의 기관들이 많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부문 내에서 기관별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수상 단체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학습대상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2013년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접수 건수는 2012년 212건에서 2013년 119건으로 43% 감소하였다.

〈표 4-2-2-5〉 평생학습대상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2004년 (제1회)	2005년 (제2회)	2006년 (제3회)	2007년 (제4회)	2008년 (제5회)	2009년 (제6회)	2010년 (제7회)	2011년 (제8회)	2012년 (제9회)	2013년 (제10회)	계
접수 건수	140	156	113	118	151	149	202	98	212	119	1,458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평생학습대상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 현황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공동주관인 언론사와 방송사 그리고 후원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수행하던 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참여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홍보 전략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학습 동아리, 학교, 기업 등 참여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연수기회 제공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사례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제3절 평생학습동아리

### 1. 사업 개요

우리나라에서 학습동아리의 개념이 도입되고 실천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후반 스웨덴의 'Study Circle'이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2001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 '전통 계를 학습동아리 운동으로 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습동아리는 정책추진과제로 도입되었다. 그 후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로 「성인여성의 학습동아리 활동 시범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이지혜 외, 2001), 「학습동아리 지도자 가이드북 및 학습자료 개발」(이지혜 외, 2004)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습동아리는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모임'과 구분되고,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기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삶의 터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실행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와 구분된다. 학습동아리는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수평적 구조의 학습공동체이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사업 추진 현황

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한 정책은 국가 단위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는 전국평생학습박람회에서의 학습동아리 경연대회나



전시회, 그리고 평생학습대상을 통한 시상제도를 통해서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격려하고 있지만, 학습동아리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아리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동아리 등록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학습동아리 현황 파악 및 DB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현재 118개 평생학습도시에서 조사된 학습동아리 수는 5,349개이며, 참여자 수는 92,607명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둘째, 개별 학습동아리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다.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은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상옥(2009)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76개 평생학습도시에서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 사용된 전체 예산은 약 18억 2,500만 원으로 도시 평균 2,400만 원이었고, 이 중 보조금 지원은 약 10억 1,500만 원(평균 1,336만 원)이었다. 그리고 2013년 118개 평생학습도시에서 사용한 학습동아리 지원금은 총 약 14억 2,510만 원으로 도시 평균 약 1,208만 원이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습동아리 리더 및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학습동아리 연수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나 이에 지출되는 예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평생학습도시에서 학습동아리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리더 및 구성원 연수에서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 운영 실무 교육, 리더십 훈련, 주제별 심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사례발표회나 전시회와 같은 학습동아리 관련 행사가 있다. 2013년 학습동아리 관련 행사에 소요된 예산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기존 자료(박상옥 외, 2009;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2010)에 따르면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학습동아리의 학습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학습동아리 연구보고 및 성과보고와 같은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에는 다른 학습동아리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습동아리 매뉴얼이나 가이드북 제작, 연구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발간, 활동사례집 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학습동아리 컨설팅이나 학습동아리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동아리 컨설팅 사업은 학습동아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함께 모색하는 사업이다. 학습동아리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학습동아리의 학습결과 및 역량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의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 현재 평생학습도시에 등록된 5,349개 학습동아리 중 3,872개가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 3. 사업 운영 성과

#### 가. 추진 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습동아리 수, 참여자 수, 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동아리 지원금 규모, 사회참여 학습동아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각각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학습동아리 현황을 평생학습도시와 일반 시·군·구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로, 학습동아리와 참여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습동아리를 조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알지 못하는 자생적 학습동아리도 존재한다는 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현황 조사에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습동아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연도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아래의 두 표가 국내의 학습동아리 현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4년간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동아리와 참여자 수 그리고 학습동아리에 대한 사회적인 기여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2-3-1〉 평생학습도시의 학습동아리 현황

항목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동아리 수(개)	2,961	3,787	4,506	6,118
참여자 수(명)	55,731	68,956	84,049	107,091
지원금 받는 동아리 수(개)	1,189	1,301	1,444	1,762
지원금 총액(천 원)	1,053,088	1,109,923	1,303,814	1,614,979
사회참여 동아리 수(개)	2,489	2,939	3,312	4,184

\* 2013년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118개 지자체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 지자체(서울 서대문구, 부천시, 인천시, 평택시, 화천군, 아산시, 홍성군, 남원시, 제주시)를 제외한 109개 평생학습도시의 현황자료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표 4-2-3-2〉 일반 시·군·구의 학습동아리 현황

항목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동아리 수(개)	629	796	1031	1,331
참여자 수(명)	12,051	14,995	19,219	25,505
지원금 받는 동아리 수(개)	252	306	456	563
지원금 총액(천원)	472,003	447,444	564,225	787,934
사회참여 동아리 수(개)	177	267	405	617

\* 2013년 현재 일반 시·군·구인 10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미응답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학습동아리와 참여자 수가 2010년 2,961개(55,731명)에서 2011년 3,787개(68,956명), 2012년 4,506개(84,049명), 2013년 6,118개(107,091명)로 3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황조사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평생학습도시별로 등록된 학습동아리 수가 2010년 평균 27.2개에서 2013년 56.1개로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 역시 2010년 평균 약 511명에서 2013년 983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2010년 629개(12,051명)에서 2013년 1,331개(25,505명)로 두 배 이상 학습동아리 수와 참여자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동아리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학습동아리 수도 증가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2010년 1,189개 학습동아리에 총 1,053,088천 원을 지원하였고, 해마다 지원된 학습동아리 수와 지원금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1,762개 학습동아리에 총 1,614,979천 원을 지원하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109개 평생학습도시의 평균을 살펴보면, 현재 평생학습도시들이 2010년에는 평균 11개 학습동아리에 총 9,661천 원(1개당 88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점차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평균 16개 학습동아리에 총 14,816천 원(1개당 91만7천 원)을 지원하였다. 일반 시·군·구 역시 2010년 252개 학습동아리에 총 472,003천 원을 지원하였고,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563개 학습동아리에 총 787,934천 원을 지원하였다.

평생학습도시와 일반 시·군·구의 2010년 사회참여활동 수행 학습동아리 수는 각각 2,489개, 177개에서 2013년에는 각각 4,184개, 617개로 증가하였다. 학습동아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사회참여 학습동아리 수의 증가만으로는 사회기여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학습동아리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평생학습도시의 학습동아리와 참여자 수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학습동아리 수와 참여자 수 자료를 모두 제출한 73개 평생학습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학습동아리 수는 2010년 2,723개(평균 37.3개), 2011년 3,226개(평균 44.2개), 2012년 3,597개(평균 49.3개), 2013년 4,120개(평균 56.4개)로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는 2010년 51,615명(평균 707.1명), 2011년 59,143명(평균 810.2명), 2012년 68,471명(평균 938.0명), 2013년 71,771명(평균 983.2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4-2-3-3〉 연도별 평생학습도시의 학습동아리 및 참여자 수 증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서울 관악구	3	58	4	72	6	93	39	602
서울 영등포구	26	660	21	528	17	459	18	436
서울 강동구	26	504	31	665	47	954	57	1,112
서울 강서구	21	360	23	373	48	706	60	865
서울 강남구	22	781	48	1,315	85	4,863	138	5,452
부산 해운대구	59	1,086	60	1,106	62	1,138	67	1,191
부산 연제구	34	627	53	864	63	1,040	67	1,037
부산 사상구	24	416	38	622	33	653	50	822
부산 부산진구	10	259	11	267	17	341	19	368
부산 서구	5	75	8	132	9	171	12	249
대구 달서구	83	1,167	89	1,028	53	641	50	717
인천 연수구	36	537	45	657	61	835	72	928
인천 부평구	93	1,543	108	1,801	120	1,972	135	2,209
인천 남구	32	622	36	677	38	690	43	758
광주 남구	41	803	46	867	51	947	56	1,038
광주 동구	40	704	3	32	4	80	10	112
광주 광산구	56	663	66	966	49	707	58	663
광주 북구	27	386	22	334	13	267	104	1,019
대전 대덕구	39	273	44	421	90	802	101	960
대전 동구	19	223	24	294	31	397	35	456
대전 서구	27	491	26	476	27	489	35	610
울산 울주군	24	604	19	317	19	367	21	353
울산 중구	37	599	37	599	59	980	69	1,142
경기 구리시	57	1,037	91	1,539	111	1,762	136	2,061
경기 수원시	21	242	105	1,497	35	580	44	1,898
경기 시흥시	79	1,018	145	2,488	148	2,524	166	2,429
경기 안산시	189	3,696	198	3,895	207	4,049	74	1,207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경기 용인시	46	720	67	1,116	87	1,389	107	1,697
경기 과천시	81	1,494	109	1,931	127	2,216	139	2,369
경기 안양시	3	17	31	23	42	29	64	36
경기 남양주시	72	1,388	92	1,362	120	2,265	158	2,477
경기 포천시	22	441	51	772	76	1,048	105	1,405
경기 김포시	46	633	14	142	7	120	7	106
경기 성남시	25	529	38	958	56	1,338	77	1,639
경기 의왕시	12	190	12	190	40	547	45	606
경기 의정부시	53	1,225	58	1,305	62	1,353	65	1,383
경기 화성시	23	381	32	479	74	1,034	98	1,359
강원 삼척시	30	592	33	602	24	327	27	365
강원 횡성군	37	756	40	816	42	852	46	926
강원 평창군	7	85	8	96	12	216	14	245
충북 청주시	103	2,056	116	2,302	124	2,469	136	2,560
충북 단양군	18	297	29	477	31	493	34	544
충북 진천군	44	699	48	761	60	908	72	1,046
충남 금산군	7	97	8	118	11	186	11	234
충남 부여군	22	415	13	284	7	196	6	155
충남 서산시	34	421	41	483	48	483	52	486
충남 태안군	15	224	20	277	21	302	22	312
충남 서천군	17	386	18	401	21	440	16	317
충남 천안시	148	4,601	148	4,584	153	4,740	153	4,740
전북 진안군	18	379	18	400	18	350	18	355
전북 전주시	24	770	26	875	26	845	28	527
전북 김제시	61	1,169	66	1,259	69	1,308	74	1,348
전북 정읍시	27	490	28	502	36	631	41	717
전북 군산시	20	420	29	548	40	689	52	845
전북 완주군	10	177	23	411	15	254	22	341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학습 동아리 수	참여자 수
전남 순천시	117	2,413	129	2,537	148	2,854	159	1,693
전남 목포시	8	123	8	123	8	123	8	123
전남 여수시	33	508	30	491	26	542	15	265
전남 광양시	30	484	39	652	42	697	50	848
전남 영암군	3	41	3	41	3	41	9	73
경북 안동시	12	270	13	261	14	238	18	390
경북 칠곡군	29	511	35	608	36	621	36	546
경북 경산시	33	700	29	561	23	578	32	668
경북 구미시	12	189	13	308	13	209	11	194
경북 포항시	17	195	20	222	27	323	34	404
경북 경주시	8	156	9	169	9	171	8	166
경남 거창군	41	742	37	600	36	814	36	551
경남 창원시	161	3,352	179	3,731	183	3,852	188	3,998
경남 남해군	4	68	5	103	6	129	12	158
경남 양산시	18	360	10	200	12	240	8	160
경남 하동군	4	57	0	0	3	50	3	55
경남 진주시	34	798	40	1,027	45	1,229	57	1,420
제주 서귀포시	7	162	10	203	11	225	11	225
합계	2,723	51,615	3,226	59,143	3,597	68,471	4,120	71,771
평균	37.3	707.1	44.2	810.2	49.3	938.0	56.4	983.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나. 시사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지원 사업의 성과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학습동아리의 학습 및 활동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보다 더 구체적인 학습동아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습동아리 현황 조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학습동아리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조사 항목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그 성과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에 대한 연수, 학습동아리 사례 발표, 자료집, 실천활동 지원 등에 대한 예산과 성과조사 항목을 정하여 꾸준히 현황 및 성과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향후 과제

국내에 학습동아리 개념이 도입된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학습동아리는 평생교육 실천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해 왔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국가 정책은 없었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학습동아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학습동아리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주로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단위에서는 평생학습대상이나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우수 학습동아리를 시상하거나 사례발표를 하도록 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인 평생학습도시의 노력에 의해 학습동아리가 성장해왔지만, 지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학습동아리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나 정책연구는 국가단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각 시·도별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광역단위의 학습동아리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읍·면·동 단위에



설치·운영될 행복학습센터에서도 학습동아리를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단위에서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각 단위의 평생교육추진체제에서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각 단위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학습동아리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동아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모든 학습동아리에 대한 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등록된 학습동아리의 DB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학습동아리 실태 조사 및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의 학습과 실천 활동의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학습동아리의 학습결과와 실천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습동아리의 학습성과 인정은 현재의 평생학습 박람회나 평생학습대상의 시상 및 성과 발표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정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계좌제나 선행학습경험인정제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학습동아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평생교육의 한 실천 형태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상옥·이지혜·홍숙희·김선미(2009). **학습동아리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평생교육진흥원 미발간 보고서.
- 이지혜·홍숙희·박상옥(2001). **성인여성의 학습동아리 활동 시범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지혜·홍숙희·이숙원·박상옥·박현규(2004). **학습동아리 지도자 가이드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2010). **2010 평생교육백서**.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제4절 평생교육 국제협력

### 1. 사업 개요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여, 국가 지위가 국제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평생교육 분야 역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성과를 전파하고 지원해주는 입장으로의 역할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국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한국 평생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ODA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평생교육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2. 사업 추진 현황

2012년은 평생교육 국제협력 분야의 주요 행사 및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해였다면, 2013년에는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과 함께 평생교육 관련 주요한 국제회의가 어느 때보다 많이 개최되었다. 먼저, 2013년 6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세계평생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둘째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IPLC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 및 국제학습도시 자치단체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IPLC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는 2012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IPLC 준비회의에 이어 IPLC 론칭을 위한 국제전문가들의 준비회의로, 국제학습도시 자치단체장 연석회의는 평생학습도시 자치단체장들이 국제 평생학습 석학과 학습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 번째는, 10월 18~19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개최된 제5회 NILE 국제학술회의 및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 아·태지역 후속회의가 열렸다. 2008년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의 벨렘 선언 이후 아·태 지역의 진행사항 공유를 통한 성인학습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주최한 회의는 2013 글로벌인재포럼(Global HR Forum)에 평생교육 세션이 진행되었다.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3 글로벌인재포럼 중 처음으로 평생교육 세션을 구성하여 ‘100세 시대 평생학습, 인생 3모작을 위한 행복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평생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2012년 북경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도, 총 두 번의 준비 회의를 거쳐 2013년 10월에 제1회 국제학습도시 네트워크가 창설되었다. 이 창설회의는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대표로 총 2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다. 12월 12~13일에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에서 주관하는 제2회 Think Tank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Post-EFA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세계교육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2013년은 평생교육 주요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제회의 참석을 넘어 교육개발컨설팅 관련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DA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해였음을 알 수 있다.

### 3. 사업 운영 성과

#### 가. 국내·외 국제교육 관련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2013년에는 국내외 개발 컨설팅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유사 협의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다. 특히 ODA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개발컨설팅 운영방안을 위한 설문을 통해 ODA 사업 내에서 평생교육 영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ASEM RN4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생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한국 평생교육 국가보고서(White Paper)를 제출하고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단순 네트워크의 가입 및 활동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 평생교육 사례를 발굴해 「글로벌 평생교육동향」을 제작하여 국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한국의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Lifelong Learning in Korea」로 제작해 해외 유관기관에 한국의 평생교육 우수 정책에 대해 홍보하였다.

## 나.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 1) 세계평생교육포럼

2013년에는 평생교육 부문에서 국제적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개 포럼의 장인 제1회 '2013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세계의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포럼은 '세상을 바꾸는 힘, 평생학습도시(Learning cities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 하에, '평생학습도시 생태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총 6개의 세부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6개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주요 이슈와 관련된 주제에 따라 한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사례 공유를 통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2) IPLC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 및 국제학습도시 자치단체장 연석회의

2013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새로이 착수하는 IPLC 구축을 위하여 제주도에서 'IPLC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 및 국제학습도시 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 UIL,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주관하였고, 교육부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후원하였다. IPLC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에서는 국내·외 IPLC 시범사업참여 학습도시 관계자를 비롯하여,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학습도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을 논의하며, 학습도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UIL에서는 국제학습도시 주요 특징(안)을 준비하였고, 향후 국제적으로 학습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한국에서는 2013년 IPLC 시범사업 도시로 경기도 이천과 광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학습도시 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는 IPLC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외에 국내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학습도시의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학습도시의 적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2013 세계평생학습포럼 제주선언문'을 발표하여, 한국의 평생학습도시의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평생학습 강국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회의에는 영국, 핀란드, 미국, 호주, 케냐, 브라질, 베트남, 중국, 터키, 자메이카 및 UIL, OEL, ADEA 등의 13개 국가와 국제기구, 지역기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3) 제5회 NILE 국제학술회의 및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 아·태지역 후속회의

2009년 5월 브라질 벨렘(Belém)에서 개최된 제6차 CONFINTEA 회의에서 '실현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인학습 및 교육의 힘과 가능성의 활용'이라는 주제 아래 벨렘 행동 강령(Belém Framework for Action: BFA)을 선언하였다. 벨렘 선언문을 통해 성인학습과 성인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아·태지역회의를 개최하여 본 후속회의에서 벨렘 선언문 실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추진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혁신적인 접근 및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태지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성인교육정책 접근법, 다양한 학습 기회, 지역 협력 증대 등에 관한 행동 강령을 모색하였다. 이 후속회의에서 성인학습교육의 국내·외 동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성인학습교육의 주요 쟁점, 트렌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아·태지역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의 정책 및 시행,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성인학습정책 진흥, 평생교육 인증체제, 학습



도시 및 지역학습센터 구축 및 확대, 성인학습 참여 확대와 기회 제공 증진, 성인학습 발전을 위한 권고와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후속조치로 아·태지역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 4) 2013 글로벌인재포럼(Global HR Forum)

글로벌인재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HR 분야의 가장 큰 포럼 중 하나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을 글로벌 협업을 통한 인재개발에서 찾고, 정부, 공공, 민간, 기업 등 각 분야의 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인재개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인재포럼은 교육부와 한국경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 주최로 매년 개최된다. 2006년 처음 시작하여 2013년 8회째를 맞고 있는 포럼은 11월 5~7일 3일간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처음으로 평생교육 세션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벽을 넘어서'로 좁게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융합형, 통섭형 인재육성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넓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추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인종을 뛰어넘어 화해와 통합, 번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인재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대주제 안에서 평생교육 세션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인생 3모작을 위한 행복교육'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평생교육 세션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학습이 국내·외에서 지향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해외 평생교육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격차 없는 학습을 위하여 단계별, 계층별로 요구되는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과 실현방안을 논의하였다.

#### 5) 제1회 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IPLC)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8~2013 중기계획(목적: 모두를 위한 질 좋은 교육과 평생학습의 달성)'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회원국들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게 되는 도시화 경향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가면서 유네스코는 학습사회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ies)', '학습도시(Learning Cities)', '학습지역(Learning Regions)'의 성장이 평생학습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의 포용, 번영,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0월 21~23일 중국 북경에서 첫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크게 학습도시 건설사례 발굴,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성, 학습도시 건설 주요 전략 수립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뉘었다.

급변하는 사회에 도시 및 지역사회의 시민 역량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이 확산되어야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생학습이 강조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전 세계 102개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 국제기구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학습도시 구축에 관한 북경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학습도시의 주요 특징을 합의하였고, 향후 이 자료가 학습도시의 발전단계를 모니터링 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다. 한국은 교육부 차관, 평생학습도시 자치단체장 등 총 25명을 대표단으로 구성하여 참석하였다. 전 세계 102개국에서 50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법과 체계를 갖추어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가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다.

#### 6)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Conference 회의

제11회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Conference가 11월 18~20일 홍콩 이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RMIT EU 센터가 주관하고 홍콩교육원이 주최한 이번 회의는 ‘함께 학습하는 도시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습도시 속의 지역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는 세계 각 국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평생교육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이 모여 녹색, 건강, 경제, 사회 등 주요 실천영역에 대하여 토론하며 이를 위해 주요 파트너로서 정보, 지역사회, 민간부문,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7) UIL 제2회 Think Tank 회의

12월 12~13일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유네스코 평생교육원(UIL) 주관으로 Think-Tank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제는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에 따르면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 12개 중 하나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제공(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이 제시되었다. 평생학습은 발전을 위한 기회이며, 이에 2015년 이후의 의제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평생학습 정책 개발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번 Think-Tank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Think Tank 회의는 2015년 이후의 교육 의제에서 평생교육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로 국가별·지역별 평생학습정책과 전략이 논의되고, post-2015 개발의제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었다. 2015 세계교육회의가 한국 송도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만큼 이번 의제 선정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자국의 평생교육을 널리 알리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평생교육의 개념이 잘 반영되는 의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다. ODA 사업

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시작하였다. 연구 주제는 페루 카하마르카 지역학습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페루 카하마르카 주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동 지역에서 요구되는 소득창출 기반이 될 교육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카하마르카 주의 지역학습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페루의 빈곤 지역 중 하나인 카하마르카 주에 '지역학습센터' 설립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카하마르카 주의 직업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 지역 주민의 내재적 자생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페루의 후속지원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고, 카하마르카 지역 주민의 기초 교육력과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숙련된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의 내재적 자생역량 강화를 통해 카하마르카 지역의 자립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약 계층인 카하마르카 지역 주민들의 생애기술



능력 학습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페루의 사회통합 정책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한국과 페루, 한국과 이베로 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for the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OEI)의 우호 관계 증진 및 교육부문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4. 향후 과제

2013년은 어느 해보다도 평생교육 영역에서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외국에서 개최된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한 해였다. 2012년 ASEM 및 ADEA 등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평생교육 주요 회의를 공동주관하여 향후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성과를 거두었고, 2013년에는 다양한 네트워크에도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생교육을 홍보하고 그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한국이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유네스코에서 2015년 세계교육회의를 위한 post-EFA 의제로 '평생교육'을 제시한 만큼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서 국가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육 ODA 사업 추진 지역(대륙 및 국가 모두)의 다각화 및 교육 ODA 선도사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국가의 국가평생교육 추진기구와 교류 및 네트워크 확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네트워크 구축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기반을 닦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지원은 단순 예산 지원 및 교육시설 설립 지원 등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치중되어 왔다.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수원국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ODA 사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 ODA 사업에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교육 ODA 사업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평생 교육관련 글로벌 ODA 사업의 수요가 증대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저개발 국가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ODA 사업과 함께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IPLC 회의기간 동안 중국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한국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평생학습도시 정책 및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세계적인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비교우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 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 세계평생학습포럼 : 세상을 바꾸는 힘, 평생학습도시 - 평생학습도시 성장 동력과 미래 전략**.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경제(2013). **Global HR Forum 2013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경제.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3). *CONFINTEA VI Regional Follow-up Meeting for Asia and the Pacific - Four years after Belém : Taking stock of progres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UNESCO-IPLC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장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 향후 평생교육정책 전망 및 과제

---





## 제3장 향후 평생교육정책 전망 및 과제

2013년 평생교육정책의 전망 및 과제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Retrospect) 새해를 내다보는(Prospect) 장이다. 내일이 오늘 되고, 오늘이 어제 되듯이 어제와 오늘이 연결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망과 과제도 따로 분리해 기술하기 어려운 관계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2013년 평생교육통계 조사결과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향후 평생학습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데 충분할 것이다.

### 1. ‘2013년 평생교육통계’의 정책적 함의

평생교육통계는 2013년 평생교육의 오늘뿐만 아니라 지나온 어제와 우리가 갈 내일을 알려주는 지표다. 어제와 오늘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은 평생교육의 풍광과 지형도를 형성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평생교육도 이념에서 통계로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 OECD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대세다. 통계는 정책의 연료이자 밥이다. 통계 없이는 정책 입안이 어렵다. 정책의 3요소인 목표, 대상, 수단에 있어서 통계 데이터가 들어가야 설득이 된다. 정책의 주기인 입안(Plan), 시행(Do), 평가(See)라는 사이클 면에서도, 특히 평가 단계에서 통계는 중요하다. 통계는 소수 엘리트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다. 통계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통계가 뭘 말해주는가에 조리개를 맞추어 2013년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 통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평생교육 편모와 지형도의 스냅 사진을 찍어보고자 한다.

첫째, 2013년 기준 평생교육기관은 총 4,992개소이며, 이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3,965개로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2012년 4,774 → 2013년 4,992). 그 중 눈에 띄게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 2011년 376개에서 2012년 494개, 2013년 703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학습자 통계로 보면 준형식 평생교육을 받는 학습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형식 평생교육을 받는 학습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기관 분류로 인해 많은 수의 평생교육기관이 학원으로 전환되거나 폐원되어 통계상에 계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을 접하는 학습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3,965개소 중, 1,387개의 기관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795개소를 합치면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1/2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집중은 인구의 집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비형식, 무형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의 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서울 편중 현상이 완화되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표 4-3-1〉 연도별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자 수 개황

단위: 개, 명

구분	평생교육기관 수			학습자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3,591	3,768	3,965	28,920,780	17,618,495	8,260,301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1,008	1,006	1,027	754,472	710,169	677,620
계	4,599	4,774	4,992	29,675,252	18,328,664	18,937,921

둘째, 총 프로그램 180,843개 중에서 56,454종이 직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단일 프로그램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31.2%), 시민참여 분야는 총 9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인문교양 영역과 문화예술 영역을 합치면 65,780건(35.8%)으로 직업능력향상 분야보다 더 비중이 높다.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의 수와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는 증가한 반면, 전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개수는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서울 2012년 75,496개 → 2013년 70,387개). 유네스코가 제안했듯이 평생학습의 4대 기둥 면에서 존재를 위한 학습, 삶을 위한 학습, 행함을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는 학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평생고용가능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적극적 시민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완전한 인간 양성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 없는 사회 실현, 청년실업문제 해소, 중장년 전직교육에 정책의 방조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면에서도 직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이 여전히 압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교육의 양 수레바퀴 중 하나인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셋째, 모든 평생학습정책의 노력과 성과는 ‘참여율’로 나타난다. 참여율은 연도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차이를 보인다. 평생학습정책 수립과 전망, 과제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통계가 바로 평생학습 참여율이다. 2007년도부터 조사해 온 이래 대부분 꾸준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러다가 2013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형식, 비형식교육)은 30.2%로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10명 중 3명의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35.6%에 비해 5.4% 낮은 수치이다. 2013년도에 통계조사의 규모와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적지 않은 하락 폭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참여율(31.3%)은 남성의 참여율(29.1%)보다 2.2% 높았으며,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평생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면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를 던져준다. 평생학습은 수월성(Excellence)보다는 형평성(Equity)을 추구한다. 평생학습 참여율을 크게 끌어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 기회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할 이중 과제를 안기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의 양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 4-3-2〉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9.8	26.5	28.0	30.5	32.4	35.6	30.2
형식교육	5.7	4.1	4.3	3.9	4.2	3.5	3.8
비형식교육	26.4	23.9	25.3	28.2	30.1	33.1	28.0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9.2	11.7	14.3	15.1	16.0	15.4	16.4



넷째, 성별 참여율 분석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형식 교육은 남성이, 비형식 교육은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학교 형태의 교육에는 남성이, 사회교육 형태의 비정형화된 학습에는 여성이 많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연령대 면에서도 젊은 층은 형식교육에, 노년층은 비형식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양태를 보인다. 형식교육은 시간, 장소, 돈 면에서 구축성을 보인다면 비형식교육은 상대적으로 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3-3〉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남성	29.1	4.1	26.9
여성	31.3	3.5	29.2

다섯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 변인이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율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25~34세가 30.8%인데 비해 55~64세는 25.1%이다. OECD 선진국의 참여율에 비해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떨어진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65세 이후는 급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인의 눈에는 64세 이후는 평생학습정책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정부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평생교육 통계조사 대상을 64세 이후도 포함시켜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후반전인 50세 이후 100세까지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제2의 평생학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0세 이후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정책 수단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시사한다.

〈표 4-3-4〉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25~34세	35.9	9.0	30.8
35~44세	31.9	3.3	29.9
45~54세	26.3	1.5	25.3
55~64세	25.4	0.7	25.1



여섯째, 우리나라 성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이상 성인(37.2%)은 중졸 이하 성인(19.7%)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교교육을 많이 향유한 계층이 평생학습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생학습이 기존 학교교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래의 평생학습은 가난의 대명사인 교회 지하실의 생쥐와 함께 한 역사라고 할 정도로 서민을 위한 교육, 학령기에 놓친 교육기회를 보상하기 위한 패자부활전의 교육, 제2의 기회로서의 교육 성격이 강하다. 과거에 학교교육은 엘리트들을 위한 특권으로서의 교육이었다면 오늘날의 평생학습은 만인을 위한 학습 권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율 전반을 끌어올리고, 평생교육 본연의 성격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균을 떨어트리는 중등 학력 이하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4-3-5〉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중졸 이하	19.7	0.8	19.2
고졸	26.2	3.6	24.1
대졸 이상	37.2	4.9	34.4

일곱째, 평생학습 참여율과 경제활동 및 소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인구(31.2%)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실업자(30.9%), 취업자(29.8%) 순으로 각각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에 참여하려면 우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른 한편 경제활동 인구는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이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생학습이 비경제활동 인구를 위한 여가교육, 실업자를 위한 (재)취창업교육, 현직자를 위한 향상 및 전직교육이란 삼중고를 떠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Christopher Morley의 말처럼, ‘훌륭한 삶의 삼요소로서 학습(Learning), 소득(Earning), 소망(Yearning)’이 있어야 하듯이 ‘학습, 소득,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읽힌다. 평생학습정책도 대상별, 영역별, 생애주기별로 내실화, 특성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3-6〉 경제활동 상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취업	29.8	2.8	28.3
실업	30.9	7.7	26.6
비경제활동	31.2	5.9	27.6

우리나라 성인의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참여율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500만 원 이상(38.5%)과 150만 원 미만(24.1%)의 참여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형식교육에서 저소득가구(150만 원 미만 20.0%)와 고소득가구(500만 원 이상 35.6%)의 참여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익빈 부익부는 평생학습 참여율 면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평생학습정책의 전망과 과제 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이는 데 정책 수단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이 적어도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하게는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7〉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150만 원 미만	24.1	5.4	20.0
150~300만 원 미만	25.4	2.6	23.9
300~500만 원 미만	30.7	3.7	28.8
500만 원 이상	38.5	5.1	35.6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및 광역시가 30.7%, 중소도시가 29.6%, 농어촌이 30.6%로 나타나 다행히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2.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정책적 함의

평생학습정책의 법률적 근간은 「평생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 제2장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다른 무엇보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평생교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의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정책 문건은 교육부가 9월 13일 발표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다. 이 기본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고 있으면서 향후 5년간의 정책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 시행계획의 기본을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주기를 같이하는, 때를 잘 타고 난 계획이다. 2013년 「평생교육백서」에서 별도의 장으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성격의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향후 전망과 과제 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계획부터 소개한다.

먼저 수립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지위와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민 행복지수는 OECD 조사결과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에 이어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다. 기존 제2차 계획이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지원 및 전담기구 정비와 지역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100세 시대 창조적인 평생학습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 계획은 생애주기·계층·지역에 따라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場)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은 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②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③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④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의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②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면에서는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③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④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 강화,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의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 계획이 연도별로 원만히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망 및 과제에 주안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소요예산과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정책효과를 내고, 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저학력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추가 배분해야 할 것이다. 계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은 대학과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에 대해서는 모델케이스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는 시장, 지역사회,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총론적 진단 위에 세부적인 각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정책에 있어서는 대학평생학습을 통한 2030, 4050의 취·창업에 집중하는 것도 현안 과제이기는 하나, 평생교육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개방형 평생학습대학, 지역사회 공헌형 평생학습대학, 성인친화형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되도록 촉매가 되고, 모델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학체제 개편이 교육 프로그램 추가에 우선한다. 또한 다행히 추경 확보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이 크게 증대하여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자칫 물량주의적 접근으로 비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온라인체제 구축은 실패의 사례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정보화가 추진된 지도 오래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정보화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스마트 교육체제는 온라인 교육체제든 가급적 지방과 현장 및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조기에 설립 및 안정화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평생교육협의회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대로 배치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법」 상의 추진체제인 국가·광역·기초 3수준별 행정라인, 집행라인, 심의협의라인이 수직적, 수평적 연계·통합되어 삼위일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이 최상의 사회복지이다. 평생학습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지향한다. 문해교육을 포함한 소외계층사업에 유관부처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문해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일차적 영역은 성인기초교육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면에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평생학습정책과 수준의 평생교육 행정조직 확충, 교육감 소관의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를 평생교육의 중점시설로 활용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교를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하고, 평생교육 협의회를 통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물량주의적 학습동아리 목표 설정 및 추진은 신중을 요한다.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이 평생교



육의 양 수레바퀴라는 점에서 시민교육이 다소 왜소하게 비쳐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여섯째, 계획 수립 못지않게 시행과 평가가 중요하다. 제1, 2차 기본계획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계획 수립에는 많은 노력을 쏟고, 발표 이후 시행과 성과 분석에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번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도별 정책성과 분석 마일리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국회, 학회, 시민단체에서 공개적으로 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이행 마일리지 제도에 착안하여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함께 교육부의 기본계획의 이행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평가가 이루어지면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더 담보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예산 확보 및 적정 배분의 문제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3,779억 원 소요(기존 사업의 확충 및 신규 사업 개발 등)되며,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에 1,407억 원,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에 1,094억 원,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683억 원, 지역의 창조학습 역량강화에 595억 원으로 배정되어 있다. 물론 이것도 실제 확보될지는 미지수이다. 절대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편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대부분 대학과 온오프라인 체제 구축에 소요되고 정작 평생학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과 지역에 배당되는 예산은 반도 되지 않아 대학과 온라인에 과다 투자된다(66.2%)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연도별 시행단계에서 절대액 자체가 적으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증액하고, 배분하는 데 정의 실현의 과제가 제기된다. 추진일정과 체제 면에서 주로 중앙부처,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행라인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과의 연동, 시·도교육청과의 연동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향후 과제

오늘날은 평생학습의 시대다. ‘모든 길은 평생학습으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평생학습은 보통명사, 일상어가 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개혁 이념, 교육정책을 넘어서 UNESCO, OECD, ASEM, EU, World Bank 등의 주요 문건 및 컨퍼런스의 제목으로 평생학습, 학습사회가 각광을 받는다. 학습은 어느덧 수식어가 되었다. 우리의 주변에서 학습사회, 학습조직, 학습가정, 학습마을, 학습도시, 학습경제, 학습문화, 학습기업, 학습국가, 학습계좌, 학습계약 등을 흔히 접한다. 학습의 홍수 시대다.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될 날도 멀지 않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삶의 씨줄과 날줄을 촘촘하게 엮어주는 사회가 바로 평생학습사회이다.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3대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실현하기는 지난하다. 첫째, 평생학습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모든 학교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교육개혁의 이념으로 대두되었다. 교육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의 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학교를 포함한 교육의 재구조화, 교육개혁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둘째,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교 밖의 인적자원, 단체, 여타 학습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에서 보듯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학교는 지역으로 지역은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역사회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사람들이 자기주도적학습자가 되고 자신들의 교육의 적극적인 주체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궁극적 힘은 결국 성인의 학습동기이다. 제공만으로는 결코 평생학습을 할 수 없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며, 자기주도적이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사람의 일이다. William Shakespeare가 말했듯이 “학습은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학습이 있다(Learning is but an adjunct to ourself, And where we are our learning likewise is).” 사람은 평생 그림자를 달고 다닌다. 관에 들어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사람이 사라지면 평생교육도 사라진다. 사람, 그림자, 학습의 관계가 이리하다.

2013년 「평생교육백서」의 각 장을 구성하는 내용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 이는 학습사회를 도래케 하는 필연적 요인이기도 하다. 평생학습 성장의 3대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인구변화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결과로 성인인구의 대대적 증대라는 성인인구혁명이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주민의 학력수준 향상, 여성의 역할 변화, 조기은퇴, 민권, 여가시간 증대, 생활양식 변화이다. 이를 통하여 성인교육은 필요한 것, 바람직한 것, 받아들여질 만한 것,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달성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변화, 사회혁명이 일어났다. 세 번째 요인은 기술변화와 기술폭증이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기술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기술혁명이 일어났다. 이들 세 가지 변화가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켜 평생학습사회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의 물결을 타고 나아가야 한다. 인구혁명, 기술혁명, 사회혁명은 평생학습혁명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럴 때 평생학습사회는 한 발 앞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평생학습정책의 전망과 과제의 총 결산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교육부 보도자료(2013. 9. 13).



## 백서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2013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p><b>편집위원</b></p>	<p><b>권인탁</b> (전북대학교) <b>김진화</b> (동의대학교)</p>	<p><b>송병국</b> (순천향대학교) <b>양병찬</b> (공주대학교)</p>	<p><b>이희수</b> (중앙대학교)</p>
<p><b>집필위원</b></p>	<p><b>고영상</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권인탁</b> (전북대학교) <b>강구섭</b> (한국교육개발원) <b>강성국</b> (한국교육개발원) <b>김만희</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김세화</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김인선</b> (노원평생학습관) <b>김현수</b> (한국직업능력개발원) <b>남상현</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남신동</b> (한국방송통신대학교) <b>박상옥</b> (공주대학교) <b>박진홍</b> (국가평생교육진흥원)</p>	<p><b>박형민</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박호선</b> (청주대학교) <b>서순영</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서영아</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심한식</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엄보현</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오은진</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위영은</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이경아</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이삼경</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이수희</b> (국가평생교육진흥원)</p>	<p><b>이은주</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 <b>이은주</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b>이정의</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이희수</b> (중앙대학교) <b>이현우</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임지희</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임형균</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정구헌</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정진철</b> (서울대학교) <b>최은정</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b>현영섭</b> (경북대학교)</p>
<p><b>기획실무위원</b></p>	<p><b>교육부</b> <b>최윤홍</b> (평생학습정책과) <b>이대영</b> (평생학습정책과) <b>장혜은</b> (평생학습정책과)</p>	<p><b>국가평생교육진흥원</b> <b>변종임</b> (평생교육정책본부) <b>이세정</b> (평생교육정책본부) <b>이정의</b> (평생교육정책본부) <b>위영은</b> (평생교육정책본부)</p>	<p><b>박진홍</b> (평생교육정책본부) <b>이은주</b> (평생교육정책본부) <b>임지희</b> (평생교육정책본부) <b>조민아</b> (평생교육정책본부)</p>



[제16호]

## 2013 평생교육백서

---

발행일	2014년 4월
발행인	기영화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전화	(02) 3780-9700
팩스	(02) 2070-3145
Homepage	<a href="http://www.nile.or.kr">www.nile.or.kr</a>
인쇄처	명진씨앤피 (02) 2164-3000

---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